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239-01

#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2009. 1.

연구기관: 전남대학교

농 립 수 산 식 품 부

##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월

주관연구기관명: 전 남 대 학 교

총괄연구책임자: 강 혜 정

## 차 례

---

### 제1장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 2. 선행연구 검토 ..... 5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7

### 제2장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및 활동 실태

- 1. 농촌지역 국제결혼 현황 ..... 10
-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 및 가구 특성 ..... 16
- 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활동 실태와 특징 ..... 30

### 제3장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인구 전망

- 1. 농가 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전망 ..... 48
- 2.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인구 전망 ..... 59
- 3. 향후 농업인력 구조 재편 방향 ..... 63

### 제4장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농촌 인력 활용 가능성과 당면과제

-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향후 활동 의향 및 의식조사 ..... 66
-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농촌인력 활용 가능성 ..... 75
- 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활동 제약요인과 정책수요 ..... 79

### 제5장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 1.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지원정책 현황과 당면과제 ..... 95
-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농촌 인적자원화 방안 ..... 117
- 3. 중장기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체계 정립 방안 ..... 128

참고 문헌 .....	134
부 록 1. 분석 모형 .....	135
부 록 2. 설문조사 개요 .....	138
설문조사표 .....	143

## 표 차 례

---

### 제2장

표 2-1.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 국적분포 .....	11
표 2-2. 다문화 자녀의 연령별 현황, 2008년 .....	13
표 2-3. 농촌지역(읍, 면)과 도시지역(동부)의 국제결혼 실태 .....	14
표 2-4. 2008년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수 (추계) .....	14
표 2-5. 국적별 한국거주기간 분포 .....	18
표 2-6. 국적별 연령 분포 .....	20
표 2-7. 남편과의 학력 차이 .....	21
표 2-8. 국적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과의 학력 차이 분포 .....	21
표 2-9. 국적별 학력 분포 .....	22
표 2-10. 국적별 자녀수 분포 .....	23
표 2-11. 국적별 한국어 수준 .....	24
표 2-12. 전체 경작면적 중 소유지가 차지하는 비중 .....	29
표 2-13. 주요 특성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사일 담당 정도 .....	34
표 2-14. 이주여성농업인의 시기별 하루 평균 농업노동시간 분포 .....	35
표 2-15. 이주여성농업인의 특성별 하루 평균 노동시간 .....	36
표 2-16.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 결정 요인 분석 .....	37
표 2-17. 주요 특성별 농외소득활동 여부 .....	39
표 2-18. 주요 특성별 농외소득활동 유형 .....	40
표 2-19. 주요 특성별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	44
표 2-20. 교육 프로그램별 참여율 .....	46
표 2-21. 주요 특성별 농사기술 습득 장소 .....	47

### 제3장

표 3-1. 농가 총인구의 변화 .....	49
표 3-2. 1995, 2005년 연령별, 성별 농가인구 변화 .....	51
표 3-3. 성별 연령별 장래 농가인구 추계 (2005~2020년) .....	56
표 3-4. 이주여성농업인과 다문화 자녀수 추계 .....	61
표 3-5. 농가인구에서 이주여성농업인과 다문화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	62

### 제4장

표 4-1. 농외소득활동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창업 의향 .....	69
표 4-2.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1
표 4-3.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촌거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4
표 4-4. 농업인력 활용 가능성 평가 지표들의 신뢰도 통계량 .....	77
표 4-5. 농업인력 활용 가능성 평가 항목 총계 통계량 .....	77
표 4-6. 여성결혼이민자의 주요 특성별 영농활동 애로사항 .....	82
표 4-7. 주요 특성별 농사일을 하지 않는 이유 .....	84
표 4-8. 연령대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86
표 4-9. 연령대별 교육에서 아쉬웠던 점 .....	87
표 4-10. 주요 특성별 교육 수요 .....	92
표 4-11. 영농형태별 가장 필요한 농업관련 교육 프로그램 .....	93

### 제5장

표 5-1. 중앙정부 부처의 주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	97
표 5-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필수사업/특화사업 예) .....	106
표 5-3.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황 (2006-2007) .....	112

## 그림 차례

---

### 제1장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	9
-------------------------	---

### 제2장

그림 2-1. 국제결혼 변화 추이(1990~2007) .....	11
그림 2-2.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 국적별 이혼율 변화 .....	12
그림 2-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 분포 (2007년) .....	15
그림 2-4.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 분포 (2007년) .....	15
그림 2-5. 국적 분포 .....	17
그림 2-6. 한국거주기간 분포 .....	18
그림 2-7. 연령 분포 .....	19
그림 2-8.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국내 여성농업인의 연령 분포, 2008년 .....	19
그림 2-9.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 연령 분포 .....	20
그림 2-10. 학력 분포 .....	21
그림 2-11. 자녀수 분포 .....	23
그림 2-12. 자녀연령 분포 .....	23
그림 2-13. 한국어 수준 .....	24
그림 2-14. 한국 국적 취득 현황 .....	25
그림 2-15. 생활수준 .....	26
그림 2-16. 국적별 생활수준 평가 .....	27
그림 2-1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 여부 .....	27
그림 2-18. 농가의 영농형태 .....	28
그림 2-19.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연평균 농축산물 총 판매금액 .....	28

그림 2-20. 40세 이하 여성농업인 가구의 연평균 농축산물 총 판매금액	28
그림 2-21. 조사대상 농가의 경작지 및 소유농지의 평균 규모	29
그림 2-22. 40세 이하 여성농업인 농가의 경작지 및 소유농지의 평균 규모	30
그림 2-23. 한국 거주 전 농사 경험	31
그림 2-24. 국적별 이전 농사경험 정도	31
그림 2-25. 학력별 이전 농사경험 정도	32
그림 2-26. 조사대상 가구 농사일 참여자 현황 (복수응답)	32
그림 2-27. 농사일 담당 비중	33
그림 2-2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참여하고 있는 농외소득활동 유형	39
그림 2-29. 농외소득활동 참여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월 평균 농외수입	40
그림 2-30.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	41
그림 2-31. 연령대별 지역사회활동 참여 여부	42
그림 2-32. 한국거주기간별 지역사회활동 참여 여부	42
그림 2-33.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활동 유형	42
그림 2-34. 국제결혼여성이민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43
그림 2-35.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참여한 교육 프로그램	45
그림 2-36. 농사기술 습득 장소	47

### 제3장

그림 3-1. 농가인구의 연령별 성비 변화 (1980, 1990, 2005년)	50
그림 3-2. 농가인구 구조의 변화(1980-2005년)	53
그림 3-3. 장래 농가인구 구조 변화 (2005~2020년)	57
그림 3-4. 결혼적령기 농가인구의 성비 변화 (2005~2020년)	58
그림 3-5.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농가인구구조 변화 (2020년)	65



## 제4장

그림 4-1. 향후 농사일을 하거나 지속할 의향 .....	67
그림 4-2. 국적별 영농 지속 의향 .....	67
그림 4-3. 향후 농사일을 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없는 이유(1+2순위) .....	68
그림 4-4. 농외소득활동 유형별 취업 및 창업 의향 (복수응답) .....	69
그림 4-5. 농업관 및 농업인 정체성 .....	72
그림 4-6. 향후 농촌 거주 지속 의향 .....	73
그림 4-7. 향후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	75
그림 4-8. 농사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	81
그림 4-9. 농사일을 하지 않는 이유 .....	83
그림 4-10.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	86
그림 4-11. 지금까지 참여한 교육에서 아쉬웠던 점 .....	87
그림 4-1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1순위) .....	88
그림 4-13. 25세미만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수요(1순위) .....	89
그림 4-14. 25~35세미만 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수요(1순위) .....	89
그림 4-15. 35세 이상 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수요(1순위) .....	90
그림 4-1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향후 가장 필요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1순위) .....	92
그림 4-1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농업관련 교육 프로그램 .....	93
그림 4-1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교육을 실시 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혜택 (1순위) .....	94

## 제5장

그림 5-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추진 체계 .....	104
---------------------------------	-----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1. 연구 필요성

-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20~30대 젊은 연령층 중심의 이촌향도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음. 특히 장자상속의 전통에 의한 아들 중심의 영농승계, 남아선호사상, 여성의 도시 취업 증가, 젊은 여성의 결혼 가치관 변화 등으로 젊은 연령층 중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도시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했음. 이러한 영향으로 농촌의 미혼인구의 성비불균형이 나타나 결혼 적령기에 있는 농촌의 많은 총각들이 결혼시기를 놓치고 농촌의 재생산 기능이 단절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 젊은 여성층의 이촌향도 현상뿐만 아니라 농촌의 저발전과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과중한 농업 노동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 때문에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을, 배우자로서 농업인을 선호하지 않고 있음.

- 농촌지역 남성의 비자발적 만혼 증가는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농촌사회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성 농가인구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추진되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주인구 확보 차원에서 농촌 노총각의 국제결혼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실정임.
  - 농가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사회 재생산 위기 극복의 새로운 대안으로 아시아 개도국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2007년 농림어업종사자의 국제결혼 비율이 40%가 넘었음.
- 최근 농촌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sup>1</sup>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농가 인구구성 및 농업 인력이 변화하고 있으며, 농가 및 농촌사회 구성원으로 이주여성농업인<sup>2</sup>의 중요성과 역할은 부각되고 있음.
  - 농가인구 고령화와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등의 농관련 산업과 농촌관광 등의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젊은 여성농업인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역할은 증대될 것이며 그 역할범위도 확대될 것임.
-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농업 인력의 고령화로 농업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업 현실에서, 이주여성농업인과 그 자녀들이 농촌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후계 농업 인력의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젊은 여성농업인 유입의 저조로 후계여성농업인 확보가 어려운 농촌현

<sup>1</sup> '다문화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 동안 사용하던 '국제결혼 가정', '혼혈가정', '코시안(Kosian)', '온누리안(Onnurian)'등과 같은 용어가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6년부터 바뀌서 부르는 용어임.

<sup>2</sup>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을 국제결혼여성이민자로, 이들 등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로 지칭할 것임.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는 이주여성농업인으로 규정함.

실에서 젊은 이주여성농업인은 농업 인력의 새로운 대안이며, 그 자녀들은 잠재적 영농승계자로 미래의 농업인력 세대임.

- 농촌지역의 새로운 정주인구 유입 및 농업노동인력 확보 차원에서 지역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주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중요함.
- 여성농업인의 역할변화에 따른 정책수요가 다르듯이 이주여성농업인에 대해서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농어촌정착 의지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전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단순히 복지대상자로 간주한 여성복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단계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각각 처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국제결혼 및 결혼이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중앙 및 지방 정부는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주요 정책들이 전국 또는 도단위 중심으로 전체의 국제결혼여성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농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04년 후반부터 전국적인 결혼이민자 실태파악에 착수하여, 2005년 5월 다문화가정 지원책이 대통령 지시과제로 지시하면서 결혼이민자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2005년 8월 1단계 조치로 안정적 체류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취업교육 등이 이루어졌고, 9월에는 거주(F2)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의 제도를 손질하였음.
  - 2차 대책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체계와 자녀양육 지원을, 3차 대책에는 그 당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보건복지

부, 법무부, 농림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가 총동원되어 결혼에서부터 생활적응,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는 사회통합 지원에 초점을 맞췄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전국 38곳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만들었음. 시설 이용이 힘든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일일이 가정을 찾아가 한국말을 가르치고 자녀교육을 돕는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도입하였음.

-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가 결혼여성이민자 가족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고, 2008년 9월 22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다른 부처들은 각 부처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정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음.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책에 있어서도 농촌 정착의 기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언어교육 등의 기초생활 정착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나, 기초 사회적응을 마친 이주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와 농가인구구조 변화 차원에서 다문화 후계세대의 농업 인력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은 거의 없었음. 이는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정책뿐만 아니라 인력 육성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
  -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초 사회적응 훈련을 마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중 영농희망과 정착의지가 강한 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기초영농교육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바 있음.
- 농업·농촌 인구구성 변화에 따라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인으로서의 역할과 비중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농업의 새로운 인력으로 부상한 다문화 후계세대의 능력과 활동성과에 따라 향후 농업 경쟁력과 농촌 발전은 크게 좌우될 것임. 따라서 농업인력 확보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의 세대원을 농촌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시켜, 미래의 농업인력 세대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1.2.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 후계세대 실태를 파악하고 장래농가인구 및 다문화 후계세대 인구 전망을 통해 향후 농업인력 구조 변화를 전망하여,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의 농업·농촌 인적자원화 및 맞춤형 육성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 특성 및 활동 실태 파악
  - (2) 농가인구추계를 통해 국제결혼에 따른 향후 농업인구구조 변화 전망
  - (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농촌 인적자원화 방안과 다문화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도출

## 2. 선행연구 검토

- 박재규 외(2005)는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 전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국내 적응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정착과정 및 가족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 이순형 외(2006)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지원방안」에서 강원도, 경

상도, 전라도, 충청도 농촌지역의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 이민자 166명과 남편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의 생활 및 언어, 문화, 가족, 육아, 교육, 사회 적응 문제를 분석하고, 적응 성공 사례들을 조사·발굴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 과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 한건수(2006)는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에서 총 19명의 결혼 이민자를 심층 면접조사(임실군(13명), 순창군(4명), 남원시(2명))하여 농촌지역의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겪고 있는 적응과 갈등의 양상을 분석하였음.
- 양순미(2006)는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출신의 이주여성 부부들을 면접 설문조사하여 농촌결혼여성이민자들의 실태를 제시한 바 있음
- 강혜정(2007)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와 정책과제」에서 통계청 및 문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특성,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등을 제시하고, 농촌사회 정착지원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음.
- 김이선 외(2008)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에서 2007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이 추진된 전국의 30개 지역의 서비스 이용자(여성결혼이민자) 577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가족현황, 복지실태, 정책 및 서비스 요구 등을 파악하였고, 이 지원사업의 관련자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평가 및 향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방안을 도출하였음.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3.1. 연구 내용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및 활동 실태
  - 농촌지역 국제결혼 현황
  -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인적 및 가구특성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활동 실태와 특징
  
- 농촌지역 다문화 후계세대 전망
  - 농가 인구구조 변화 전망
  -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전망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농촌 인력 활용 가능성과 당면과제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향후 활동 의향 및 의식 조사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농촌인력 활용 가능성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활동 제약요인과 정책수요
  
- 농촌의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
  -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지원정책 현황과 당면과제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농촌 인적자원화 방안
  - 중장기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체계 정립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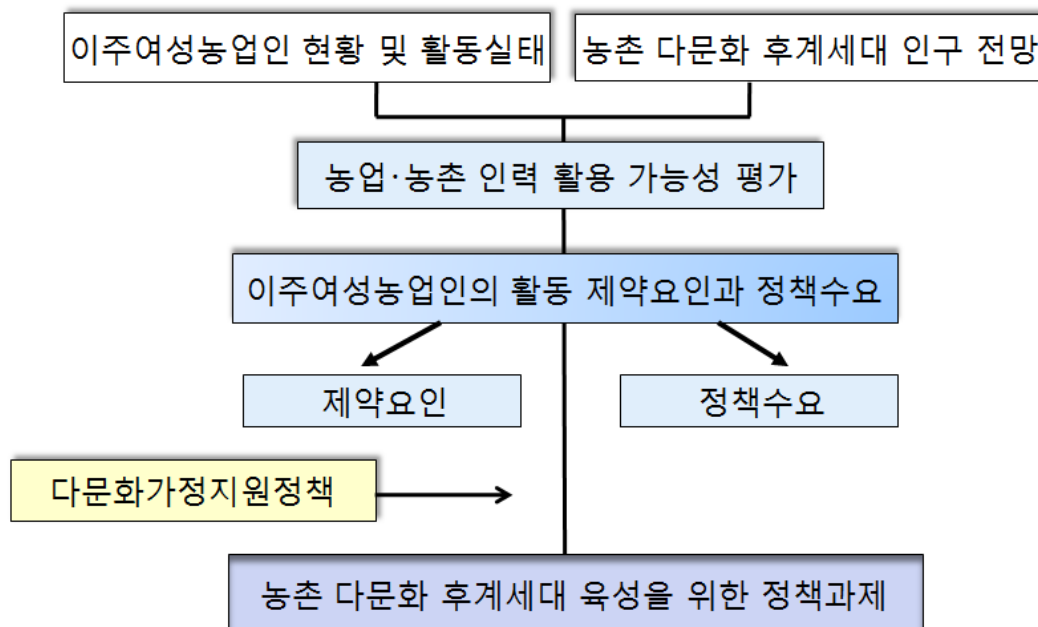


## 3.2. 연구 방법

- 선행연구 및 문헌 조사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관련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검토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 검토
  - 인구추계방법론 및 전국 장래인구추계 자료 검토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08년 11월 20일~12월 22일
  - 설문대상: 2008년 11월 1일 현재 전국의 농가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여성이민자 중 남편이 농업인인 여성 402명
  - 표본설계: 본 조사의 표본조사지점은 행정안전부의 전국의 국내 거주 이주자 통계 자료 중 국제결혼여성 이주자 및 혼인귀화자를 모집단으로 이용함. 전국 16개 시·도 중 농가수가 극히 적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도를 1차 추출단위로 하여 군지역 및 도·농 복합시 내 국제결혼여성이민자 분포를 파악한 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함. 조사대상은 표본조사지점 → 표본조사지점 내 전체 농가 → 국제결혼여성 이민자가 있는 농가 → 남편이 농업인인 국제결혼여성 이민자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음(부록 2 참조).
  
- 통계 및 계량 분석
  - 장래 농가인구 및 다문화 후계세대 전망을 위해 인구추계모형 적용
  - 설문조사 자료의 통계제표분석 및 계량분석(토빗모형, 로짓모형)

- 정책담당자 설문조사
  - 2008년 ‘이주여성농업인 기초영농교육’ 시범사업을 담당 기관의 담당자 대상 면담조사
  - 영농교육의 애로사항,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 잠재능력 발굴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정책담당부서, 국제결혼여성이민자 연구 전문가, 여성농업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 결과 발표 및 정책과제 도출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 제 2 장

---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및 활동 실태

- 제 2장에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을 살펴본 후, 남편이 농업인인 여성결혼이민자 402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에 나타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특성 및 활동영역별 실태를 살펴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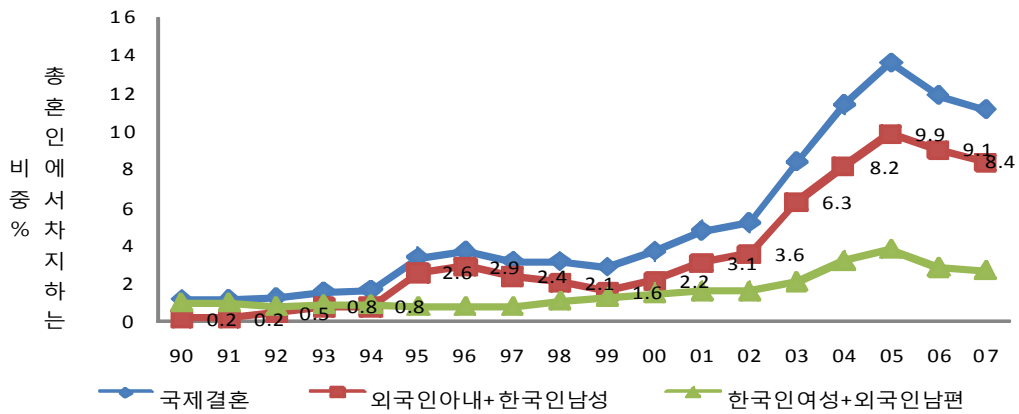
#### 1. 농촌지역 국제결혼 현황

##### 1.1. 국제결혼 현황

-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2000년 7,304건에서 2007년 29,140건으로 지난 8년 동안 약 4배 증가하였음.
  -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건수는 2005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5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나타냄.

- 2007년 국적별 국제결혼여성이민자 수는 중국 14,526명(49.8%), 베트남 6,611명(22.7%), 캄보디아 1,804명(6.2%), 일본 1,665명(5.7%) 등
- 200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던 베트남 여자와의 혼인이 2007년에는 전년보다 34.7% 감소하였고, 반면 캄보디아는 전년보다 357.9%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그림 2-1. 국제결혼 변화 추이(1990~2007)



자료: 통계청, 「2007년 혼인통계 결과」

표 2-1.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 국적분포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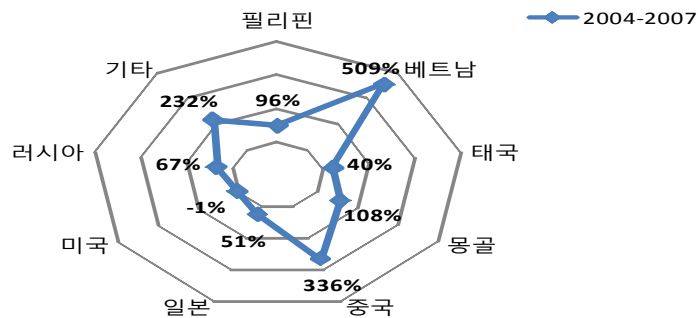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	
									비율	전년대비 증감률
중 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14,608	14,526	49.8	-0.6
베트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0,131	6,611	22.7	-34.7
캄보디아	*	*	*	19	72	157	394	1,804	6.2	357.9
일 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1,484	1,665	5.7	12.2
필리핀	1,358	510	850	944	964	997	1,157	1,531	5.3	32.3
몽 골	77	118	195	318	504	561	594	745	2.6	25.4
태 국	270	185	330	346	326	270	273	531	1.8	94.5
미 국	235	265	267	323	344	285	334	377	1.3	12.9
기 타	552	817	899	1,246	1,171	1,198	1,233	1,350	4.6	9.5
계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100.0	-3.5

자료: 통계청, 「2007년 혼인통계 결과」

주: \*는 기타에 포함되었음.

-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2002년 401건에서 2007년 5,794건으로 지난 6년간 14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07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이혼건수는 중국 3,665건, 베트남 895건, 필리핀 220건, 일본 219건 순으로 나타남.
  - 중국인 처는 타국에 비해 혼인누적건수가 많아(2000~2007년까지 국제 혼인 누적건수의 60.7%를 차지), 이혼 비중도 높게 나타남.
- 2004년 대비 2007년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 이혼 변화율은 베트남(509%), 중국(336%), 캄보디아를 포함한 기타(232%) 등의 순으로 높았음.
  -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젊은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단적으로 나타냄.

그림 2-2.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 국적별 이혼율 변화  
(2004년 대비 2007년 변화율)



자료: 통계청, 「2007년 이혼통계 결과」

- 다문화가정 자녀는 2008년 58,007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6.5%이며, 2007년 44,258명 보다 13,749명 증가하였음('07년 대비 31% 증가).
  - ('06) 25천명 → ('07) 44천명 → ('08) 58천명

- 2008년 국제결혼이민자 자녀 중 만 6세 미만이 57.1%로 절반이상이 미취학 영유아이며, 12세 이하가 전체의 89.3%를 차지함.
  -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한 시점이 5년 정도뿐이 지나지 않아 아직 취학 전 다문화 자녀들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15년 후에는 다문화 후계세대의 사회활동이 본격화될 것임.

표 2-2. 다문화 자녀의 연령별 현황, 2008년

구분	계	만 6세 미만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자녀수(명)	58,007	33,140	18,691	3,672	2,504
비율(%)	100	57.1	32.2	6.3	4.3

자료: 행정안전부, 2008. 7.

## 1.2. 농촌의 국제결혼 현황

- 전체 혼인에서 외국 여자와의 혼인 비중은 농촌지역(13.5%)이 도시지역(7.3%)보다 높게 나타남. 그러나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건수는 도시지역(동부)이 19,762건으로 농촌지역(읍·면)의 8,033건보다 많음.
- 2007년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7,930명 중 40.0%에 해당하는 3,172명이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혼인하였음.
  - 농촌지역(읍·면) 혼인 남자 중 10.0%가 농림어업 종사자이며, 그 중 44.5%가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혼인하였음.
  - 2007년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혼인한 농림어업종사 남성은 2006년에 비해 10% 감소하였음.

표 2-3. 농촌지역(읍, 면)과 도시지역(동부)의 국제결혼 실태

구 분	혼인 건수 (A)	한국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자의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건수 (B)	구성비 (B/A)	건수 (C)	구성비 (C/A)	건수 (D)	구성비 (D/C)	
2006년	계*	332,752	30,208	11.9	8,596	2.6	3,525	41
	동부	256,318	19,889	7.8	1,767	0.7	521	29.5
	읍면부	58,383	8,746	15	6,481	11.1	2,991	46.2
2007년	계*	345,592	29,140	11.1	7,930	2.3	3,172	40
	동부	270,980	19,762	7.3	1,699	0.6	515	30.3
	읍면부	59,701	8,033	13.5	5,953	10	2,651	44.5

주: \* 국외 및 미상 포함.

자료: 통계청, 「2007년 혼인통계 결과」

- 2008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28,240명으로 추계됨.
  - 군 지역(86군)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수: 17,294명
  - 도농복합시 지역(54시)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수: 10,946명

표 2-4. 2008년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수 (추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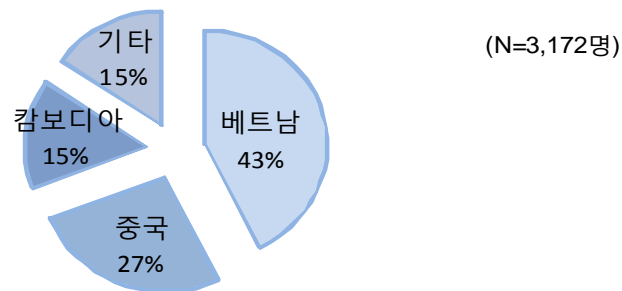
시도별	농촌시군 수 (군+복합시)	이민자 합계(A=B+D)	군 지역 (B)	복합시 지역(C)	농촌인구 분포 (D=C×0.35)
5대광역시	5	1,258	1,258	-	-
경기도	15	4,661	1,011	10,428	3,650
강원도	15	2,084	1,539	1,558	545
충청북도	11	2,398	2,111	821	287
충청남도	16	3,462	2,297	3,328	1,165
전라북도	13	2,503	1,696	2,307	807
전라남도	21	4,219	3,573	1,846	646
경상북도	23	3,402	1,841	4,460	1,561
경상남도	19	3,865	1,968	5,421	1,897
제주도	2	387	-	1,106	387
계	140	28,240	17,294	31,275	10,946

주: 도농복합시의 농촌 인구 비율은 전체 시인구의 35%로 추정

자료: 행정안전부, 2008,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 2007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혼인한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 국적은 베트남(43%), 중국(27%), 캄보디아(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베트남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는 2006년 2,394명에서 2007년 1,353명으로, 43% 감소하였음. 최근 베트남 정부가 매매혼 비난 여론을 의식해 국제결혼 심사를 강화한 점도 이런 감소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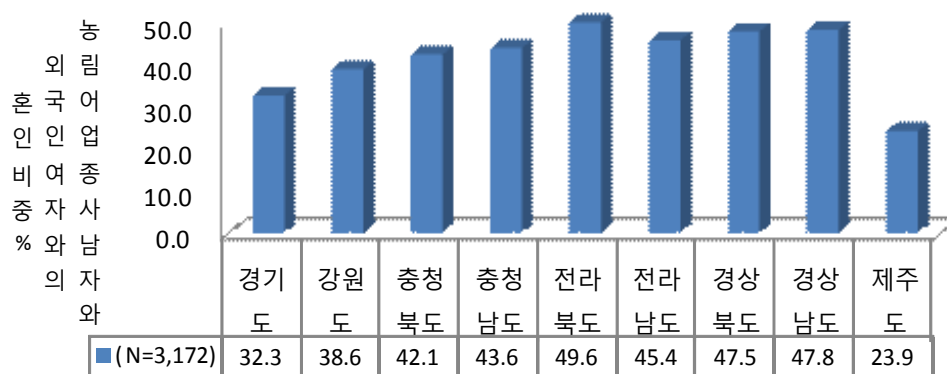
그림 2-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 분포 (2007년)



자료: 통계청, 「2007년 혼인통계 결과」

- 2007년 농림어업종사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율이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49.6%), 경상남도(47.8%), 경상북도(47.5%), 전라남도(45.4%) 등의 순

그림 2-4.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 분포 (2007년)



자료: 통계청, 「2007년 혼인통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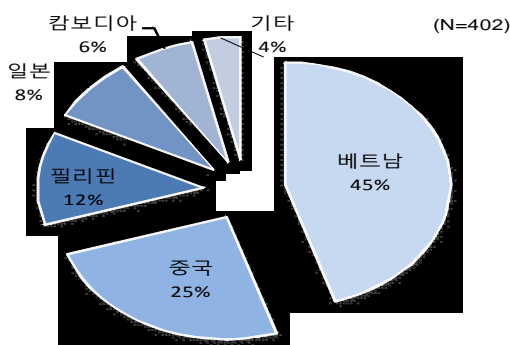
## 2.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인적 및 가구특성

- 2008년 11월 20일 ~ 12월 17일 전국의 농가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여성 이민자 중 남편이 농업인인 이주여성 402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를 중심으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 및 가구특성을 파악함.
  - 통계청의 혼인통계에 농촌(읍, 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 인적특성이 조사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남편이 농업인인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통계자료는 미흡하여, 표본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인과 혼인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를 파악함.
  - 본 연구에서 이용한 통계는 설문대상의 특성상 전국 평균자료와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향후 종사 가능성이 높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 및 가구특성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됨.

### 2.1. 인적특성

-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 분포는 베트남 45%, 중국 25%, 필리핀 12%, 일본 8%, 캄보디아 6%, 기타 4%로 나타났음. 기타 국적에는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러시아, 미얀마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2-5. 국적 분포



-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거주기간을 살펴보면, 3년 미만이 34.6%, 3~5년이 29.9%, 5~7년이 10.7%, 7년 이상이 24.9%로 나타남.
  - 캄보디아 출신 여성이민자의 78.3%, 베트남 출신 여성이민자의 50.9%가 3년 미만이며, 일본 출신의 94.1%, 필리핀 출신의 51.0%, 중국 출신의 40.6%<sup>3</sup>가 7년 이상의 한국거주기간을 나타내고 있음. 즉,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여성이민자의 한국거주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편임.
  - 캄보디아,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은 국제결혼중매업체를 통해 최근 3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반면<sup>4</sup>, 일본, 필리핀 등의 여성과의 혼인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을 통해 이전부터 있었음<sup>5</sup>.

<sup>3</sup>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지자체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한국인 남성과 중국의 조선족 여성 간의 국제결혼이 증가하였음.

<sup>4</sup>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2007년 5월 말 8개도 60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 중임)과 국제결혼중매업체의 적극적인 상술로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였음.

<sup>5</sup> 통일교는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농촌총각과 대체로 학력수준이 높은 일본여성간의 국제결혼을 추진해 옴. 최근에는 필리핀, 태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음.

그림 2-6. 한국거주기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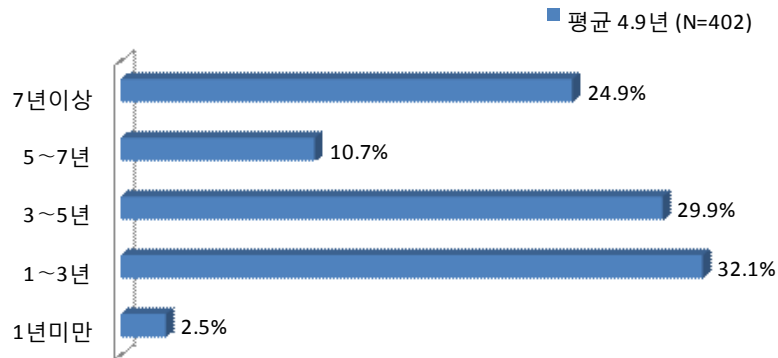


표 2-5. 국적별 한국거주기간 분포

단위: %

	1년 미만	1~3년	3~5년	5~7년	7년 이상	합계
베트남	3.9	47.0	39.2	9.4	0.6	100
중국	1.0	14.9	32.7	10.9	40.6	100
필리핀	4.1	12.2	18.4	14.3	51.0	100
일본	0.0	2.9	0.0	2.9	94.1	100
캄보디아	0.0	78.3	21.7	0.0	0.0	100
기타	0.0	28.6	14.3	50.0	7.1	100
합계	2.5	32.1	29.9	10.7	24.9	100

-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분포는 25세미만 35.1%, 25~35세 34.8%, 35~45세 20.6%, 45세 이상 9.3%로 나타났다. 70%가 35세 미만으로 매우 젊은 여성들임.
  -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국내 여성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62세이며, 39세 이하 여성농업인은 2.8%에 불과함.

그림 2-7.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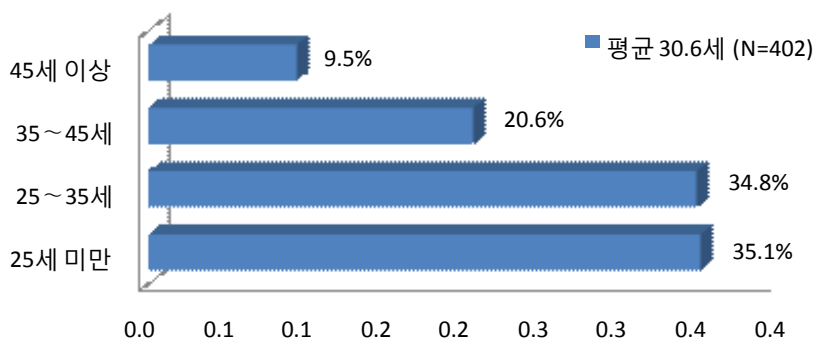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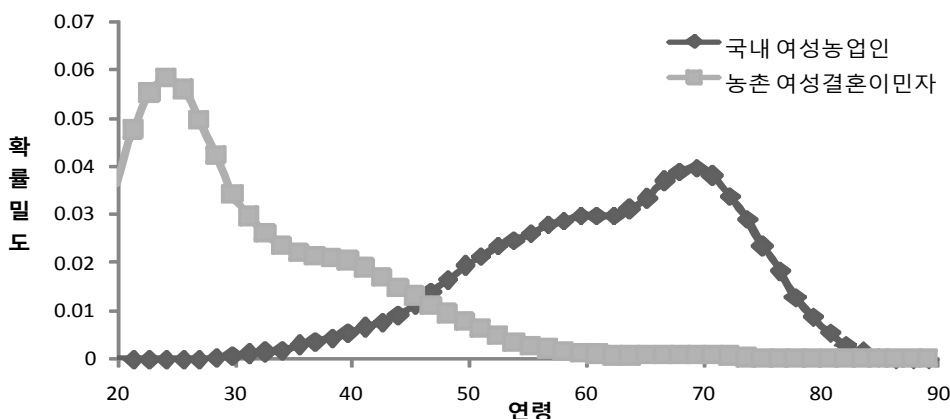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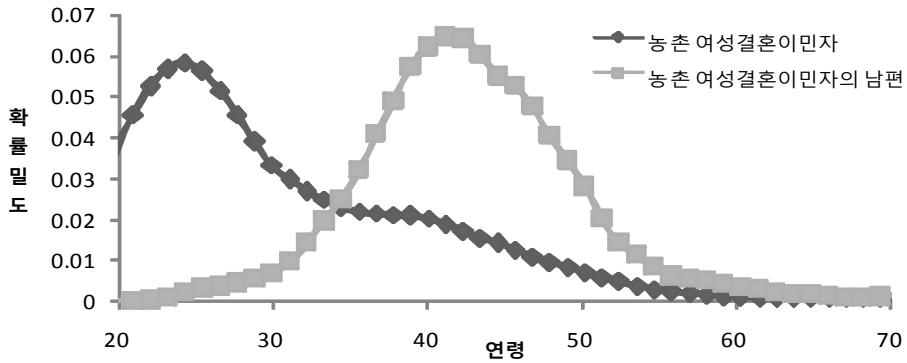
그림 2-8.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국내 여성농업인의 연령 분포, 2008년



주: 연령분포는 비모수적 커널밀도함수(kernel density function)로 추정되었음.  
 자료: 국내 여성농업인 연령분포 자료는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이용

-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연령 분포에서 부인과 남편간의 연령 차이가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음. 부인의 연령 분포는 25세 주변에서 확률밀도가 가장 높으며, 남편의 연령 분포에서는 40대 연령층의 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간 연령 차이는 평균 12.6살이며,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와 이들 남편간의 연령 차이는 평균 14살로 가장 많고, 일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간 연령 차이는 평균 8살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그림 2-9.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 연령 분포



주: 연령분포는 비모수적 커널밀도함수(kernel density function)로 추정되었음.

- 캄보디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73.0%,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61.3%가 25세 미만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더 젊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일본 출신 여성이민자의 97%가 35세 이상으로 다른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보다 평균 연령이 높은 편임.
  - 국적별 연령 분포는 국적별 한국거주기간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표 2-6. 국적별 연령 분포

단위: %

	25세 미만	25~35세	35~45세	45~55세	55세 이상	합계
베트남	61.3	37.0	1.7	0.0	0.0	100.0
중국	4.0	32.7	37.6	18.8	6.9	100.0
필리핀	14.3	46.9	30.6	8.2	0.0	100.0
일본	0.0	2.9	73.5	23.5	0.0	100.0
캄보디아	73.9	26.1	0.0	0.0	0.0	100.0
기타	14.3	71.4	14.3	0.0	0.0	100.0
합계	35.1	34.8	20.6	7.7	1.7	100.0

-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57%가 고졸이상의 학력수준으로 국내 여성농업인의 평균 학력과 비교해 높은 학력수준을 나타냄.
  -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여성농업인의 평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며, 고졸이상은 전체 여성농업인의 11%임.

- 전체 응답자의 34.6%가 남편보다 학력수준이 높으며, 30%는 남편과 학력수준이 같다고 응답함.
-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남편 학력이 본인보다 더 높은 경우가 50.3%이고, 반면 필리핀, 일본 출신의 경우는 본인 학력이 남편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가 각각 90%와 97%로 남편보다 학력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남.

그림 2-10. 학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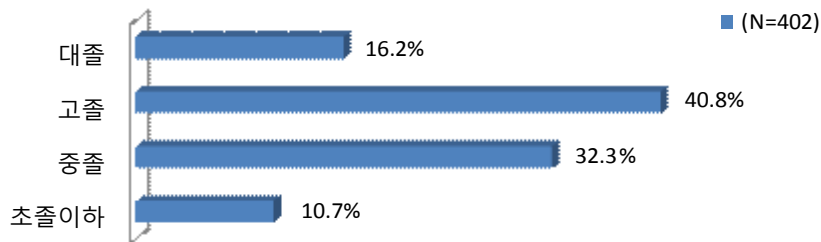


표 2-7. 남편과의 학력 차이

	사례수(명)	비율(%)
부인 학력이 더 높음	139	34.6
남편과 부인의 학력이 같음	121	30.1
남편 학력이 더 높음	142	35.3
합 계	402	100

표 2-8. 국적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과의 학력 차이 분포

단위: %

	부인 학력이 더 높음	남편과 부인의 학력이 같음	남편 학력이 더 높음	합계
베트남	20.4	29.3	50.3	100
중국	37.6	27.7	34.7	100
필리핀	63.3	26.5	10.2	100
일본	61.8	35.3	2.9	100
캄보디아	21.7	43.5	34.8	100
기타	42.9	35.7	21.4	100

-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65.3%, 일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41.2%가 대졸 학력으로 필리핀, 일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더 학력 수준이 높은 나타남. 반면 베트남 출신 여성이민자의 63.6%, 캄보디아 출신의 52.1%가 중졸이하로 다른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보다 학력 수준이 낮은 편임.

표 2-9. 국적별 학력 분포

단위: %

	초졸	중졸	고졸	대졸	합계
베트남	15.5	48.1	34.8	1.7	100
중국	11.9	27.7	49.5	10.9	100
필리핀	4.1	0.0	30.6	65.3	100
일본	0.0	2.9	55.9	41.2	100
캄보디아	4.3	47.8	47.8	0.0	100
기타	0.0	21.4	42.9	35.7	100
합계	10.7	32.3	40.8	16.2	100

- 자녀수가 1명인 경우가 42.3%로 가장 많고, 87.3%가 2명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의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가 각각 64.7%와 55.3%로 높은 반면, 일본 출신 여성이민자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가 55.3%로, 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평균 연령은 5.7세이며, 63%가 6세 미만의 미취학 영유아임.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여성이민자 자녀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여성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더 젊고, 한국거주기간이 짧다는 사실과 연계되어 있음.

그림 2-11. 자녀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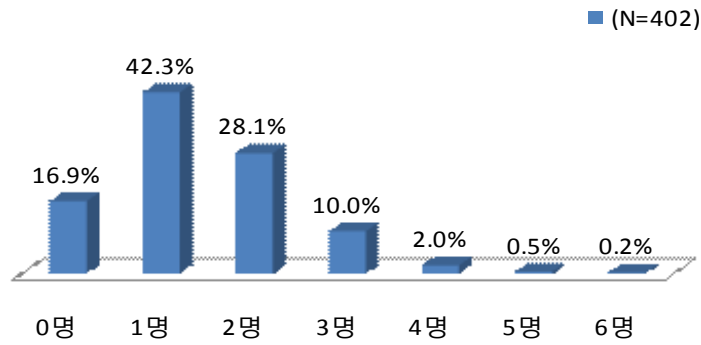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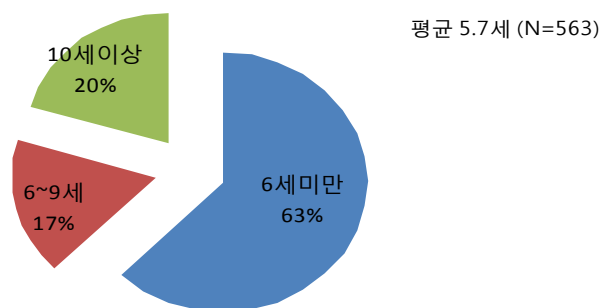


표 2-10. 국적별 자녀수 분포

단위: %

	0명	1명	2명	3명 이상	합계
베트남	17.3	55.3	20.7	6.7	100
중국	22.0	31.0	38.0	9.0	100
필리핀	13.2	35.8	37.7	13.2	100
일본	13.2	10.5	21.1	55.3	100
캄보디아	11.8	64.7	23.5	0.0	100
기타	6.7	40.0	40.0	13.3	100
합계	16.9	42.3	28.1	12.7	100

그림 2-12. 자녀연령 분포





-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53%가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46%가 보통, 1%가 못한다고 하였음.
  - 캄보디아 출신의 73.9%, 베트남 출신의 63.5%가 보통이하라고 응답한 반면, 일본 출신의 79.4%, 중국 출신의 76.2%는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즉, 한국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은 낮으나, 거주 기간이 길고, 같은 한자 문화권인 일본과 조선족이 대다수인 중국 출신 여성이민자의 한국어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3. 한국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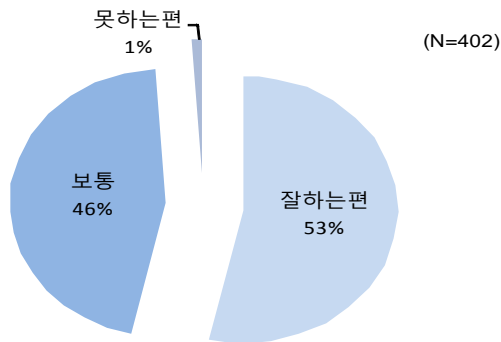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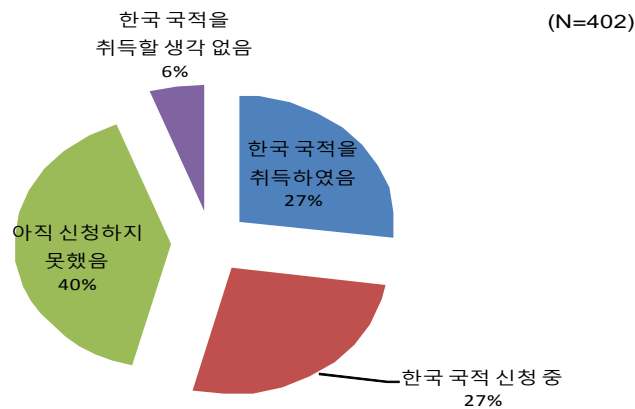
표 2-11. 국적별 한국어 수준

단위: %

	잘하는 편	보통	못하는 편	합계
베트남	36.5	61.3	2.2	100
중국	76.2	23.8	0.0	100
필리핀	65.3	34.7	0.0	100
일본	79.4	20.6	0.0	100
캄보디아	26.1	73.9	0.0	100
기타	50.0	50.0	0.0	100
합계	53.5	45.5	1.0	100

-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40%가 아직 한국국적을 신청하지 못한 상태이며, 27%는 국적 신청 중, 27%는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국적 취득 현황은 한국거주기간과 연계되어 있어,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여성이민자의 국적 취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그림 2-14. 한국 국적 취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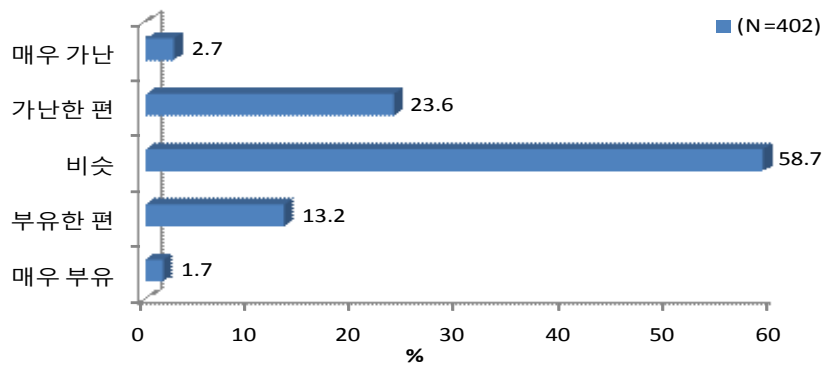


-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 특징을 요약하면,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는 최근 3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한국 거주기간이 짧고, 연령이 낮으며, 학력수준도 낮은 편임. 반면, 종교에 의해 혼인한 경우가 많은 일본,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는 상대적으로 한국거주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으며, 학력수준이 높은 편임. 특히 일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거주기간이 가장 길며, 자녀수도 가장 많은 편임. 베트남 출신 다음으로 많은 표본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는 조선족이 많아 한국어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2. 가구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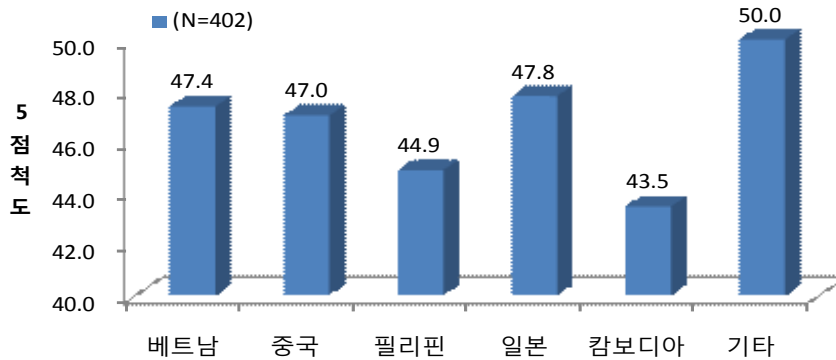
-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생활수준을 같은 지역에 사는 다른 농가들과 비교해 볼 때, 58.7%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26.3%는 가난 또는 매우 가난한 편, 14.9%는 부유 또는 매우 부유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가난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부유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열악한 다문화가정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15. 생활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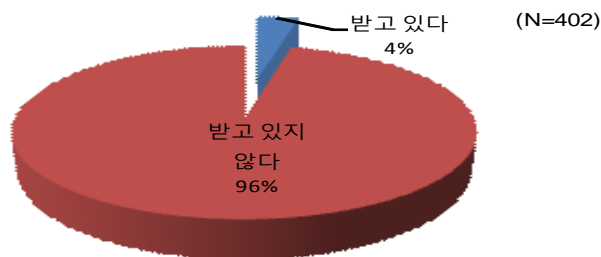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평가한 생활수준을 5점 척도로 나타내면, 일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본인 가정 생활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출신이 가장 낮다고 응답하였음.
  - 조사대상 전체의 4%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47%가 베트남, 40%는 중국출신임.
  - 생활수준이 가난하다고 평가한 가구 수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 다문화가정 빈곤에 대한 정책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6. 국적별 생활수준 평가



주: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고,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음.

그림 2-1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 여부



- 조사대상 농가의 지난 1년간 판매금액이 가장 큰 작물로 규정되는 주영농 형태는 논벼가 61.7%, 채소 14.4%, 일반 밭작물 8.7%, 축산 6.2%, 과수 6.0%, 특용작물 2% 등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 농가의 연평균 농축산물 판매액은 500만원 미만이 3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76%를 차지함.
  -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40세 이하 국내 여성농업인이 속한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액 분포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이 52%를 차지하여,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액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즉, 비슷한 연령대 국내 여성농업인보다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농가수입 수준이 더 낮은 편임.

그림 2-18. 조사대상 농가의 영농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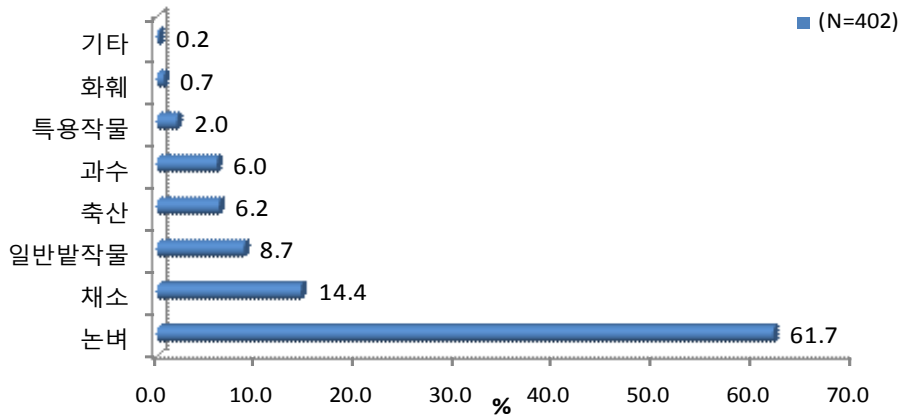


그림 2-19.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연평균 농축산물 총 판매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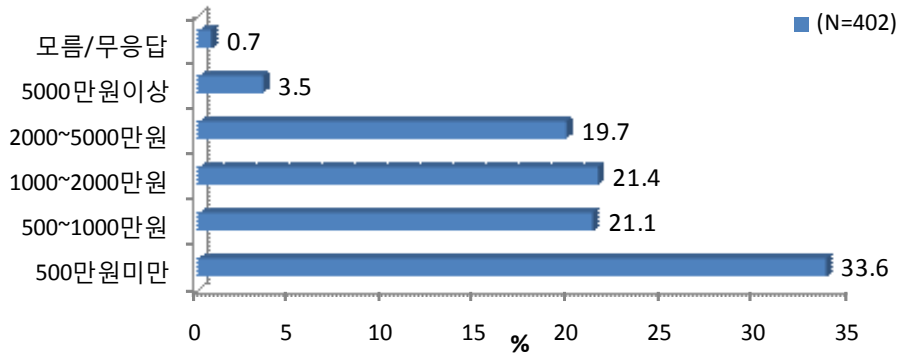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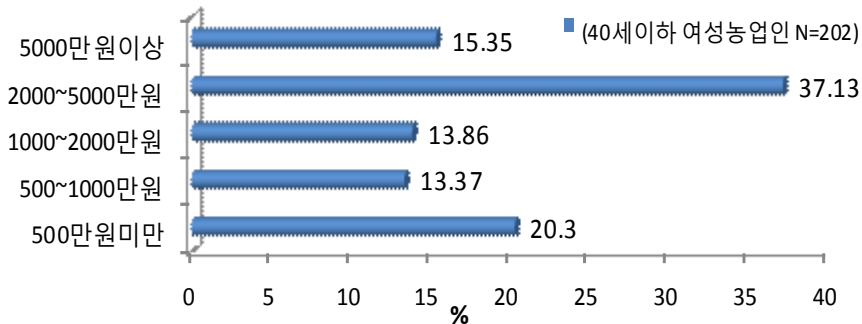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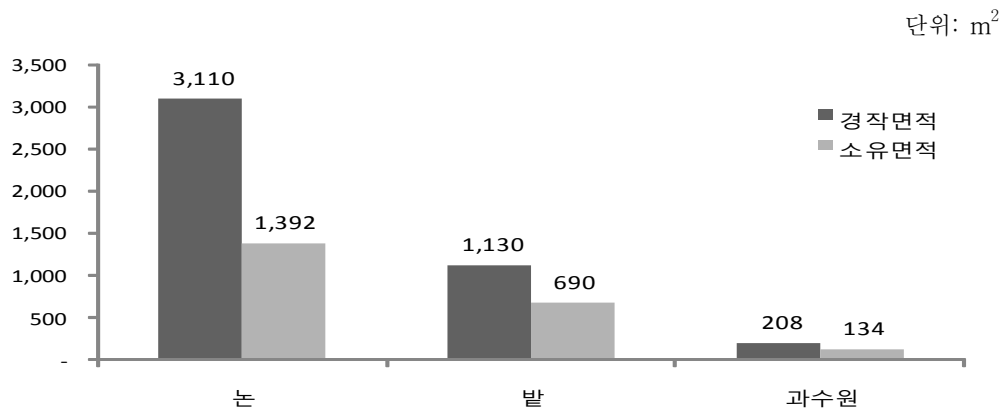
그림 2-20. 40세 이하 여성농업인 가구의 연평균 농축산물 총 판매금액



자료: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조사대상 전체 402가구의 평균 경작면적은 논 3,110  $m^2$ , 밭 1,130  $m^2$ , 과수원 208  $m^2$ 임. 전체 경작지에서 소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논, 밭, 과수원의 경우 각각 63%, 75%, 67%로 나타났음.
  - 40세 이하 국내 여성농업인이 속한 가구의 평균 논, 밭, 과수원 면적은 각각 12,508  $m^2$ , 6,022  $m^2$ , 1,313  $m^2$ 으로, 조사대상 여성결혼이민자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 및 소유면적은 40세 이하 여성농업인 농가의 평균규모와 비교하여 매우 영세함을 알 수 있음.

그림 2-21. 조사대상 농가의 경작지 및 소유농지의 평균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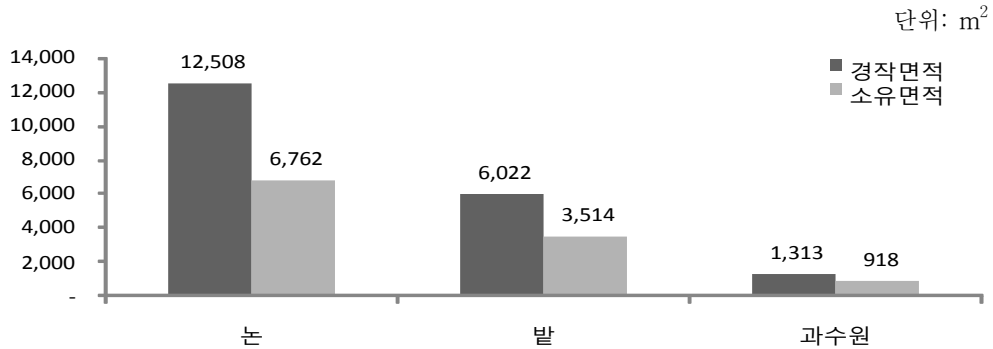


주: 전체 402농가를 대상으로 한 경지면적 평균값은 농지가 없는 가구도 포함하여 산출

표 2-12. 전체 경작면적 중 소유지가 차지하는 비중

	논	밭	과수원	전체 농지
소유면적/경작면적(%)	63.4	75.0	67.4	66.3
사례수(명)	333	281	41	398

그림 2-22. 40세 이하 여성농업인 농가의 경작지 및 소유농지의 평균 규모



자료: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활동 실태와 특징

- 2008년 11월 20일 ~ 12월 17일 전국의 농가에 거주하는 남편이 농업인인 여성결혼이민자 4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영농활동, 농외소득활동, 지역사회활동 등 활동영역별 실태와 교육 참여 실태를 살펴볼 것임.

#### 3.1. 영농활동 실태

- 조사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66%가 한국에 오기 전에 본국에서 농사를 지어 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절반이상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영농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일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94%가 전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나 가장 그 비율이 높으며, 다음이 중국, 필리핀 출신 등의 순임. 반면, 캄보디아 출신의 약 70%가 농사 경험이 있으며, 26.1%는 많다고 응답하였음. 즉, 캄보디아, 베트남 등 농업국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사 경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의 농업인력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대체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대졸 여성결혼이민자의 78.5%가 농사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반면, 초졸 이하 여성결혼이민자의 35.8%는 농사 경험이 많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2-23. 한국 거주 전 농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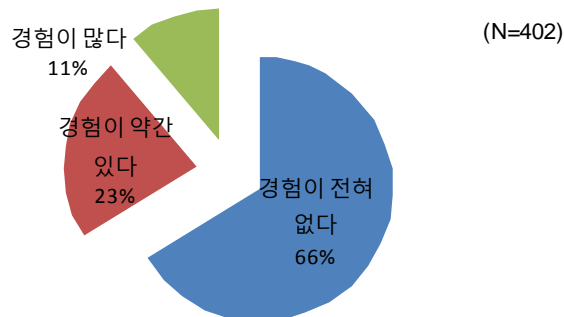


그림 2-24. 국적별 이전 농사경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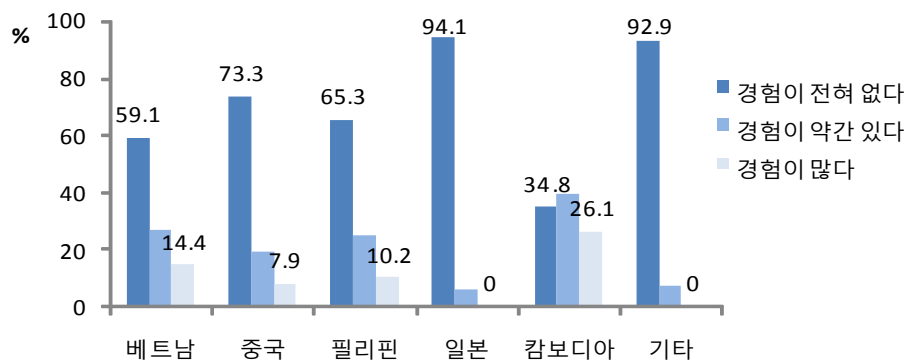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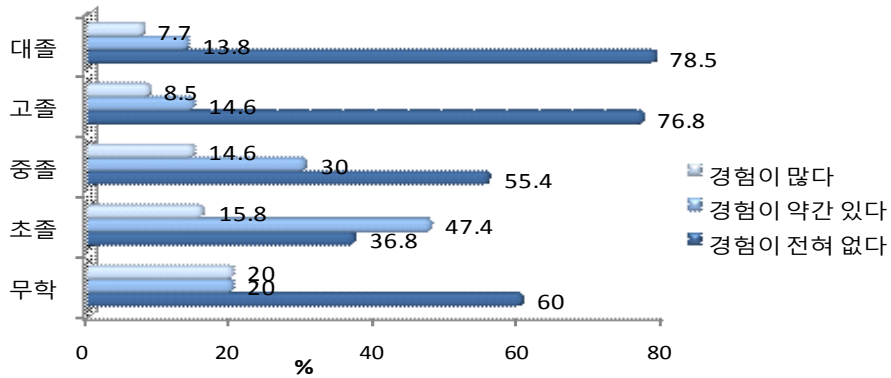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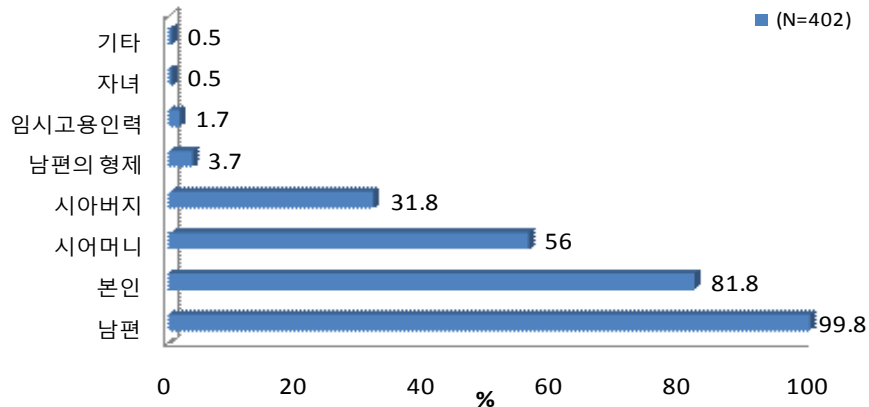


그림 2-25. 학력별 이전 농사경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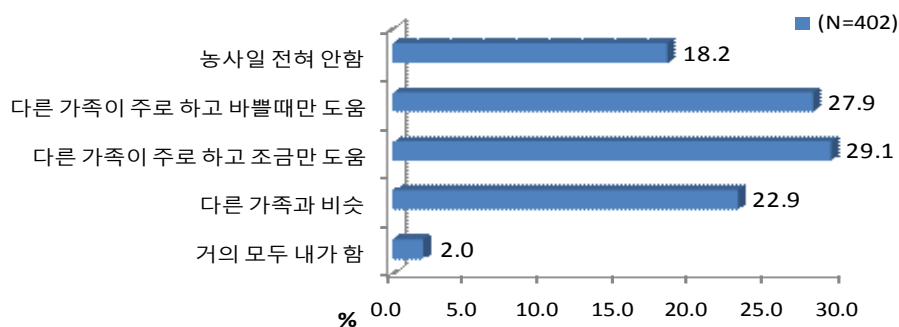
-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81.8%가 현재 집안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본인 이외 농사일에 참여하는 가족은 남편 99.8%, 시어머니 56%, 시아버지 31.8% 등임.
  - 본 조사의 설문대상을 남편이 농업인인 여성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으므로, 비농업인과 혼인한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평균보다 농사일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 편임.

그림 2-26. 조사대상 가구 농사일 참여자 현황 (복수응답)



-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집안 농사일 담당 정도는 ‘다른 가족이 주로 하고 조금만 돕는다’는 29.1%, ‘다른 가족이 주로 하고 바쁠 때만 돕는다’는 27.9%라고 응답하여, 57%가 집안 농사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2.9%가 다른 가족과 비슷하게 한다고 응답하여, 조사대상의 1/4 여성결혼이민자가 공동경영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림 2-27. 농사일 담당 비중



- 일본 출신의 경우 전혀 농사일을 하지 않는 비율이 29.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캄보디아 출신 21.7%임.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들은 한국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농사일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사일을 전혀 안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거의 모두 내가 하거나 다른 가족과 비슷하게 농사일을 담당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이는 20대, 30대 초반에는 임신 및 출산과 육아 등의 집안일로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힘들어, 단순히 바쁠 때 조금 도와주는 정도만 하다가 자녀 취학 이후 본격적으로 농사일에 관여하여 담당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거주기간이 3년이 지난 후부터는 대체로 거주기간이 긴 여성결혼이민자일수록 농사일을 더 많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1~3년 미만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25.6%가 전혀 농사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임신, 출산 등 때문으로 판단됨. 그러나 7년 이상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도 14%가 전혀 농사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임신 이외 자녀 교육, 집안일 증가, 그리고 농촌사회에 점차 적응이 되어 농외활동이 증가한 이유 때문이라고 추측됨.

- 채소, 과수, 특용작물 농가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사일 담당정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3. 주요 특성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사일 담당 정도

단위: %

	사례수 (명)	거의 모두 내가	다른 가족과 비슷	조금만 도움	바깥에만 도움	농사일 전혀 안함
<b>■국적별■</b>						
베트남	181	2.2	18.8	27.6	31.5	19.9
중국	101	2	35.6	33.7	17.8	10.9
필리핀	49	2	24.5	34.7	26.5	12.2
일본	34	0	17.6	17.6	35.3	29.4
캄보디아	23	4.3	13	26.1	34.8	21.7
기타	14	0	7.1	28.6	28.6	35.7
<b>■연령별■</b>						
25세미만	141	2.1	17.7	30.5	29.1	20.6
25~35세	140	2.1	16.4	30	31.4	20
35~45세	83	1.2	36.1	21.7	24.1	16.9
45~55세	31	3.2	32.3	41.9	16.1	6.5
55세이상	7	0	57.1	14.3	28.6	0
<b>■한국거주기간■</b>						
1년미만	10	0	20	10	50	20
1~3년	129	0.8	11.6	30.2	31.8	25.6
3~5년	120	2.5	24.2	34.2	23.3	15.8
5~7년	43	2.3	23.3	37.2	25.6	11.6
7년이상	100	3	36	20	27	14
<b>■영농형태■</b>						
논벼	248	1.2	17.3	29.4	33.1	19
과수	24	0	37.5	41.7	8.3	12.5
채소	58	3.4	44.8	15.5	27.6	8.6
화훼	3	0	33.3	0	33.3	33.3
일반밭작물	35	2.9	17.1	37.1	17.1	25.7
특용작물	8	12.5	0	50	12.5	25
축산	25	4	24	32	16	24

- 농업시기별<sup>6</sup>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 배분 특징을 살펴보면, 농번기에도 19.7%는 전혀 농업노동을 하지 않았으며, 37.5%는 4시간 이하, 31.4%는 5-9시간이하 농업노동을 하고 있었음. 10시간 이상 농업을 하는 이주여성농업인은 11.3%이었음.
  - 농한기는 80.9%의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을 하지 않았고, 16.5%는 4시간 이하의 농업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38.7%의 여성농업인이 5-9시간, 35.5%는 4시간 이하 농업노동을 하였음.

표 2-14. 이주여성농업인의 시기별 하루 평균 농업노동시간 분포

단위: 명(%)

		하지않음	4시간이하	5-9시간	10-14시간	15시간이상	계
농번기/ 농한기 구분	농번기	61(19.7)	116(37.5)	97(31.4)	34(11.0)	1(0.3)	309(100.0)
	농한기	250(80.9)	51(16.5)	7(2.3)	1(0.3)	-	309(100.0)
농번기/농한기 구분없음		17(18.3)	33(35.5)	36(38.7)	7(7.5)	-	93(100.0)

- 농번기/농한기 구분이 있는 경우, 하루 평균 농업노동시간은 농번기에는 4시간 18분이며, 농한기에는 하루 평균 30분으로 나타났음.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는 하루 평균 4시간 18분을 농업노동에 투입하고 있음.
  - 연령대별로는 농번기의 경우 55세 이상이 하루 평균 7시간을 농업노동에 투입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농업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25-35세는 3시간 42분으로 가장 적었음.
  -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농업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음.

<sup>6</sup> 조사대상자의 23.1%는 농가에서 주로 하는 농업에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76.9%는 구분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2-15. 이주여성농업인의 특성별 하루 평균 노동시간

단위: 시간:분

	농번기/농한기 구분 있음						농번기/농한기 구분 없음(N=93)		
	농번기(N=309)			농한기(N=309)			농사	농사 이외 소득 있는 일	가사
	농사	농사 이외 소득 있는 일	가사	농사	농사 이외 소득 있는 일	가사			
전체	4:18	1:00	4:06	0:30	1:06	4:36	4:18	0:48	3:54
■ 연령별 ■									
25세 미만	4:00	0:30	3:54	0:24	0:36	4:30	3:24	1:00	3:48
25-35세	3:42	0:48	4:12	0:18	0:48	4:42	4:06	0:18	3:54
35-45세	5:00	1:30	4:36	0:48	1:30	5:12	5:06	1:00	3:54
45-55세	5:36	1:48	3:42	1:00	2:18	4:00	5:54	1:48	3:42
55세 이상	7:00	4:18	2:00	0:54	4:18	2:18			
■ 한국거주기간 ■									
1년 미만	2:48	0:00	3:24	0:30	0:00	3:30	1:30	0:00	4:00
1 - 3년	3:18	0:24	4:06	0:12	0:18	4:30	3:30	0:18	3:48
3 - 5년	4:24	0:54	4:00	0:36	1:00	4:48	4:06	0:42	4:00
5 - 7년	5:18	0:48	4:18	0:30	1:06	4:48	3:48	1:48	3:48
7년 이상	5:12	2:06	4:12	0:48	2:18	4:42	5:30	1:06	3:54

- 토빗 모형(Tobit model)<sup>7</sup>을 이용하여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2-16>과 같음.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주여성농업인의 연령, 한국거주기간, 가사노동시간, 농외노동시간, 농사일 참여자 수, 만6세 미만 아동 유무, 이전 농사경험 여부, 경지면적, 영농형태 더미변수 등의 영향을 분석
- 이주여성농업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농업노동시간이 감소하다, 어느 임계 연령(모형I: 33세, 모형II: 36세)이 지나면 농업노동 시간이 증가함.
  - 한국거주기간이 증가하면 농업노동시간이 증가하다, 어느 임계기간(모형I: 14년, 모형II: 12년)이 지나면 농업노동 시간이 감소함.
  - 가사노동시간이 많을수록 농업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농외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농업노동시간도 감소함. 이 결과는 노동배분이론과 일치함.

<sup>7</sup> 분석 모형에 대한 설명은 부록 1 참조.

표 2-16. 토빗 모형 분석결과: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 결정 요인 분석

변 수	단위	모형I	모형II
		추정치	추정치
연령	세	-0.303 (-1.85)*	-0.317 (-2.07)*
(연령) <sup>2</sup>		0.005 (2.21)*	0.004 (2.28)*
거주기간	년	0.560 (0.008)***	0.770 (3.67)***
(거주기간) <sup>2</sup>		-0.020 (0.012)**	-0.032 (-2.69)**
가사노동시간	시간		-0.162 (-3.05)**
농외노동시간	시간		-0.185 (-3.61)***
농사일 참여자 수	명		-0.369 (-1.34)
만6세 미만 아동 유무	1: 있음 0: 없음		-1.047 (-1.88)
이전 농사경험 여부	1: 있음 0: 없음		1.233 (2.61)**
경지면적	ha		1.146 (3.31)**
(경지면적) <sup>2</sup>			-0.001 (-3.30)**
과수농가	1: 예 0: 아니오		0.761 (0.81)
채소농가	1: 예 0: 아니오		1.457 (2.27)*
일반밭작물농가	1: 예 0: 아니오		-0.795 (-0.99)
축산농가	1: 예 0: 아니오		0.410 (0.45)
기타농가	1: 예 0: 아니오		2.475 (1.91)
상수항		6.771	8.549 (3.17)**
LR $\chi^2$		29.01***	81.21***
Log likelihood		-1033.85	-1007.75

주: ( )는 t값

추정을 위해 제거된 영농형태 더미변수는 '논벼농가'임.

\*p<0.05; \*\*p<0.01; \*\*\*p<0.001

- 농사일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농업노동시간은 감소하여, 농가내 농업 인력이 많을수록 이주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시간을 상대적으로 덜 투

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만6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농업노동시간은 감소하여, 영유아 육아는 영농활동의 제약요인임을 알 수 있음.
- 이전 농사경험이 있으면 농업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사경험이 영농활동 비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경작면적이 많을수록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이 증가하다, 어느 임계면적(5ha) 이상이면 농업노동시간이 감소함. 부부협업 중심의 농업구조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의 노동투입량은 상대적으로 많으나, 외부 고용인력을 고용하는 상업농구조에서는 여성의 노동투입량이 감소함.
- 논벼농가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영농형태인 채소농가, 과수농가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투입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논벼는 남성이, 채소 및 과수농사는 여성농업인이 주로 담당하는 전통적인 농업노동 영역구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

### 3.2. 농외소득활동 실태

-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15.7%만이 농외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필리핀, 중국, 일본 출신 순으로 농외소득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농외소득활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로 종사하는 농외소득활동 유형은 생산직이 30.2%, 서비스직이 22.2%, 자영업이 14.3%, 일용직이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생산직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았고, 대졸 학력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는 생산직, 서비스직, 자영업이외 공부방 교사, 영어강사 등으로도 일하고 있었음.

표 2-17. 주요 특성별 농외소득활동 여부

단위: %

	사례수 (명)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 전 체 ■	402	15.7	84.3
■ 국 적 ■			
베트남	181	9.9	90.1
중국	101	23.8	76.2
필리핀	49	30.6	69.4
일본	34	14.7	85.3
캄보디아	23	0	100
기타	14	7.1	92.9
■ 연 령 ■			
25세 미만	141	9.9	90.1
25~35세	140	11.4	88.6
35~45세	83	24.1	75.9
45~55세	31	32.3	67.7
55세 이상	7	42.9	57.1
■ 교육수준 ■			
무학	5	20	80
초졸	38	15.8	84.2
중졸	130	13.1	86.9
고졸	164	12.8	87.2
대졸	65	27.7	72.3
■ 한국거주기간 ■			
1년 미만	10	0	100
1~3년	129	3.9	96.1
3~5년	120	13.3	86.7
5~7년	43	20.9	79.1
7년 이상	100	33	67

그림 2-2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참여하고 있는 농외소득활동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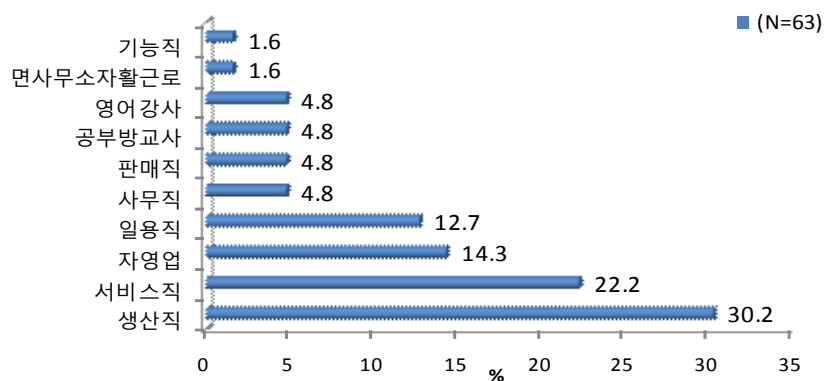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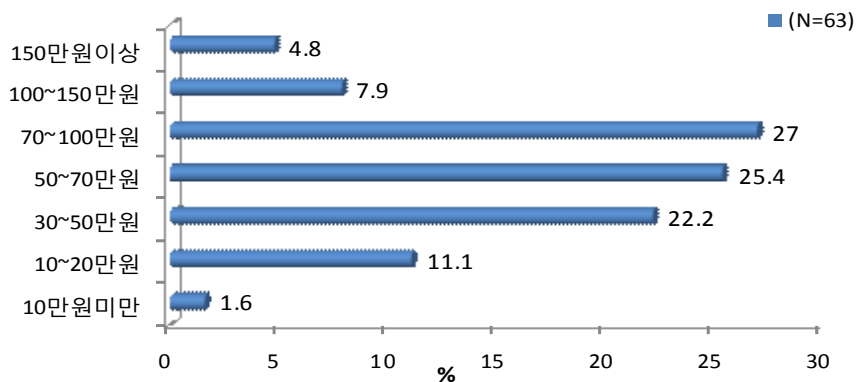
표 2-18. 주요 특성별 농외소득활동 유형

단위: %

	사례수 (명)	생산직	서비스직	자영업	일용직	사무직	판매직	공부방 교사	영어강사	자활근로	기능직
■ 국적 ■											
베트남	18	33.3	27.8	5.6	22.2	5.6	5.6	0	0	0	0
중국	24	33.3	29.2	20.8	8.3	0	8.3	0	0	0	0
필리핀	15	26.7	0	6.7	13.3	6.7	0	13.3	20	6.7	6.7
일본	5	0	40	40	0	20	0	20	0	0	0
기타	1	100	0	0	0	0	0	0	0	0	0
■ 학력 ■											
무학	1	100	0	0	0	0	0	0	0	0	0
초졸	6	66.7	16.7	0	16.7	0	0	0	0	0	0
중졸	17	35.3	35.3	5.9	17.6	0	5.9	0	0	0	0
고졸	21	23.8	23.8	28.6	9.5	9.5	4.8	0	0	4.8	0
대졸	18	16.7	11.1	11.1	11.1	5.6	5.6	16.7	16.7	0	5.6
■ 한국거주기간 ■											
1~3년	5	20	80	0	0	0	0	0	0	0	0
3~5년	16	50	12.5	6.3	25	0	6.3	0	0	0	0
5~7년	9	33.3	11.1	22.2	22.2	11.1	0	0	0	0	0
7년 이상	33	21.2	21.2	18.2	6.1	6.1	6.1	9.1	9.1	3	3

-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월 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87.3%, 50만원 미만이 35%로, 도시여성근로자 평균 수입에 비해 낮은 편임.

그림 2-29.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월 평균 농외수입



### 3.3. 지역사회활동 실태

- 조사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29.9%가 본국출신 사람들의 자조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7.4%가 마을부녀회, 14.2%가 종교단체모임, 11.7%가 타국 출신도 포함된 다문화가족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45.5%는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음.
  - 지역사회활동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연령층은 35~45세로, 이 연령층의 66.3%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사회활동 참여율이 높아, 7년 이상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65%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활동 유형은 14.9%가 마을축제 및 행사, 8.2%가 마을노인 돌봄, 4.5%가 다른 국제결혼여성이민자를 도와주는 활동, 4.0%가 마을환경미화 등으로 나타남.

그림 2-30.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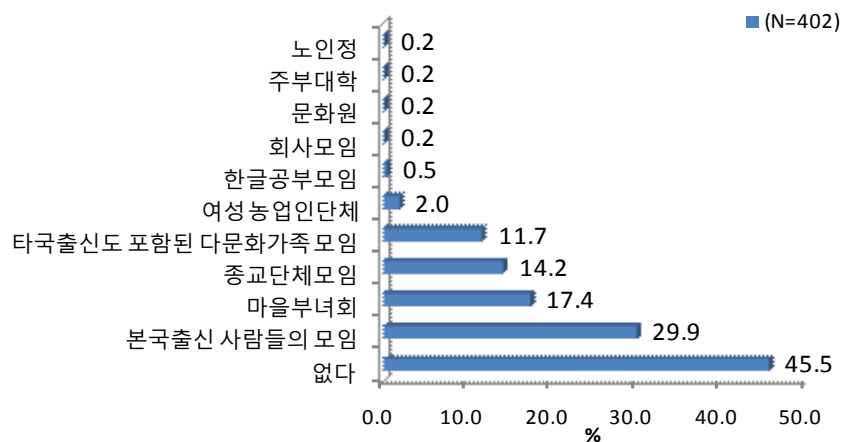


그림 2-31. 연령대별 지역사회활동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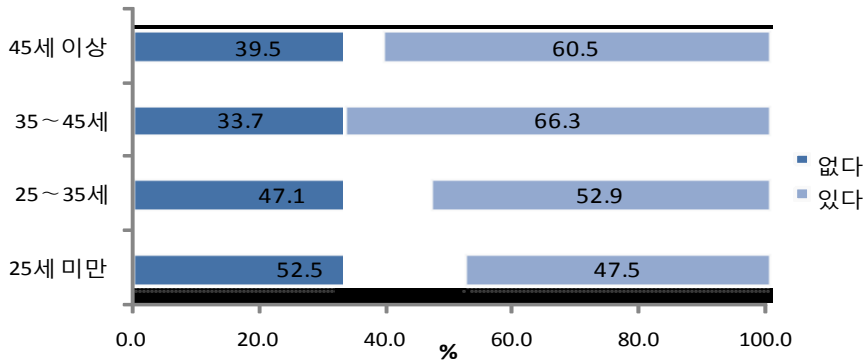


그림 2-32. 한국거주기간별 지역사회활동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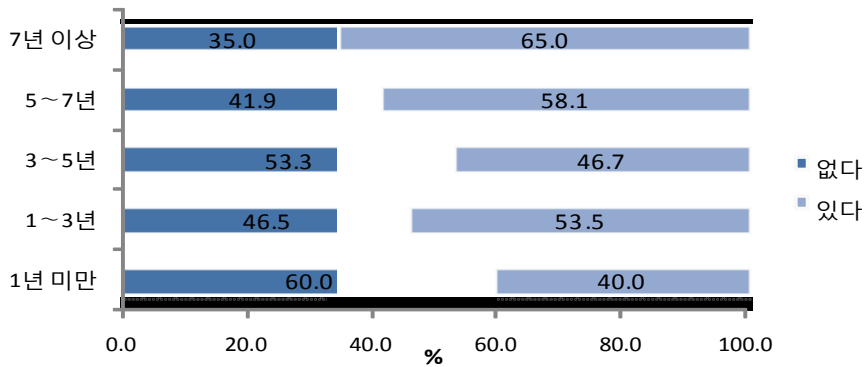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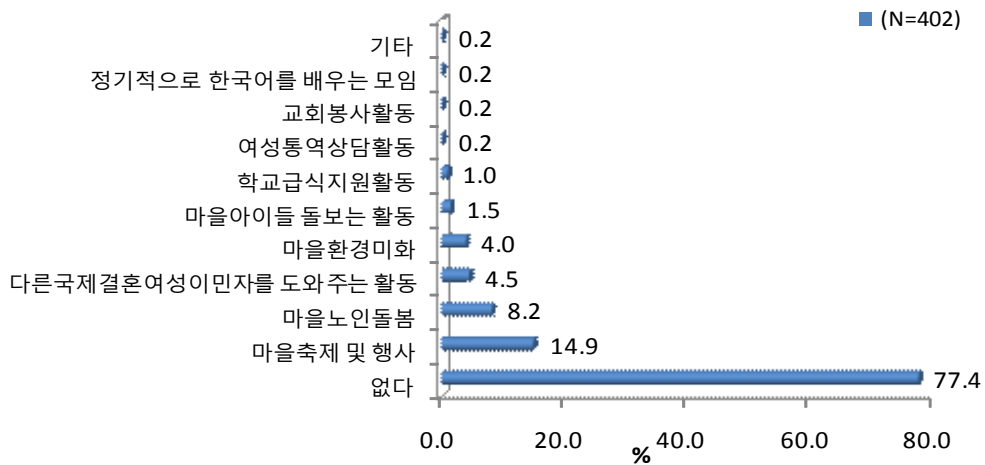


그림 2-33.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활동 유형



### 3.4. 교육 참여 실태

- 국제결혼이민자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로, 교육 참여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 참여 경험 비중이 높아, 25세 미만 응답자의 85.8%가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교육 참여 경험 비중이 높아, 대졸자의 78.5%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한국거주 기간이 1년에서 3년 사이에 교육 경험도가 가장 높았으며,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육 경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교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이는 한국어를 못하는 결혼초기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으로 한글교육이 주로 시행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임.

그림 2-34. 국제결혼여성이민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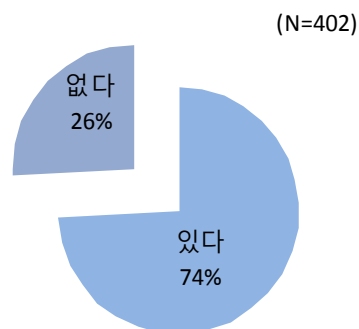


표 2-19. 주요 특성별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단위: %

	사례수(명)	있다	없다
■ 전 체 ■	402	74.1	25.9
■ 연령별 ■			
25세 미만	141	85.8	14.2
25~35세	140	74.3	25.7
35~45세	83	72.3	27.7
45~55세	31	41.9	58.1
55세 이상	7	0	100
■ 교육수준별 ■			
무학	5	40	60
초졸	38	65.8	34.2
중졸	130	76.2	23.8
고졸	164	73.8	26.2
대졸	65	78.5	21.5
■ 한국거주기간별 ■			
1년 미만	10	60	40
1~3년	129	82.9	17.1
3~5년	120	75	25
5~7년	43	72.1	27.9
7년 이상	100	64	36
■ 한국어수준별 ■			
잘하는 편	215	70.2	29.8
보통	183	78.1	21.9
못하는 편	4	100	0

-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참여했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한국어교육, 46.3%가 한국요리강습, 21.5%가 전통문화교육, 20.5%가 정보화 교육, 18.1%가 자녀양육 관련 교육, 17.8%가 가족관계 교육 등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농업관련교육은 5.4%, 취업기술교육은 3%만이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 대상 교육은 한국문화 및 생활정착 관련 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영농 및 취업 교육 제공 및 참여도는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 교육, 임신출산 관련 교육 등의 참여 경험 비중이 높았음.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요리강습, 정보화 교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45~55세 연령층, 고졸이상, 한국거주기간 5년 이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업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취업기술교육 경험은 25세 미만 또는 35~45세, 대졸,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2-35.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참여한 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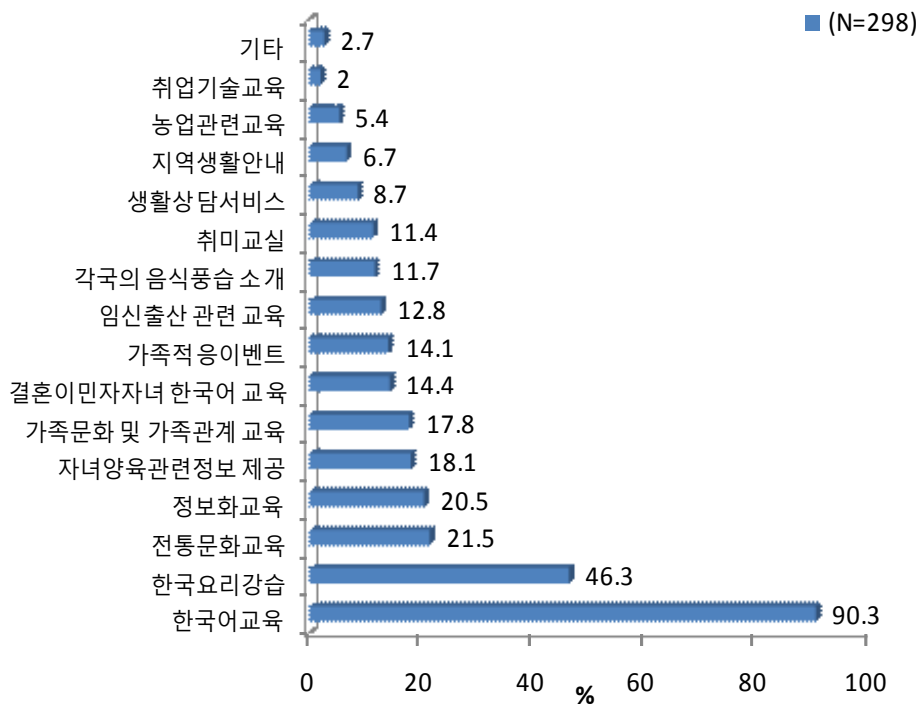


표 2-20. 교육 프로그램별 참여율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 강습	정보화 교육	임신출산 관련 교육	생활상담 서비스	농업관련 교육	취업기술 교육
전체	90.3	46.3	20.5	12.8	8.7	5.4	2
연령대별							
25세 미만	96.7	47.9	16.5	15.7	7.4	5	3.3
25~35세	91.3	37.5	15.4	13.5	12.5	2.9	0
35~45세	81.7	55	35	6.7	6.7	6.7	3.3
45~55세	61.5	61.5	30.8	7.7	0	23.1	0
학력별							
무학	100	0	0	0	0	0	0
초졸	100	28	0	8	0	0	0
중졸	93.9	41.4	16.2	9.1	7.1	4	3
고졸	85.1	54.5	25.6	15.7	11.6	6.6	0.8
대졸	90.2	47.1	27.5	15.7	9.8	7.8	3.9
한국거주기간별							
1년 미만	83.3	33.3	33.3	16.7	16.7	0	0
1~3년	95.3	44.9	10.3	14	10.3	4.7	1.9
3~5년	94.4	42.2	15.6	11.1	5.6	2.2	1.1
5~7년	93.5	35.5	32.3	25.8	9.7	9.7	3.2
7년 이상	75	60.9	37.5	6.3	9.4	9.4	3.1

- 한국에 와서 농사기술을 가장 많이 배운 곳으로 93%가 가족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이웃농가 0.9%, 농업기술센터 0.3%, 스스로 터득 0.3% 등으로 나타났음. 반면, 응답자의 5.5%는 전혀 배운 적 없다고 답변하였음.
  - 이주여성농업인 대다수가 정식으로 체계적인 농사기술을 배운 경험이 없으며, 대부분이 가족으로부터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있었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에게서 영농기술을 습득한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사일을 배운 적 없는 비율이 높았음. 45~55세 연령층의 3.4%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운 경험이 있었음.
  - 한국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여성결혼이민자의 3.8%가 이웃농가에서 배운 경험이 있음.

그림 2-36. 농사기술 습득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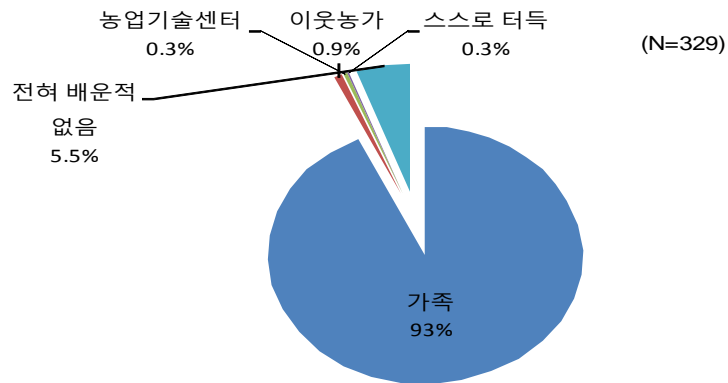


표 2-21. 주요 특성별 농사기술 습득 장소

단위: %

	사례수 (명)	가족	이웃농가	농업기술센터	스스로 터득	전혀 배운 적 없음
■ 전 체 ■	329	93.0	0.9	0.3	0.3	5.5
□ 연령별 □						
25세미만	112	96.4	0	0	0	3.6
25~35세	112	94.6	1.8	0	0	3.6
35~45세	69	88.4	1.4	0	1.4	8.7
45~55세	29	86.2	0	3.4	0	10.3
55세이상	7	85.7	0	0	0	14.3
□ 한국거주기간 □						
1년미만	8	100	0	0	0	0
1~3년	96	94.8	0	0	0	5.2
3~5년	101	94.1	1	0	0	5
5~7년	38	89.5	2.6	0	0	7.9
7년이상	86	90.7	1.2	1.2	1.2	5.8



## 제 3 장

---

###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인구 전망

- 제 3장에서는 농업총조사 자료를 통해 농가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본 후, 인구추계모형을 이용하여 장래 농가인구를 추계함. 또한 이주여성농업인과 다문화 자녀를 포함한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인구를 전망하여, 향후 농업인력 재편 방향에 대해 논의 할 것임.

#### 1. 농가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전망

##### 1.1. 농촌 및 농가인구 구조의 변화 추이

- 농촌인구는 농촌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로 비농가와 농가인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임. 반면, 농가인구는 농업인구라고도 하며,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에 거주하는 인구로 농촌에 살지만 농업 외의 일에 종사하는 인구를 포함한

농촌인구와는 구별되는 개념임.

- 농촌과 도시를 명확히 구별하기는 곤란하여 행정구분·인구·인구밀도·산업구조 등 여러 지표에 의해 구분하며,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분을 이용하여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인구를 농촌인구로 규정함.
  - 농촌인구 구성 변화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읍면지역 인구 추이를 살펴보고, 농가인구구성 변화는 통계청의 『농업총조사』의 농가인구 추이를 살펴봄.
-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1980년 총인구의 28.9%(1,083만 명)이었으나, 그 후 빠르게 감소하여 1990년 15.3%(666만 명), 2000년 8.7%(403만 명), 2005년 7.3%(343만 명)로 지난 25년(1980~2005년)만에 3분의 1로 감소함.

표 3-1. 농가 총인구의 변화

단위: 천 명, %

	1980	1990	1995	2000	2005
농가인구	10,827	6,661	4,851	4,031	3,434
(총인구대비)	28.9	15.3	10.9	8.7	7.3
(증 감 률)*	-	-	-27.2	-16.9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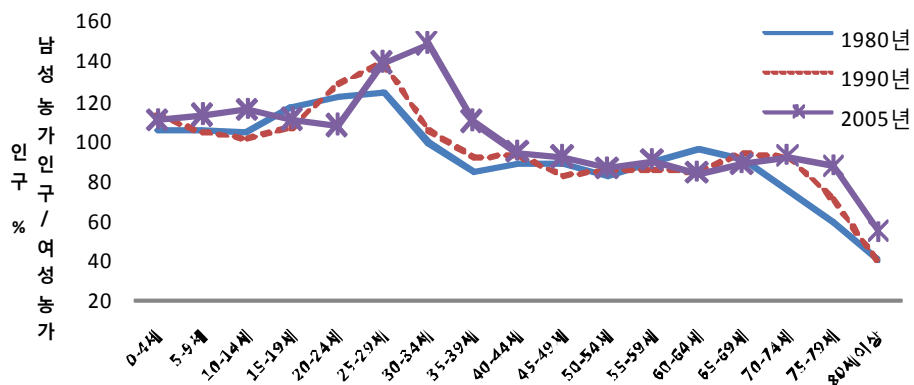
주: 지난 5년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 농가인구의 규모와 연령별 구성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도 남아선호사상으로 높은 출생성비의 영향은 아직도 나타나고 있음. 1980년 0-4세 인구의 성비가 106으로 정상수준이었으나, 1990년에 112.6으로 급상승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2005년에도 나타나고 있음.
- 1990년까지 성비가 가장 높았던 연령층은 25-29세며, 그 이전에는 20-24세에서 성비가 가장 높았음. 성비가 가장 높았던 연령층은 2000년까지 변동이 없었으나 2005년에는 30-34세에서 성비가 14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05년 농가인구의 남성대 여성의 성비 분포를 보면, 40세 이전에는 남초현상을 보여주는 반면, 40세 이후에는 여초현상을 나타냄. 성별 불균형이 심한 연령층은 25-34세 연령층으로 가장 생산적인 연령층에서 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결혼적령기 여성 농가인구의 전출 비율이 높기 때문임.
  - 이와 같은 결혼적령기 농가인구의 성비 불균형으로 농가 남자의 미혼상태가 30대 후반에서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 이런 농촌 노총각 증가로 국제결혼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였음.
- 우리나라 농가인구에서는 60세가 지나면서 성비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1980년에 60-64세 인구의 성비가 96.6으로 주변보다 높았으며, 1990년에는 65-69세 인구의 성비가, 2005년에 70-74세로 높아졌음.
  - 노년층에 들어가면서 성비가 낮아져야 하는데 높아지는 현상도 성별 이동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음. 즉, 60세 이상 노인계층에서 성비의 상승현상은 할머니들의 경우 배우자 사망 후에 자녀들과의 재결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그림 3-1. 농가인구의 연령별 성비 변화 (1980, 1990, 2005년)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표 3-2. 1995, 2005년 연령별, 성별 농가인구 변화

단위: 명

	1995				2005			
	남자	여자	합계	성비	남자	여자	합계	성비
0-4세	65,799	55,764	121,563	118.0	35,333	31,917	67,250	110.7
5-9세	103,904	93,689	197,593	110.9	60,898	53,910	114,808	113.0
10-14세	182,757	178,319	361,076	102.5	82,118	70,909	153,027	115.8
15-19세	211,910	211,182	423,092	100.3	83,046	74,746	157,792	111.1
20-24세	175,850	152,676	328,526	115.2	77,377	71,858	149,235	107.7
25-29세	152,838	92,883	245,721	164.5	83,323	59,777	143,100	139.4
30-34세	108,391	94,850	203,241	114.3	71,006	47,700	118,706	148.9
35-39세	128,694	132,793	261,487	96.9	67,606	61,538	129,144	109.9
40-44세	132,327	146,458	278,785	90.4	89,934	95,140	185,074	94.5
45-49세	146,863	161,242	308,105	91.1	126,426	137,095	263,521	92.2
50-54세	169,611	208,043	377,654	81.5	131,538	152,847	284,385	86.1
55-59세	224,137	265,211	489,348	84.5	150,058	166,420	316,478	90.2
60-64세	219,470	250,718	470,188	87.5	160,513	191,234	351,747	83.9
65-69세	149,170	171,122	320,292	87.2	191,400	217,121	408,521	88.2
70-74세	108,115	113,587	221,702	95.2	148,482	160,797	309,279	92.3
75-79세	58,131	68,825	126,956	84.5	74,114	84,828	158,942	87.4
80세이상	35,032	80,719	115,751	43.4	43,420	79,144	122,564	54.9
계	2,372,999	2,478,081	4,851,080	95.8	1,676,592	1,756,981	3,433,573	95.4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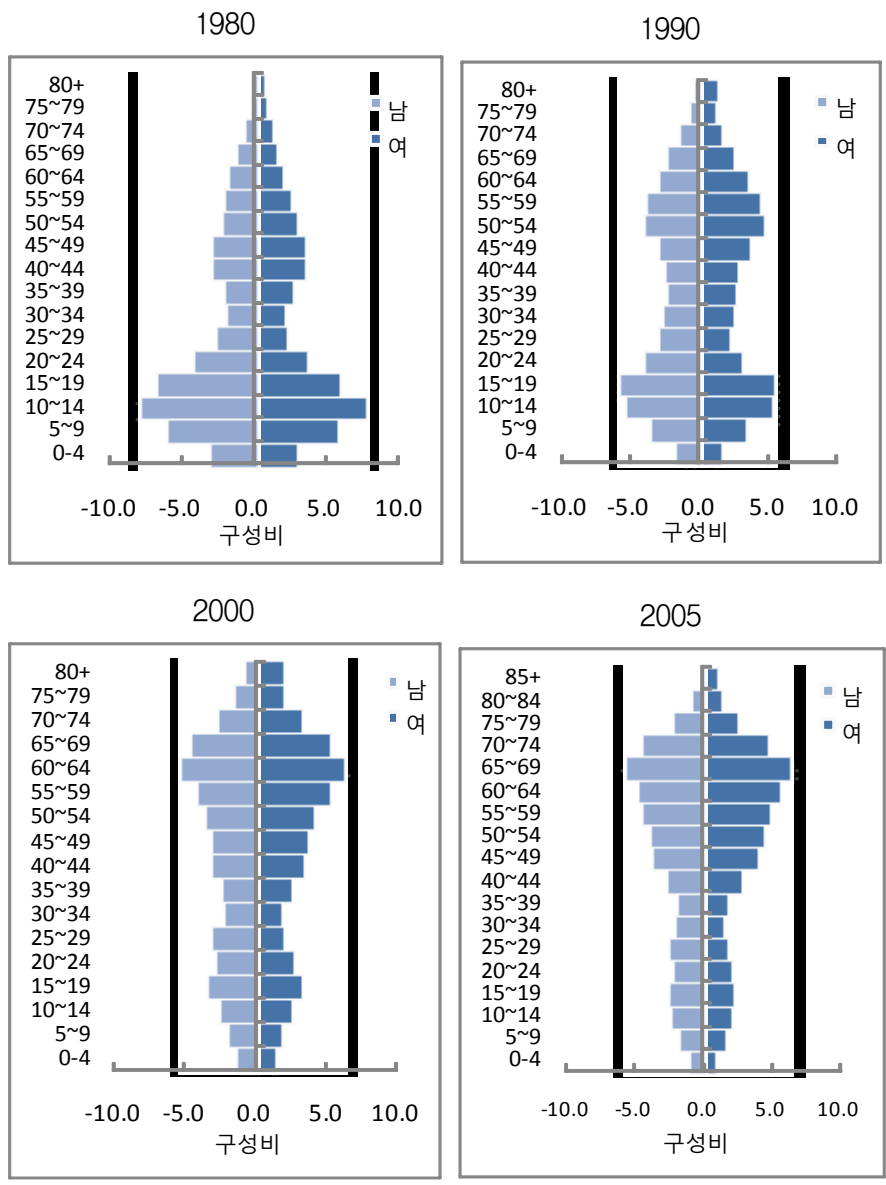
-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농가인구 피라미드를 통해서 농가인구의 연령 및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980년 0~14세 33.0%, 15~64세 60.3%, 65세 이상 6.7% 이었으나, 2005년 0~14세 9.8%, 15~64세 61.1%, 65세 이상이 29.1%로 나타나, 삼각형 모양의 인구피라미드가 점차 역삼각형으로 변해가고 있음.

- 1980년 인구피라미드는 3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연령층이 도시로 진출함에 따라 40대 이후와 10대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구조를 보이

고 있음. 10세 미만의 인구가 적은 것은 부모세대의 전출에 따른 출생아수의 감소라고 할 수 있음.

- 1990년 인구피라미드에서는 젊은 연령층의 유입이 없는 지속적인 전출로 10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인구의 상대적 구성비는 증가하였음. 10년 전에 40대가 많았으나 이때는 50대로 연령이 높아졌음.
  - 2000년 피라미드에서 60대의 고령층 인구구성비가 빠르게 증가하였음. 젊은 연령층의 전입은 없고, 전출만 꾸준히 이루어지는 관계로 젊은 연령층의 구성비는 더욱 감소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2005년에 더욱 심화되었음.
- 30~40대 젊은 연령층의 전입 없는 전출, 부모세대의 전출에 따른 출생아수 감소, 고령화 등이 지속된다면 농가인구는 극소해지고, 농가 중심의 농촌사회는 사라지게 될 것임.
- 젊은 연령층의 인구감소가 급격한 것은 30대와 40대 부모세대와의 전가구이동과 학령기 아동의 단신이동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추정

그림 3-2. 농가인구 구조의 변화(1980-2005년)



## 1.2. 농가인구 전망

- 1980~2000년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까지의 성별 연령별 농가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향후 농가인구 변화 및 농업인력 구조변화를 예측하고, 농촌지역 국제결혼 증가전수를 가늠해보고자 함.
-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출생, 사망 및 이동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하나, 농업총조사 자료에는 이런 정보가 전무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지수법(exponential method)을 이용하였음(김태헌 외., 2008)<sup>8</sup>.
- 1980년 이후 성별 연령별 농가인구의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가 처음에는 빠르게, 다음은 느리게 변화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지수모형을 이용하여 장래 구성비의 변화를 추정하였음.

$$Y_i = e^{(a+bX_i)}$$

- $Y_i$ 는 특성  $i$ 의 인구 구성비이고,  $X_i$ 는 특성  $i$ 의 인구구성비가 나타난 시점이며,  $a$ ,  $b$ 는 상수

- 지수모형을 이용하여 농가인구를 성·연령별로 2020년까지 추계한 결과, 농가인구는 2005년 343만 명(전국 인구의 7.3%), 2010년 296만 명(6.1%), 2015년 260만 명(5.3%), 2020년 234만 명(4.7%)일 것으로 전망됨.
  - 2005년의 농가인구 343만 명은 2010년에 296만 명으로 5년 동안 47만

<sup>8</sup> 김태헌 외(2008)와 동일한 인구추정식을 이용하여 분석결과도 동일함.

명(13.8%)이 감소하며, 다음 5년 동안에는 36만 명(12.1%)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다음 5년 후인 2020년에는 총 농가인구가 234만 명으로 5년 전보다 다시 26만 명(10%)이 감소하며, 2005년부터 15년 동안 109만 명(31.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폭과 감소율이 낮아지는 것은 농가인구의 감소정도가 완화된다고 하기보다는 인구의 이동과 직업 변동이 활발한 젊은 연령층의 감소와 절대인구의 감소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남자 농가인구는 2005년에 168만 명에서 향후 15년 동안 53만 명(31.9%)이 감소하여 2020년에 114만 명이 되며, 여자는 같은 기간에 176만 명에서 56만 명(31.7%)이 감소하여 120만 명으로 추정됨. 성별 인구의 감소규모는 차이가 있으나 그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어, 성비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농가인구의 성·연령별 인구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2005년까지만 해도 농가인구의 젊은 연령층이 어느 정도 있고 노동력의 고령화가 나타났지만, 50대와 60대의 농업인력의 활용이 가능한 모양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10년에는 고연령층 노동인력은 더욱 고령화되고, 젊은 연령층의 감소는 더욱 뚜렷해짐.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심화되어, 2020년의 인구피라미드에서 60세 이상 노인만으로 인구구조가 구성되어 있음.
-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젊은 노동력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임. 또한 젊은 연령층의 전입이 없으면 유소년인구의 감소는 불가피하고, 이것은 농가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어질 것임. 유소년인구(0~14세)를 비롯하여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농가중심의 농촌사회가 사라지는 것도 예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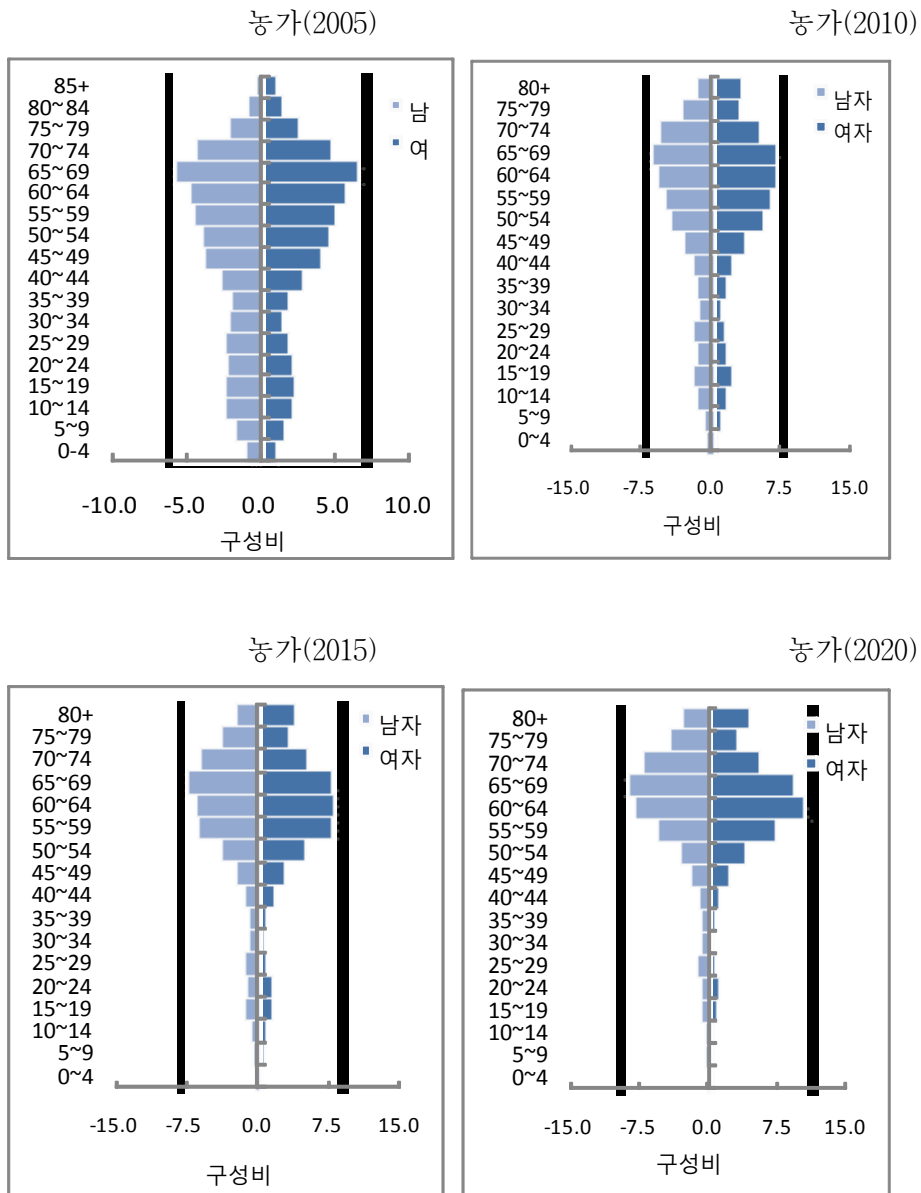
표 3-3. 성별 연령별 장래 농가인구 추계 (2005~2020년)

단위: 명

	2005		2010		2015		2020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4세	35,333	31,917	18,662	16,708	12,193	10,861	7,808	6,968
5~9세	60,898	53,910	27,089	24,170	15,243	13,608	9,369	8,306
10~14세	82,118	70,909	47,107	42,415	23,651	21,423	13,237	11,988
15~19세	83,046	74,746	61,872	57,778	38,320	37,719	20,218	20,646
20~24세	<b>77,377</b>	<b>71,858</b>	<b>46,797</b>	<b>44,600</b>	<b>36,469</b>	<b>35,246</b>	<b>23,462</b>	<b>24,401</b>
25~29세	<b>83,323</b>	<b>59,777</b>	<b>63,247</b>	<b>36,585</b>	<b>40,540</b>	<b>21,703</b>	<b>33,651</b>	<b>16,921</b>
30~34세	<b>71,006</b>	<b>47,700</b>	<b>44,184</b>	<b>26,923</b>	<b>30,977</b>	<b>17,143</b>	<b>19,016</b>	<b>9,198</b>
35~39세	<b>67,606</b>	<b>61,538</b>	<b>47,806</b>	<b>40,440</b>	<b>29,552</b>	<b>23,375</b>	<b>19,813</b>	<b>14,734</b>
40~44세	89,934	95,140	60,466	62,001	41,789	41,537	25,475	24,591
45~49세	126,426	137,095	91,037	102,136	62,883	70,961	44,918	50,069
50~54세	131,538	152,847	132,301	158,957	102,493	126,097	73,996	93,190
55~59세	150,058	166,420	150,035	179,893	158,859	196,749	130,822	167,560
60~64세	160,513	191,234	168,879	196,083	169,149	205,273	186,914	237,536
65~69세	191,400	217,121	185,450	197,669	188,312	194,710	20,263	214,447
70~74세	148,482	160,797	163,042	146,671	158,161	133,897	165,620	128,692
75~79세	74,114	84,828	92,631	85,200	101,843	81,361	97,626	70,581
80세이상	43,420	79,144	50,828	91,162	61,354	98,806	68,309	99,923
전체	1676592	1756981	1451433	1509392	1271789	1330469	1142516	1199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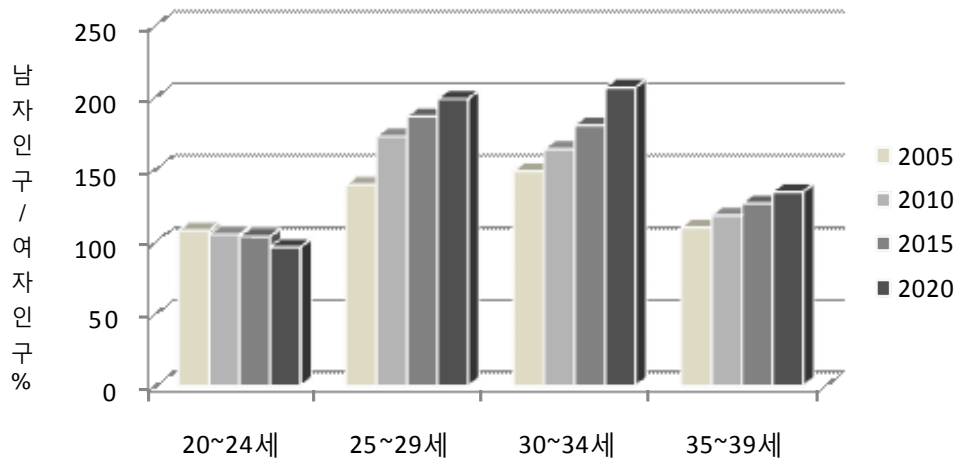
자료: 김태현 외., 2008

그림 3-3. 장래 농가인구 구조 변화 (2005~2020년)



- 농가인구의 결혼 적령기인 20대, 30대 성비 변화 추계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성비는 높아져 2020년 농가인구 30-34세에 성비는 200을 넘고 있음. 2020년에는 35-39세 성비도 120을 초과할 것임.
  - 결혼적령기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비가 높아지다가 30대 초반에서 가장 높고, 이후 감소함.
  - 20대 초반 남녀 농가인구 모두 증가하지 않아 그 절대적인 수가 적고, 20대 후반, 30대에서는 여성 농가인구의 부족으로 성비가 높아지며, 30대를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성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그림 3-4. 결혼적령기 농가인구의 성비 변화 (2005~2020년)



## 2.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인구 전망

- 최근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농가인구구조 변화는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증가 추이에 따라 그 구조와 구성비가 달라질 것임. 따라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 자녀를 포함한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인구의 중장기 증가 추이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농가 인구구조의 동태적 변화추이를 전망하고자 함.
  - 농가인구구조 변화 전망을 위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중 농업인과 혼인한 여성결혼이민자, 즉 이주여성농업인<sup>9</sup>과 그 자녀수를 추계하고자 함.
- 최근 4년간 농림어업종사 남성과 혼인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증가 추이를 고려한 인구추계모형을 이용하여 이주여성농업인의 연도별 유입건수 예측치를 추산하고, 이와 같이 추산된 이주여성농업인 유입건수 예측치에 대해 결혼적령기(20~39세)의 남성 농가인구와 여성 농가인구 추계치(2005~2020년)와 남성 농가인구 중 결혼불성사 가능인구 추계를 통해 유입건수 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함.
  - 농림어업종사자와 혼인한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이후 이주여성농업인)의 연도별 유입건수에 대한 전망은 경제 내외적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연도별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범위가 매우 짧아 연령별 국제결혼여성이민자 수를 전망할 때, 코호트분석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sup>9</sup> 본 연구에서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중 농업인 남성과 혼인한 여성을 비농업인 남성과 혼인한 여성들과 구분하기 위해 이주여성농업인으로 지칭함.

- 이용 가능한 2004~2007년 농림어업자와 혼인한 국제결혼여성인민자 통계의 증가추이를 보면, 처음에는 빠르게 증가하다 그 증가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 또한 농가인구 고령화와 젊은 농가인구의 전출로 결혼적령기 남성 농가인구의 절대적인 수도 감소 있음. 이러한 추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는 로그모형을 이용하여 2020년까지의 이주여성농업인과 다문화 자녀수를 전망함.
  - 시간이 지나면서 이주여성농업인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가정은 인구의 이동과 직업 변동이 활발한 젊은 남성 농가인구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도 반영한 것임.
- 과거 증가추이 자료로부터 도출한 추정식으로 장래 이주여성농업인 수를 추계한 결과, 이주여성농업인은 2005년 2,885명, 2010년 3,967명, 2020년 5,066명이 매년 유입되어, 2020년에 총 이주여성농업인 수는 74,034명으로 추산됨.
- <표 3-5>에서 추계된 농가 장래인구 분포에서 2020년 20~39세 결혼적령기 남성인구가 95,942명, 여성인구가 65,254명이고, 이들이 모두 서로 결혼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부족한 여성인구가 30,688명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 결혼이민자 유입건수에 대한 본 연구의 추계치는 실현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됨.
  - 단, 본 연구는 이주여성농업인 수를 추계한 것이므로, 비농업인과 혼인한 여성결혼이민자 수까지 포함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이주여성농업인의 평균 출생자수를 1명과 2명으로 구분하고, 평균 생잔율 99.46%와 평균 가임율 95%를 적용하여 그 자녀수를 추계한 결과, 다문화 자녀수는 2005년 6,258~12,516명에서 2010년 22,185~44,370명, 2020년 65,165~130,331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 이주여성농업인과 그 자녀수를 합한 인구는 2005년 15,766~22,024명

에서 2010년 49,631~71,815명, 2020년 139,199~204,364명으로 추산

표 3-4. 이주여성농업인과 다문화 자녀수 추계

단위: 명

구분	당해 이주여성농 업인 유입건수	누적 이주여성 농업인 수	다문화 자녀수		이주여성농업인과 다문화자녀	
			(1명 출산)	(2명 출산)	(1명 출산)	(2명 출산)
2004	1,814	6,623*				
2005	2,885	9,508	6,258	12,516	15,766	22,024
2006	3,525	13,033	8,984	17,968	22,017	31,001
2007	3,172	16,205	12,314	24,629	28,519	40,834
2008	3,512	19,717	15,312	30,623	35,029	50,340
2009	3,762	23,479	18,630	37,260	42,109	60,739
2010	3,967	27,446	22,185	44,370	49,631	71,815
2011	4,139	31,585	25,933	51,865	57,518	83,451
2012	4,289	35,874	29,844	59,688	65,718	95,562
2013	4,421	40,295	33,896	67,793	74,192	108,088
2014	4,539	44,834	38,074	76,148	82,908	120,982
2015	4,646	49,481	42,363	84,726	91,843	134,206
2016	4,744	54,224	46,753	93,505	100,977	147,729
2017	4,833	59,057	51,235	102,469	110,292	161,527
2018	4,916	63,974	55,802	111,603	119,775	175,577
2019	4,994	68,968	60,447	120,894	129,414	189,861
2020	5,066	74,034	65,165	130,331	139,199	204,364

주: \*는 2000~2004년까지 추계한 이주여성농업인 총계

1. 2004~2007년까지 당해 이주여성농업인 유입건수는 실측치이며, 이후는 전망치임.
2. 1명, 2명의 구분은 이주여성농업인의 평균 출생자수를 의미함.

- 전체 농가인구 중 이주여성농업인(그 자녀수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0.3%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 0.9%, 2015년에 1.9%, 2020년에는 3.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여성 농가인구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0.5%, 2010년 1.8%, 2015년에 3.7%, 2020년에는 6.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세 미만 농가인구에서 다문화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3~2.5%에서 2020년에는 24.5~49.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음. 즉, 이주여성농업인이 평균 2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향후 15년 후,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절반정도가 다문화 자녀로 구성될 것임.

표 3-5. 농가인구에서 이주여성농업인과 다문화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

구분	전체 농가인구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	여성농가인구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	19세 미만 농가인구에서 다문화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	
			(1명 출산)	(2명 출산)
2005	0.3	0.5	1.3	2.5
2010	0.9	1.8	7.5	15.0
2015	1.9	3.7	16.0	32.0
2020	3.2	6.2	24.5	49.0

주: 각 비중은 <표 3-3>의 장래 농가인구 추계치와 <표 3-4>의 이주여성농업인과 다문화 자녀인구 추계치를 이용하여 계산되었음.

### 3. 향후 농업인력 구조 재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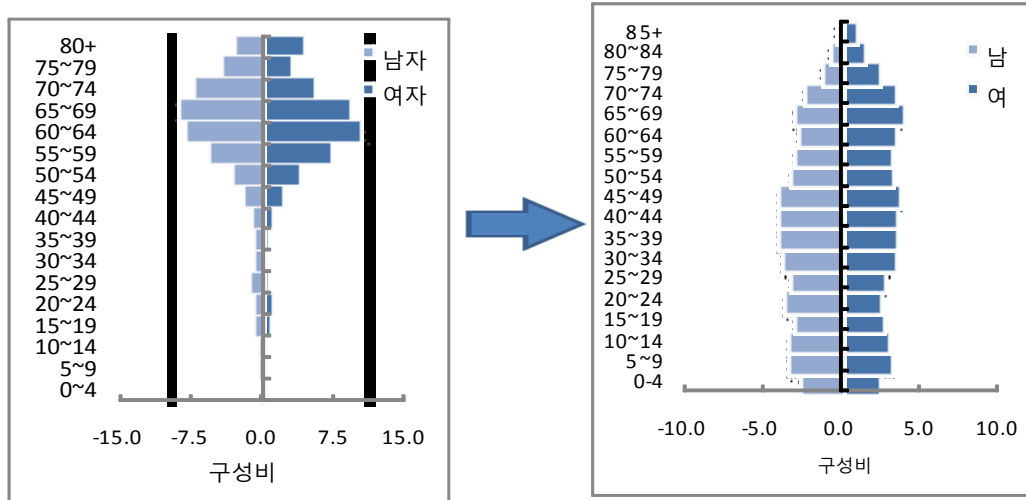
- 장래 농가인구 추계결과, 향후 15년 후 농가인구구조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가 될 것이며, 이 고령층 인구가 사망하는 시기에 새로운 젊은 인구가 전입되지 않는 한, 농촌사회 자체가 사라지거나 농업중심의 농촌과 다른 형태의 사회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됨.
  - 고령층은 계속 잔존하고 젊은 연령층의 전입 없는 전출은 심화되면서, 20~30대 젊은 농가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결혼적령기 세대의 전출에 따른 출생아수의 감소로 유소년 농가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
- 남아선호사상,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그리고 젊은 여성의 결혼 가치관 변화 등으로 저연령층 여성 농가인구의 유출 비중이 같은 연령대 남성인구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20~30대 남녀 성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2020년에 성비 불균형은 40대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결혼 적령기에 있는 많은 농가 남성들이 결혼시기를 놓치고 농촌의 재생산 기능이 단절되는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됨.
- 남성 농가인구의 결혼문제가 농촌 지역사회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인구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젊은 여성들의 농촌 유입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 그러나 농촌의 상대적인 저발전과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여성농업인의 힘든 생활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 때문에 젊은 여성이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을, 배우자로서 농업인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내 젊은 여성들이 농촌에 유입되지



- 않는 상황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그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장래 젊은 남성 농가인구의 수도 절대 규모에서는 감소하고 있어, 최근에 급격히 증가했던 여성결혼이민자 유입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증가율이 완만해 질 것임.
- 향후 15년 후, 전체 농가인구 중 이주여성농업인(그 자녀수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은 3.2%, 전체 여성 농가인구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2%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심각한 농가인구 고령화와 젊은 여성농업인 유입의 단절로 후계 농업인 확보가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면,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생산가능인구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농업 인력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 더 나아가 농촌지역의 새로운 정주인구 유입 및 농업노동인력 확보 차원에서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그 역할이 증가될 것임.
  - 이주여성농업인이 평균 2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향후 15년 후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절반정도가 다문화 자녀로 구성될 것임. 즉,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게 될 다문화 후계세대는 우리 농업·농촌인구의 젊은 연령층을 구성하며, 농촌지역의 중심인력으로 성장할 것임.
    - 이주여성농업인은 농업의 새로운 인력 대안이며, 다문화 후계세대는 미래 잠재 농업 인력임.
  - 장래 농가인구 및 다문화 후계세대 전망 추계 결과,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 자녀들은 20~30대 여성 농가인구와 유소년 농가인구의 대다수를 구성하며, 농가인구 피라미드를 삼각형 모양으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 국제결혼 증가를 고려하지 않는 2020년 농가인구구조는 젊은 젊은 연령층과 두터운 고령층 인구구조인 반면, 이주여성농업인과 다문화 자녀

증가를 감안한 농가인구구조는 어린 연령층부터 고령층까지 인구구조가 균형을 보일 것임.

그림 3-5.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농가인구구조 변화 전망 (2020년)



## 제 4 장

---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농촌인력 활용 가능성과 당면과제

- 제 4장에서는 남편이 농업인인 여성결혼이민자 4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향후 활동 의향, 농업 정체성 등을 분석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 인력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활동 제약요인과 정책수요 조사결과를 통해 이주여성농업인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를 도출할 것임.

####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향후 활동 의향 및 의식조사

##### 1.1. 영농활동 의향

-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77.6%가 앞으로 농사일을 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영농 지속 의향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국적별로는 캄보디아 출신의 영농 지속 의향이 9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중국 출신 83.2%, 베트남 출신 79.6% 등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출신의 영농 지속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는 이전 농사일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아, 영농의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4-1. 향후 농사일을 하거나 지속할 의향

(N=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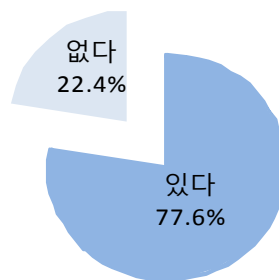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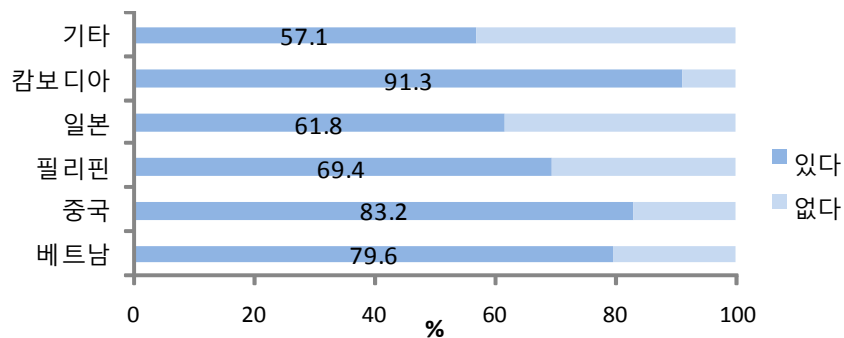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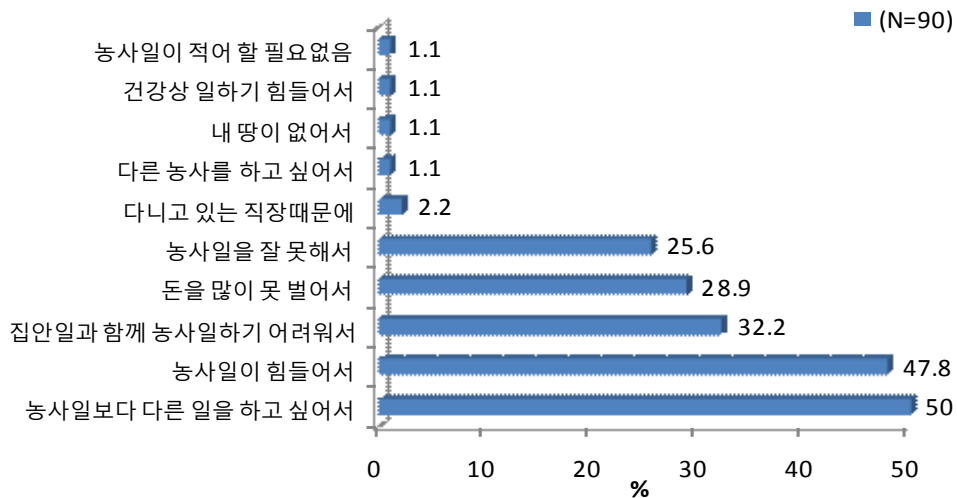
그림 4-2. 국적별 영농 지속 의향



- 향후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센터, 농협 등에서 결혼 이민자를 위한 영농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50.5%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반면, 향후 농사일을 지속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그 제1순위와 2순위 이유를 물어본 결과, 50%가 농사일보다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하였고, 47.8%는 농사일이 힘들어서, 32.2%는 집안일과 함께 농사일을 하기 어려워서 등으로 응답하였음.
  - 농외소득활동 의향이 높을수록, 영농활동 지속 의향이 낮음.
  - 이주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과중한 노동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영농 환경조성, 영농기술 교육기회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임.

그림 4-3. 향후 농사일을 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없는 이유(1+2순위)



## 1.2. 농외소득활동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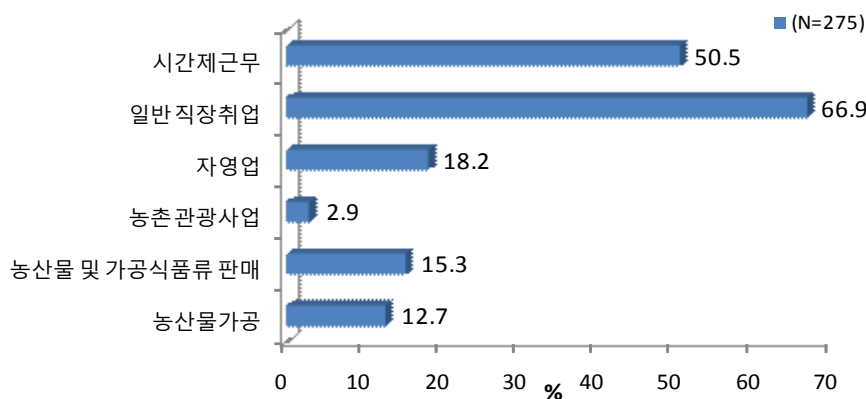
- 향후 농관련 사업 취업 및 창업 의향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는 전체 응답자의 15%이며, 일반직장 취업 및 창업 의향은 62.4%로, 농관련사업 보다는 일반직장 취업 및 창업 의향이 높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농외소득활동은 일반직장 취업이 6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시간제 근무 50.5%, 자영업 18.2%,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 15.3%, 농산물 가공 12.7%로 나타났음.

표 4-1. 농외소득활동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창업 의향  
단위: 명(%)

	농관련사업 취업 및 창업 의향	일반직장 취업 및 창업의향
있음	61(15.2)	251(62.4)
없음	341(84.8)	151(37.6)
합계	402(100)	402(100)

그림 4-4. 농외소득활동 유형별 취업 및 창업 의향 (복수응답)



- 로짓 모형<sup>10</sup> 을 이용하여 이주여성농업인의 향후 농외소득활동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2>와 같음. 농외소득활동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학력, 농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농외노동시간, 만6세 아동 유무, 한국어 수준, 지역더미 변수 등을 분석함.

- 이주여성농업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농외소득활동 의향은 높으

<sup>10</sup> 분석 모형 설명은 부록 1 참조.

나, 어느 임계연령 이상이 되면 농외소득활동 의향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농외소득활동 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음. 나이가 들수록 농외활동의 동기나 의욕 등이 감소하여 농외소득활동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임. 실제로 35~45세 미만 연령층에서 농외소득활동 취업 및 창업 의향이 7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25세 미만에서 68.8%, 25~35세에서 67.1%, 45세 이상에서 63.2%로 나타났음.

- 고졸이상인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의향이 더 높게 남.
- 농외소득활동도 이주여성농업인의 총시간을 배분하는 활동이므로 시간 배분이론이 적용되어 농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현재 농외소득활동 시간이 농외소득활동 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임. 농업노동시간이 많을수록 농외활동 의향은 감소하나, 가사노동시간과 농외노동시간이 많을수록 향후 농외소득 활동 의향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즉, 영농활동에 전념하는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외활동 의향은 상대적으로 더 낮음을 알 수 있음.
- 만6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농외소득활동 확률이 감소하여, 영유아 양육은 농외소득활동의 제약요인임을 알 수 있음.
- 경기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농외소득활동 의향이 높게 나타나, 농업 중심 지역일수록 농업소득의 보완으로 농외소득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함.

표 4-2. 로짓모형 분석 결과: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추정치	z값	한계효과
연령	0.109	1.23	0.021
(연령) <sup>2</sup>	-0.002	-1.67	-0.0004
고졸이상	0.684**	2.69	0.136
농업노동시간	-0.068*	-2.16	-0.013
가사노동시간	0.083*	2.50	0.016
농외노동시간	0.136**	3.12	0.027
만6세 미만 아동 유무	-0.867**	-2.84	-0.158
한국어 수준	0.497	1.85	0.098
강원	2.284***	3.61	0.262
충북	1.608**	2.93	0.216
충남	2.137***	4.34	0.267
전북	1.481**	3.26	0.213
전남	1.457***	3.33	0.215
경북	0.465	1.10	0.083
경남	2.175***	4.92	0.294
상수항	-2.192	-1.44	
LR $\chi^2$		89.11***	
Log likelihood		-206.20	

주: 만6세 아동 유무는 1이면 있음, 0이면 없음.

한국어 수준은 1이면 잘하는 편, 0이면 보통이하  
추정을 위해 제거한 지역더미변수는 '경기도'임.

\*p<0.05; \*\*p<0.01; \*\*\* p<0.001

### 1.3. 농업관 및 농업인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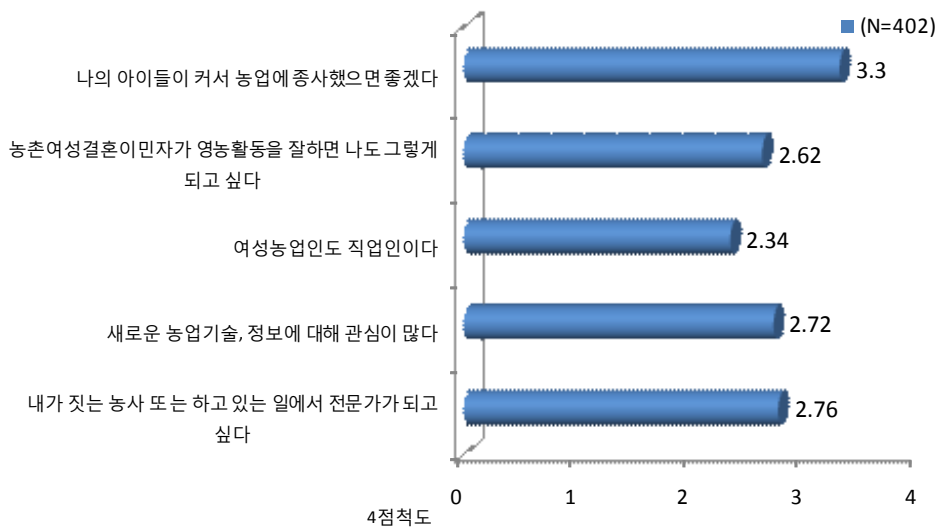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관 및 농업인 정체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5개 문항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4점 척도<sup>11</sup>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나의 아이들

<sup>11</sup> 5개 설문항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등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5개 항목 각각에 대한 이주여성농업인의 의식수준을 평균 점수화할 때,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의식수준이 낮고 높을수록 의식수준도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조정하여 1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긴 후 평균점수를 구하였음.



이 커서 농업에 종사했으면 좋겠다]가 3.3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 그 다음이 [내가 짓는 농사 또는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가 2.76점,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에 대해 관심이 많다] 2.72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영농활동을 잘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2.62점의 순으로 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성농업인도 직업인이다] 2.34점으로 직업의식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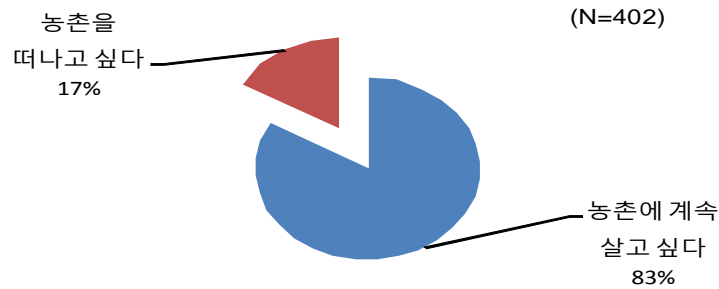
그림 4-5. 농업관 및 농업인 정체성



#### 1.4. 농촌거주 의향

- 앞으로도 계속 농촌지역에서 살고 싶은지 의향을 물어본 결과, 조사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83%가 농촌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4-6. 향후 농촌 거주 지속 의향



- 로짓 모형<sup>12</sup> 을 이용하여 이주여성농업인의 향후 농촌거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3>와 같음. 농촌거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농외소득활동 의향, 이전 농사경험, 자녀 영농승계 희망 여부, 한국어 수준, 현재 농외소득활동 여부, 지역더미 변수 등을 분석함.
  - 여성결혼이민자가 저연령층일수록 농촌거주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국어 수준이 높아도 농촌거주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농외소득활동 중 농관련사업 취업 및 창업 의향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촌거주 확률은 높으나, 반면 일반직장 취업 및 창업 의향이 있는 여성의 농촌거주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재 농외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촌 거주 의향이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관련사업 진출 지원 및 농촌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임.
  - 이전 농사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촌거주 의향이 높게 나타나, 농업의 이해 및 농업의식 배양을 통해 농촌정착 의지를 유도할 수 있음.
  - 자녀가 영농을 승계하기를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촌거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강원도를 제외하고, 모든 다른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촌거주 의향이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sup>12</sup> 분석 모형 설명은 부록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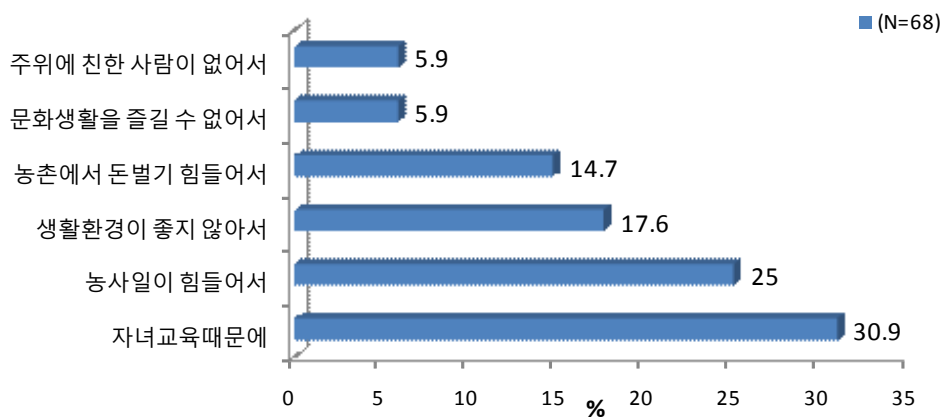
표 4-3. 로짓모형 분석 결과: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촌거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추정치	z값	한계효과
연령	0.037	1.84	0.003
농관련사업 활동 의향	1.106*	2.07	0.075
일반직장 취업 의향	-1.038**	-2.74	-0.087
이전 농사경험	1.080**	2.98	0.087
자녀 영농승계 희망	1.122***	4.25	0.102
한국어 수준	-0.494	-2.48	-0.044
현재 농외소득활동 여부	0.741	1.60	0.055
강원	0.363	0.37	0.029
충북	-2.342**	-3.06	-0.407
충남	-1.966**	-2.66	-0.306
전북	-2.267**	-3.16	-0.373
전남	-1.227	-1.63	-0.157
경북	-1.510	-1.95	-0.212
경남	-1.492*	-2.13	-0.196
상수항	6.313***	4.88	
LR $\chi^2$		79.95***	
Log likelihood		-142.75	

주: 농관련사업 활동 의향이 있으면 1, 없으면 0.  
 일반직장 취업 의향이 있으면 1, 없으면 0.  
 향후 자녀의 영농승계를 희망하면 1, 없으면 0.  
 한국어 수준은 1이면 잘하는 편, 0이면 보통이하  
 현재 농외소득활동을 하면 1, 하지 않으면 0.  
 추정을 위해 제거한 지역더미변수는 '경기도'임.  
 \*p<0.05; \*\*p<0.01; \*\*\* p<0.001

- 반면, 농촌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 농업인 68명에게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자녀교육 때문에'(30.9%), '농사일이 힘들어서'(25%),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17.6%), '농촌에서 돈벌기 힘들어서'(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4-7. 향후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농촌 인력 활용 가능성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70%이상이 35세 미만의 젊은 여성이고 50%이상이 고졸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인적자원 측면에서 농업·농촌 인력활용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 남편이 농업인인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80%이상이 집안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어, 상당수의 이주여성농업인이 농가의 주요 농업 인력으로서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음.
  - 조사대상자의 57%가 집안 농사일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22.9%가 다른 가족과 비슷하게 한다고 응답하여, 공동경영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평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영농 지속 의향과 농촌거주 의향이 높고, 또한 영농교육 참여 의향도 50%이상으로 농사일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높은

편임. 따라서 영농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의지를 발전시키고 농업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 기술 등을 고루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농업·농촌 인적 자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77.6%가 앞으로 농사일을 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83%가 농촌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50.5%가 영농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농업관 및 농업인 정체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녀의 영농종사 희망 의사가 높아, 향후 다문화 자녀의 농업인력 활용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보임.
  - 농업관 및 농업인 정체성은 이주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영농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의 이해 및 농업인 자긍심을 높이는 환경조성이 중요함.
- 이상에서 설명한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인력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이전 농사경험정도, 현재 영농활동 참여 및 담당 비중, 영농지속 의향, 영농교육 참여 의향, 농촌거주 의향, 농관련사업 활동 의향, 농업인 의식 및 정체성 등의 지표들을 종합해 하나의 평가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sup>13</sup>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음. 그 결과,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0.8102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이런 지표들을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인력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음.

<sup>13</sup> 평가 항목들이 일관성(consistency) 혹은 동질성(homogeneity)을 갖는가를 나타내는 내적일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척도 신뢰성 평가방법인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이용하였음.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8~0.9이상이면 바람직하고 0.6~0.7이면 수용할 만함.

표 4-4. 농업인력 활용 가능성 평가 지표들의 신뢰도 통계량

지표 수	크론바흐 알파계수
13	0.8102

표 4-5. 농업인력 활용 가능성 평가 항목 총계 통계량

지 표	크론바흐 알파계수
농사일 참여 유무	0.7982
농업노동시간	0.7976
이전 농사경험 유무	0.8213
향후 영농지속 의향	0.7906
영농교육 참여 의향	0.7972
농관련사업 활동 의향	0.8146
향후 농촌거주 의향	0.8125
농업노동 담당 정도	0.7899
농업의식1: 향후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0.7813
농업의식2: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에 대해 관심이 많다	0.7793
농업의식3: 여성농업인도 직업인이다	0.7926
농업의식4: 영농활동을 잘하는 이주여성농업인이 부럽다	0.7853
농업의식5: 나의 아이들이 커서 농업에 종사했으면 좋겠다	0.8015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농촌 인력 활용 가능성은 연령, 한국거주기간, 학력 등과 연관되어 있음. 결혼 후 약 3년 동안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농사일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자녀 취학 이후 농사일 참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학력수준이 비교적 높은 여성들의 농외소득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함.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 성장단계별 활동 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단계별 활동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한국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40대, 50대 초반 중장년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사일 참여도 및 담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초생활 적응을

마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인력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한국거주기간 3년 이하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임신, 출산, 육아 등과 언어 습득 등 결혼 및 한국생활 적응단계로 본격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시기임.
- 본국에서 농사일을 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출신의 농사일 참여도 및 향후 영농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나, 이들의 향후 농업 인력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등은 한국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현재는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현재 영농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본국에서 영농 경험이 많은 편이고 영농지속 및 농촌거주 의향이 높아 향후 농업인력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젊은 연령층에서 농촌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의향과 농사이외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다문화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농촌형 농외소득원을 창출하여, 향후 농촌정착 의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는 크나, 여성으로서, 농업인으로서 느끼는 장애요인이 존재하여, 이를 해결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농업인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임.
  - 농사일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농업인 대부분 단순 농업노동을 하며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농업주체 인력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활동 제약요인과 정책수요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활동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주는 방안 마련이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인력화를 위한 지름길일 것임. 또한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성장단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수요를 조사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3.1. 활동의 제약요인

##### 3.1.1. 영농활동의 제약요인

-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329명(81.8%) 중 30명(9.1%)만이 농사일의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90%이상이 여성농업인으로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사일을 하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집안일과 농사일을 함께 하는 것으로 46.2%가 응답하였음. 그 다음으로 28%가 고된 노동으로 힘들, 10%가 영농기술 부족 등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음.
  - 바쁜 농사일에 자녀 양육, 가사일을 함께 병행하는 어려움은 여성농업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된 바 있음(강혜정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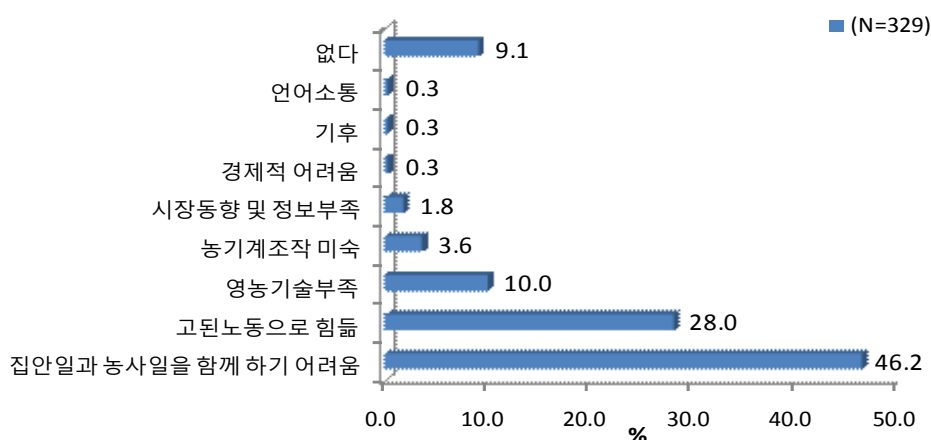


2008). 가사와 농사일을 병행하는 어려움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고단함으로 이어지며, 이는 영농을 그만두거나 농촌을 떠나고 싶은 원인이 되기도 함. 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5%가 농사일이 힘들어서 농촌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 일하는 젊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지원 대책은 도시근로 여성 정책에 비해 아직 미흡하여, 30, 40대의 젊은 여성이 대부분인 이주여성농업인의 역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 양육 등을 포함한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임.
-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가사노동의 부담이외에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영농 및 농기계 기술 부족이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음. 농업기계와 영농기술의 발달로 과거의 노동집약적 영농방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여성결혼이민자는 영농기술교육 참여 기회가 적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음.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교육은 한국어 교육, 생활적응 교육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임. 또한 교육이 있더라도 임신, 출산, 육아 등과 불편한 교통편,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본 설문조사에서 나타남.
  - 영농 및 농기계 기술 부족 문제는 여성농업인의 육체적 농업노동 부담을 증대시키고, 농업생산성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이주여성농업인의 영농기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기회 확대와 환경조성이 필요함.
- 이 밖에 시장동향 및 정보부족도 이주여성농업인이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음. 여성결혼이민자는 언어소통의 어려움, 임신, 출산, 육아 문제, 가족 반대 등으로 생산자 조직 참여 및 외부활동의 제한이 많은 편임. 이런 제약하에 있는 이주여성농업인의 시장정보 및 영농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방안으로 여성농업인 후견인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임. 주변 가까이 있는 선도농가의 여성농업인이 직접 이주

여성농업인의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중심의 영농기술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농촌생활의 멘토(mentor)로서의 역할도 해 줄 수 있음.

그림 4-8. 농사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 가사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35~45세 연령층과 한국거주기간이 5~7년인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사일과 농사일 병행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였음.
  - 결혼초기 25세미만, 영농활동이 왕성한 35~45세 연령층에서 영농기술 부족 문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였음. 단, 초기에는 농사의 이해 및 기초영농기술 부족이고, 35~45세에서는 고급 영농기술 부족 문제임.
- 집안 농사일을 돕거나 바쁠 때만 돕는 정도의 농업노동을 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집안일과 농사일 병행의 어려움과 영농기술 부족 문제를 더 크게 느끼고 있었음. 또한 다른 가족과 비슷하게 농업노동을 하는, 즉 공동경영주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은 과중한 노동으로 힘든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적하였음.

- 노동집약적인 채소, 과수 농가에서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고단함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하였음. 축산, 일반밭작물 농가에서는 영농기술 부족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6. 여성결혼이민자의 주요 특성별 영농활동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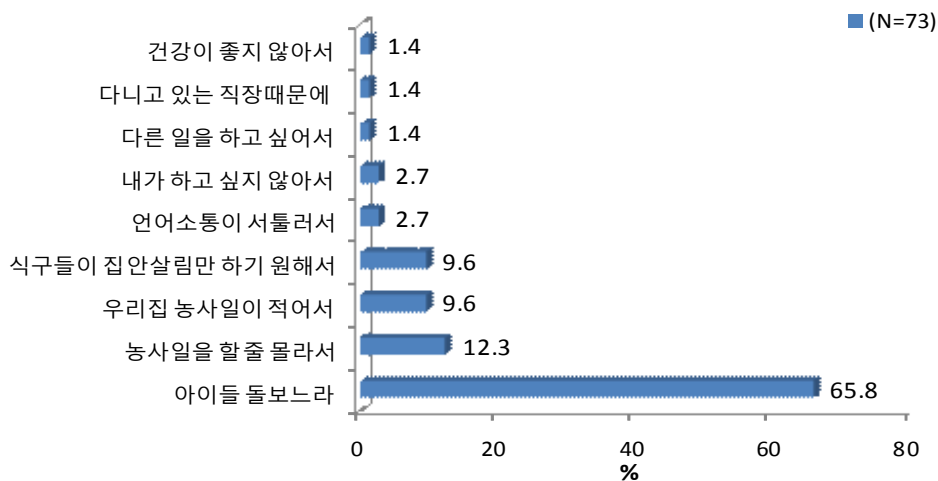
	사례수 (명)	집안일과 농사일 병행	과중한 노동	영농기술 부족	없다
■ 전 체 ■	329	46.2	28.0	10.0	9.1
■ 연령별 ■					
25세 미만	112	40.2	26.8	13.4	8.9
25~35세	112	50.9	25	8.9	10.7
35~45세	69	55.1	29	10.1	4.3
45~55세	29	34.5	37.9	3.4	13.8
55세 이상	7	28.6	42.9	0	14.3
■ 한국거주기간 ■					
1년 미만	8	0	50	12.5	37.5
1~3년	96	45.8	21.9	9.4	10.4
3~5년	101	42.6	31.7	13.9	6.9
5~7년	38	57.9	31.6	2.6	5.3
7년 이상	86	50	26.7	9.3	9.3
■ 영농형태별 ■					
논벼	201	49.3	25.9	10	7.5
과수	21	38.1	33.3	19	9.5
채소	53	45.3	39.6	3.8	7.5
화훼	2	50	0	50	0
일반밭작물	26	38.5	26.9	11.5	15.4
특용작물	6	83.3	16.7	0	0
축산	19	26.3	15.8	15.8	26.3
기타	1	0	100	0	0
■ 노동비중 ■					
거의 모두 내가	8	37.5	37.5	0.0	12.5
다른 가족과 비슷	92	44.6	43.5	3.3	5.4
다른 가족 도움	117	47.0	23.9	13.7	6.8
바깥에서만 도움	112	46.4	18.8	12.5	14.3

-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애로사항 파악뿐만 아니라, 현재

농사일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영농의지 고취와 영농활동 활성화 방안을 찾는 데 중요한 정보임.

- 현재 전혀 농사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73명(전체의 18%)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65.8%가 아이들 돌보느라 시간이 없어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농사일을 할 줄 몰라서(12.3%)', '우리집 농사일이 적어서(9.6%)', '식구들이 집안 살림만 하기 원해서(9.6%)' 등으로 나타났다. 2.7%는 '농사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1.4%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로 응답하여, 임신, 육아, 집안 살림 등의 이유 이외 개인의지에 의해 농사일을 하고 싶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는 극히 소수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4-9. 농사일을 하지 않는 이유



- 한국거주기간이 3~5년 경우 대다수가 육아 및 자녀 교육으로 시간이 없어 농사일을 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1년 미만 거주한 경우는 농사일을 할 줄 몰라서, 언어소통이 서툴러서 등으로 응답하였음. 그러나 3년 이상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육아문제 이외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다니고 있는 직장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등의 개인 의지로 농사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가 있었음.

- 영농형태별 농사일을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특용작물 농가에서 ‘농사일을 할 줄 몰라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일반밭작물, 채소, 축산 등으로 나타남.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영농활동 증대를 위해서는 특용작물 재배법 등의 영농기술 교육이 필요할 것임.

표 4-7. 주요 특성별 농사일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사 례 수 (명)	육아 때문	농사일 몰라서	집נס사 적어서	가족들이 살림만 하기 원함	언어소 통이 서툴러 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다니고 있는 직장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전체	73	65.8	12	9.6	9.6	2.7	2.7	1.4	1.4	1
한국거주기간										
1년 미만	2	0	50	0	0	50	0	0	0	0
1~3년	33	63.6	12	12	12.1	3	0	0	0	0
3~5년	19	84.2	11	0	5.3	0	5.3	0	5.3	0
5~7년	5	60	0	0	20	0	20	0	0	0
7년 이상	14	57.1	14	21	7.1	0	0	7.1	0	7
영농형태										
논벼	47	63.8	8.5	13	12.8	2.1	0	2.1	0	2
과수	3	100	0	0	0	0	0	0	0	0
채소	5	80	20	0	0	0	20	0	0	0
화훼	1	100	0	0	0	0	0	0	0	0
일반밭작물	9	66.7	22	0	11.1	11.1	0	0	11	0
특용작물	2	0	50	0	0	0	50	0	0	0
축산	6	66.7	17	17	0	0	0	0	0	0

-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이주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애로사항은 국내 중장년 여성농업인이 겪고 있는 제약요인과 거의 중복되고 있음. 즉 활동이 활발한 중장년 여성농업인도 일과 가사의 양립을 유지하는 문제, 영농기술 부족 문제를 가장 큰 활동상 제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강혜정 외, 2008). 따라서 이주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활성화

화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내 여성농업인 조사결과와 중복되는 애로사항이외, 이주여성농업인만이 느끼는 어려움으로 언어소통, 기초영농지식 부족, 가족의 이해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이런 어려움은 특히 결혼초기 단계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애로사항임. 따라서 한국생활 초기 적응단계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는 언어교육, 기초영농교육 등의 기초적응 지원 대책이 필요함.

### 3.1.2. 교육 참여의 제약요인

- 국제결혼이민자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46.2%가 언제 어디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그 다음이 ‘생활이 바빠서 시간내기가 어렵다’가 34.6%, ‘아이들이 어려서 집을 비울수가 없다’가 24%, ‘교육장소가 멀어서 가기 힘들다’ 14.4%, ‘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없다’가 13.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따라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홍보 및 전달체계 구축, 교육장에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 마련, 교통편 제공 등의 교육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과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임.
- 35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교육정보 부재, 아이들 돌보는 문제 등을 교육 불참의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한 반면, 45세는 시간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음. 35~45세 연령층에서는 정보부족, 시간부족, 교통불편, 원하는 교육 없음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25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15%가 남편과 시댁의 반대를 이유로 들었음. 또한 45세 이상 연령층에서 약 30%가 교육

을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대별로 교육 불참 이유에 대해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즉, 35세 미만에서는 임신, 육아, 가족반대, 교통 불편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교육 참여의 애로사항이 있으나, 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3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국내 여성농업인이 겪는 애로사항과 같은 시간부족, 정보부족, 원하는 교육 부족 등을 큰 이유로 지적하였음. 45세 이상에서는 교육의 불필요성을 이유로 지적하기도 하였음.

그림 4-10.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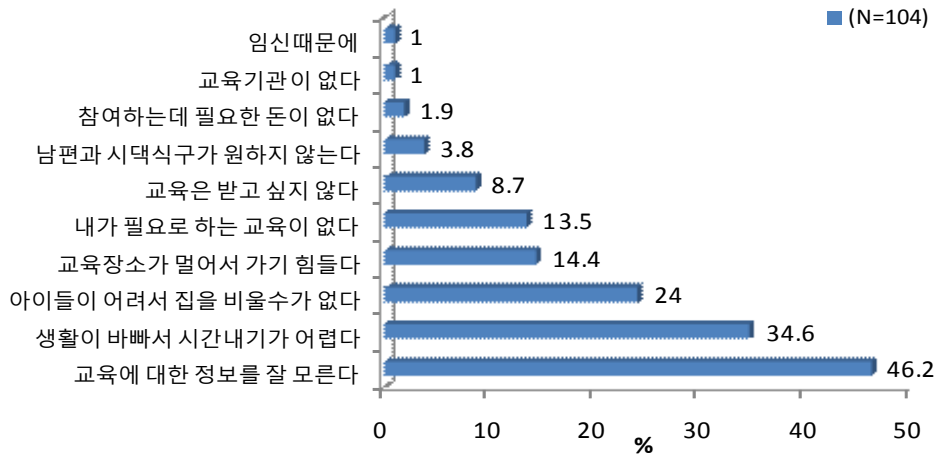


표 4-8. 연령대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25세 미만	25~35세	35~45세	45~55세	55세 이상
교육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른다	50.0	41.7	56.5	50.0	14.3
생활이 바빠서 시간내기가 어렵다	30.0	22.2	34.8	55.6	57.1
아이들이 어려서 집을 비울수가 없다	25.0	47.2	13.0	0.0	0.0
교육장소가 멀어서 가기 힘들다	20.0	5.6	26.1	11.1	14.3
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없다	10.0	11.1	26.1	11.1	0.0
교육은 받고 싶지 않다	10.0	5.6	4.3	16.7	14.3
남편과 시댁식구가 원하지 않는다	15.0	2.8	0.0	0.0	0.0
참여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다	0.0	2.8	4.3	0.0	0.0
교육기관이 없다	0.0	0.0	0.0	5.6	0.0
임신때문에	0.0	2.8	0.0	0.0	0.0

- 지금까지 참여한 교육 및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 37.6%가 강사와 말이 통하지 않은 문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24.5%가 교육내용과 교재를 이해하기 어려움, 13.1%가 나에게 필요한 교육 부재, 9.4%가 교육내용의 차별성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음.
  - 한국거주기간이 짧은 25세미만 연령층의 절반이상이 강사와 의사소통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한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 부재와 교육내용의 차별성 부족 등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지적하였음.

그림 4-11. 지금까지 참여한 교육에서 아쉬웠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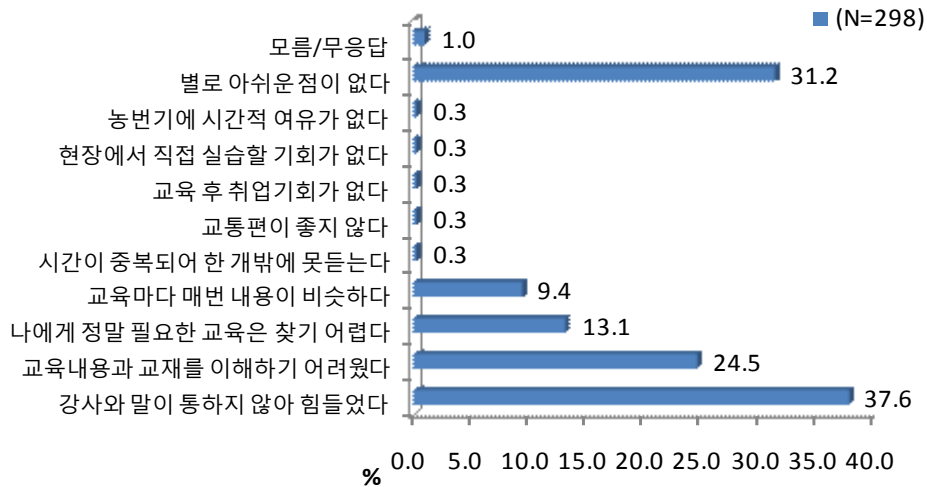


표 4-9. 연령대별 교육에서 아쉬웠던 점

	25세 미만	25~35세	35~45세	45~55세
강사와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들었다	56.2	31.7	15.0	15.4
교육내용과 교재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25.6	32.7	11.7	7.7
정말 필요한 교육은 찾기 어렵다	11.6	14.4	13.3	15.4
교육마다 매번 내용이 비슷하다	9.1	7.7	11.7	15.4
별로 아쉬운 점이 없다	21.5	26.9	53.3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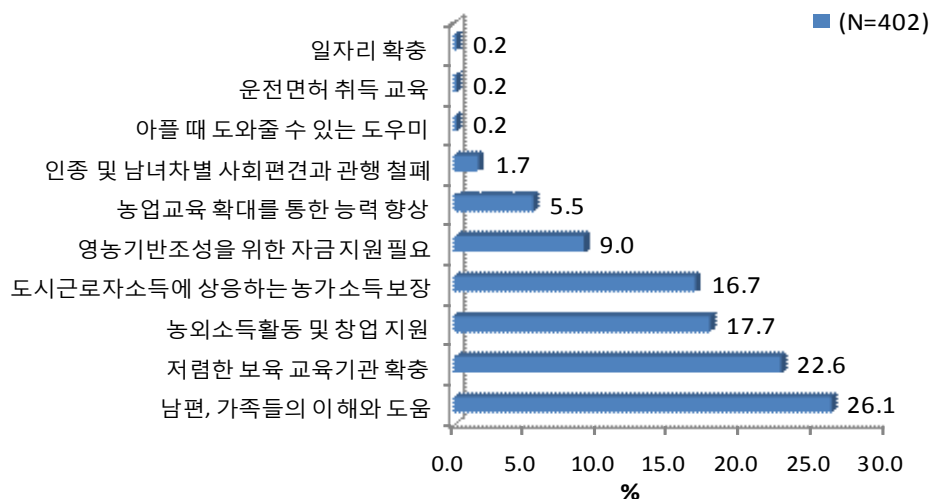


## 3.2. 정책 및 교육 수요

### 3.2.1. 정책수요

- 향후 농촌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1순위 정책으로 26.1%가 남편,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을 꼽았으며, 그 다음은 22.6%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저렴한 보육 및 교육기관 확충, 17.7%가 농외소득활동 및 창업지원, 16.7%가 도시근로자소득에 상응하는 농가소득보장 등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4-1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1순위)



- 25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28.4%가 남편과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 27%가 저렴한 보육 및 교육기관 확충, 19.9%가 농외소득활동 및 창업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25~35세 연령층에서는 25%가 보육 및 교육기관 확충, 22.95%가 남편,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 18.6%가 농외소득활동 및 창업지원 등이 가장 필요한 방안이라고 응답하였음
- 3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27.3%가 남편과 가족의 이해와 도움, 19.8%가 농가소득보장, 16.5%가 영농기반조성을 위한 자금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4-13. 25세미만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수요(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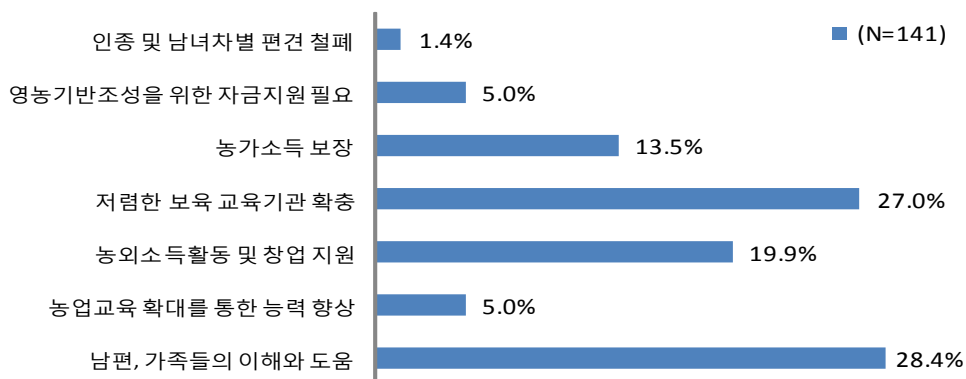


그림 4-14. 25~35세미만 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수요(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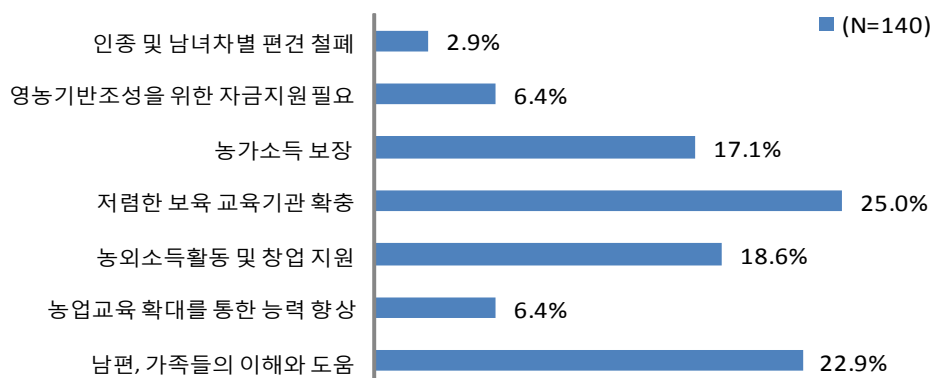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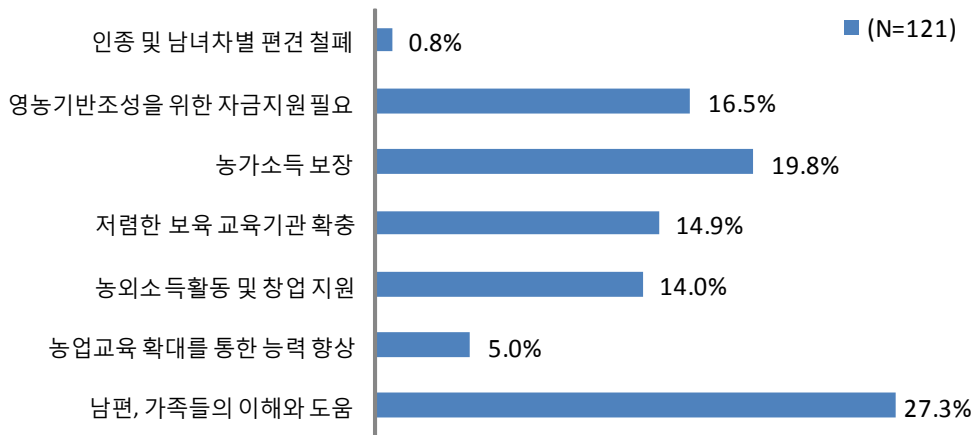


그림 4-15. 35세 이상 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수요(1순위)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수요는 젊은 여성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즉, 영유아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확충, 농외소득활동 및 창업지원은 이주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농업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임.
  - 젊은 여성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한국농업대학 여학생들은 충분한 복지시설 확충(영유아 보육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등)(20.8%),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외소득원 개발 및 창업 지원(20.8%),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24.7%) 등을 우선순위로 응답한 바 있음(강혜정 외., 2008).
- 이주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농업인이 본인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농외소득활동 보장과 영유아 보육시설 및 자녀 교육기관이 확충되는 농촌이 조성될 때, 이주여성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면서 후계여성농업인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임. 또한 국내 젊은 여성들이 농촌에 유입되는 효과도 있을 것임.

- 젊은 여성농업인의 정책수요와 중복되는 정책 수요이외, 이주여성농업인만이 제시한 후계여성농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은 남편과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으로 나타났음. 남편 및 가족의 가사노동 분담, 영농기술 및 농기계 조작 지도, 영농교육 참여 협조, 생활방식 및 문화적 차이 이해 등은 원활한 농촌생활 정착뿐만 아니라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
  -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나 부적응의 가장 큰 원인은 기대 이하의 낮은 경제수준, 언어문제, 생활방식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부부 및 가족 간의 상호이해 부족으로 나타났음(양순미, 2006).

### 3.2.2. 교육 수요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향후 가장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32.3%가 한국어 교육을 꼽았으며, 그 다음은 13.2%가 정보화 교육, 12.5%가 한국요리 강습, 8.75%가 자녀양육관련 정보 등임. 반면, 5.9%가 취업기술교육, 2.3%가 농업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층이 낮을수록 한국어교육, 자녀양육관련 교육 등에 관심이 높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취미, 취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임.
  -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기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국거주기간이 1년 미만에서 한국어 교육 수요가 가장 높고, 5년 이상에서 취업기술교육, 취미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그림 4-1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향후 가장 필요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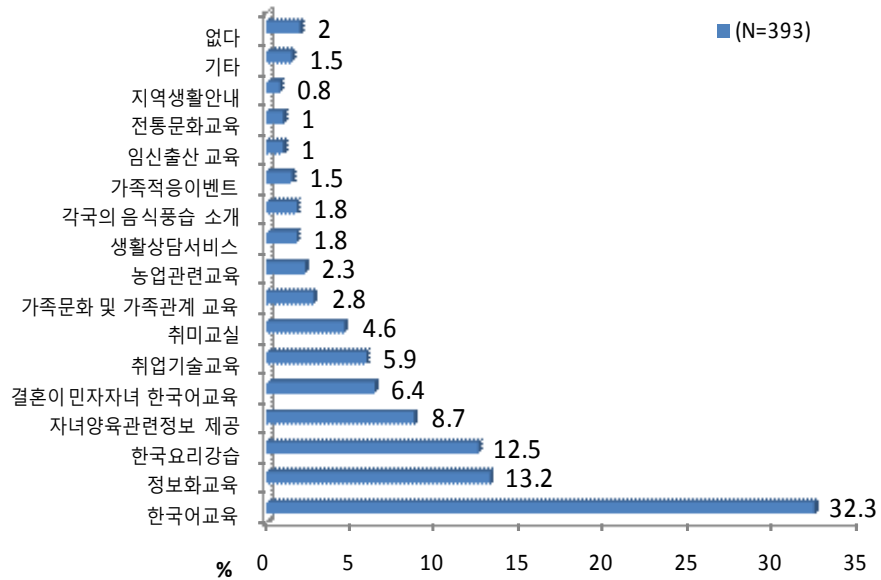


표 4-10. 주요 특성별 교육 수요

	한국어교육	자녀양육관련정보	취업기술교육	취미교육	농업관련교육
전체	32.3	8.7	5.9	4.6	2.3
연령대별					
25세 미만	38.8	9.4	3.6	0.7	2.2
25~35세	34.8	10.1	7.2	2.9	2.9
35~45세	23.2	8.5	9.8	9.8	2.4
45~55세	21.4	0	0	14.3	0
55세 이상	0	0	0	16.7	0
학력별					
무학	40	20	0	0	0
초졸	37.8	5.4	2.7	10.8	0
중졸	38.1	7.1	7.1	1.6	2.4
고졸	26.1	9.9	5	4.3	3.1
대졸	32.8	9.4	7.8	7.8	1.6
한국거주기간별					
1년 미만	70	0	0	10	0
1~3년	36.2	11.8	2.4	0.8	3.1
3~5년	35.6	6.8	3.4	2.5	0.8
5~7년	31.7	4.9	14.6	7.3	4.9
7년 이상	19.6	9.3	10.3	10.3	2.1

- 이주여성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농업관련 교육 프로그램으로 50.2%가 인터넷 농업정보 검색 교육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43.3%가 농작물재배기술 교육, 34.7%가 농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교육 등을 응답하였음.
  - 논벼, 채소, 일반밭작물, 특용작물, 축산 농가에서 인터넷 농업정보 검색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과수, 채소, 특용작물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배기술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즉, 영농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작물의 재배기술 교육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농업관련 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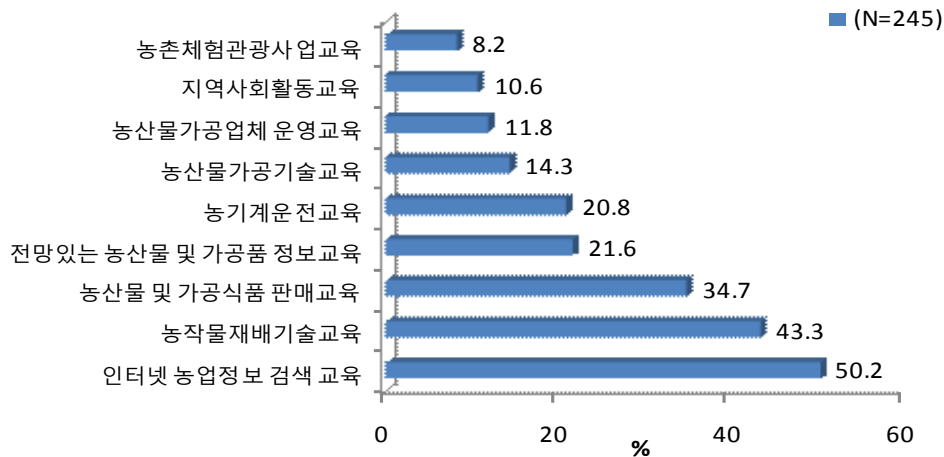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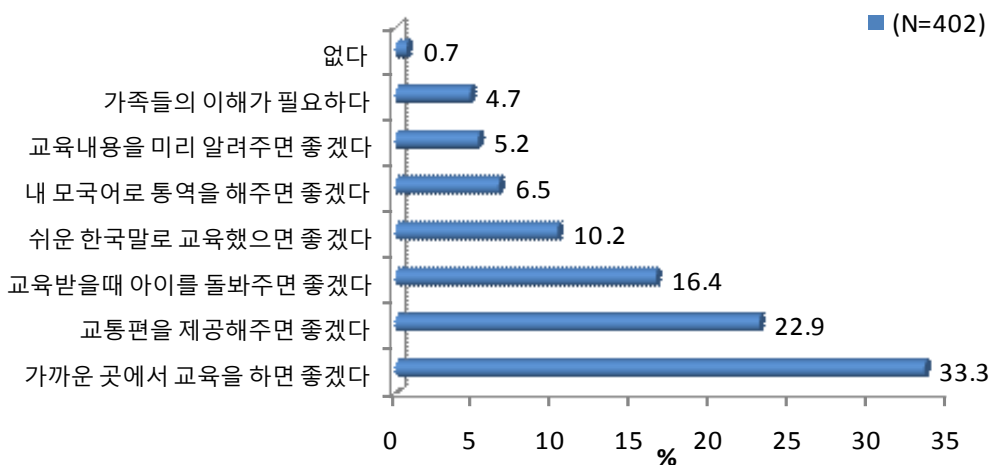


표 4-11. 영농형태별 가장 필요한 농업관련 교육 프로그램

	논벼	과수	채소	일반밭작물	특용작물	축산
농업정보 검색 교육	42.3	58.8	58.3	83.3	50	61.1
농작물재배기술교육	36.9	76.5	58.3	27.8	50	50
농식품 판매교육	34.2	47.1	33.3	16.7	25	44.4
농산물 소득 정보교육	23.5	11.8	27.8	16.7	25	5.6
농기계운전교육	18.1	41.2	25	5.6	25	33.3
농산물가공기술교육	14.1	23.5	11.1	5.6	0	27.8
농산물가공업체 운영교육	9.4	23.5	13.9	22.2	0	11.1
지역사회활동 교육	11.4	5.9	13.9	11.1	0	5.6
농촌체험관광사업 교육	6	11.8	16.7	11.1	0	5.6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33.3%가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응답하였음. 그 다음으로 22.9%가 ‘교통편을 제공해주면 좋겠다’, 16.4%가 ‘교육을 받을 때 아이들을 돌봐주면 좋겠다’ 등으로 응답하였음.
  - 결혼초기에는 임신, 육아, 집안 살림 등으로, 결혼정착기에는 농사일, 집안일 등으로 시간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원거리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자가용이 없는 여성들은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교육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즉, 교육의 참여도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거리 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함.
  - 조사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60% 이상이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두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맡기는 비율도 낮아, 대부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받는 실정임. 따라서 교육장에 어린아이들을 돌보는도우미 또는 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교육 참여 및 효과성이 감소할 것임.

그림 4-1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교육을 실시 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혜택 (1순위)



## 제 5 장

---

###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 1.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정책 현황과 당면과제

##### 1.1.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현황

-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과거에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왔던 다문화가정 문제, 즉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사회적응 및 발전 방안 등에 관한 정책이 최근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06년 4월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과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5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교육인적자원부)과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외국인정책위원회)를 발표하면서 국제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되었음.

- 특히 2007년 4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통과되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단일민족 순혈주의에 근간을 두고 외국인에 대한 통제와 관리 중심의 이민정책에서 탈피하여 상호이해와 존중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민족, 다문화 정책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었음.
- 여러 중앙정부 부처의 다문화정책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현재도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에 있음. 중앙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정책 과제로 이어져 구체화되고 있음.

### 1.1.1. 중앙부처별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추진 실태

-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각 부처 특성에 따라 다문화 가족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을 제외한 다른 부처의 다문화정책 지원대상은 결혼여성이민자와 그 자녀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 등을 포함하고 있어, 결혼여성이민자의 여건과 상황을 반영한 정책은 거의 없음.
  - 결혼여성이민자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의 대부분도 주로 결혼여성이민자 당사자와 관련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만이 부분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결혼여성이민자 관련 정책은 국내 정착과 적응 지원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물식품부만이 결혼여성이민자의 인력화 및 역량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 5-1. 중앙정부 부처의 주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부처	진담부서 (과/팀)	주요 내용
농림수산물 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여성 팀	‘이주여성농업인 기초영농교육’ 시범사업(‘08) ‘이주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도입 예정(‘09) 농협, 농업연수원 여성농업인단체 등의 이주여성농업인 농 촌생활 적응 사업 지원
보건복지 가족부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0 8.9.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80개소)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정책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국 다문화정책팀	이민자 문화활동 지원(다문화청년캠프, 다문화축제, 지역생 활문화축제, 문화가이드북) 다문화 사회 이해증진 홍보(다큐멘터리·공익광고 제작, 다 문화포털 등)
여성부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보호체계 강화
법무부	사회통합과	인신매매성격의 국제결혼 방지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신청요건 완화(‘05.9) 결혼이민자의 이혼·별거시에도 자녀접견을 위한 국내 체류 허가
교육과학 기술부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계획 수립(‘07.6)
노동부	-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한글교육, 취업상담 등) 다문화가정 초청 정보화 교육

## 가. 농림수산식품부

- 2007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기초 적응 교육
  - 방문교육도우미를 통한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 (26억, 30개시군)
  - ‘우리엄마의 한국어’ (영어·중국어·베트남·타갈로그어), ‘특별한 며느리의 행복찾는 농촌살이’ (영어·베트남어) 등 발간
  -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의 통합·조정에 따라 '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 ‘이주여성농업인 기초영농교육’ 시범사업 실시('08) 및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이주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도입 추진('09 신규)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신규 농업 인력으로 자원화
  - 기초 사회적응 훈련을 마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중 영농희망과 정착의지가 강한 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농업일반, 지역농업, 농기계사용법, 현장체험, 소양교육 등 기초영농교육 실시 (9개도, 540백만원)
  - 지역의 여성농업인을 활용하여 영농기술교육 및 농촌적응을 지원하는 1:1 맞춤형 영농정착 지원 계획 (700명, 527백만원)
- 농협, 농업연수원, 여성농업인단체 등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농협 문화복지센터의 다문화여성대학 시범 운영
  - 농업연수원의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교육과정 운영: 120명(60부부), 연 3회, 2박 3일
  - 여성(농업인)단체와 농촌 다문화가정 결연사업 추진(친정 맺어주기 200쌍, 가족방문, 음식나누기, 멘토링 등, 보육도우미, 생활상담 등 여성농업인단체회원 중심의 적응지원)

## 나. 보건복지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시행(2008. 9. 22)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3월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
  - 주요 내용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산전 산후의 건강관리지원, 아동 보육과 교육, 다국어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등
  - 현재 전국적으로 80개가 운영 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
  
-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실시
  -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과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입국전 단계부터 정착기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가정의 생애주기에 따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① 1단계: 입국 전 결혼 준비기
  - (1)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08.6.15)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외국 현지법령 준수, 허위·과장광고 금지, 손해배상 책임, 서면계약서 등 의무규정 및 위무위반에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 결혼중개업체로 인한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피해 예방
    - 국제결혼주개업자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08년, 1,200

여명)

(2) 결혼이민 예정 여성에게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 '07년 12월부터 베트남과 필리핀에 국제결혼이민관(영사)을 파견해 국제결혼 관련 상담과 한국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주재국 정부·비정부 기구와 협력활동 강화 추진(한시적으로 1년 파견)

※ 주호치민영사관(베트남) 및 주필리핀대사관 5급 각1명 파견(1년간)

- 몽골, 캄보디아 등 현지에서 결혼희망여성 및 결혼이민자가족 대상 「상담콜센터」 운영, 비자발급 대기여성 대상 「출국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부관계자 및 민간 상담원 대상 정부간 협력강화 및 상담원 교육

(3) 한국인 배우자 대상 결혼준비교육 추진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2008년 9월 22일 이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 변경)에서 결혼이민여성 입국 전 한국인 배우자에게 사전교육 실시

② 2단계: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1) 집합, 방문 및 온라인교육, 방송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 집합교육: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
- 방문교육: 한국어교육 지도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온라인교육: 온라인(<http://e-campaign.kdu.edu>)을 통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로 수강 가능
- 방송교육: 방송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2)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출산 1~2개월을 앞둔 출산 예정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제공

(3) 종합 생활정보 제공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국어판 생활·정책 정보지 Rainbow+를 연 4회 발간(한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혼합판)
-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9억원, '09년 신규사업)를 시범 실시할 예정

(4) 위기 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 가족폭력 피해 상담·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긴급전화(1366센터) 및 전용 상담터, 법률구조기관 등 관련 기관간 연계 강화
- 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부부관계, 부모자녀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추진

③ 3단계: 자녀양육 및 정착기

(1)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여성의 양육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실시('08년에는 아동양육지도사 1,600명을 파견하여 10,240가구를 지원할 예정)
-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지원프로그램 개발

(2) 취업역량 강화 교육 실시: 영농기술, 정보화 및 면접기술 등 취업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 지원

- 영농기술교육: 농촌거주 결혼이민자를 위한 영농기초, 농기계사용법, 영농컨설팅 등을 통한 농촌사회 정착 및 농업인력 육성(농림수산식품부와 연계하여 추진)

- 취업교육: 직장예절, 면접기술 및 구직등록, 기술교육 등 취업능력 향상을 통한 경제적 자립 능력 지원
- 정보화교육: 컴퓨터 및 인터넷활용기술 등을 통한 정보습득 및 온라인 교육 참여능력 제고로 정보 활용 능력 배양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수요가 많은 취업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08년, 28억원 →'09년, 48억원).

#### ④ 4단계: 역량 강화기

##### (1) 이민자 적합 직종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 다문화강사 양성을 통한 지역 내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활동 지원연계
- 원어민 외국어강사를 양성해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보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2) 다문화사회 통합 선도자 육성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내에 출신국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이를 통해 정보 공유 및 정서교류 활동을 지원하며, 출신국별 초기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멘토 역할 수행
  - 결혼이민자 및 그 배우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과 온라인카페 운영으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다문화가족 정책을 발굴하고 발전방향 모색
- ※모니터링단 온라인카페(<http://cafe.daum.net/tmfcenter>)

#### ⑤ 전체 단계: 다문화역량 강화

##### (1) 다문화정책 추진기반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08년 9월 22일)으로 중앙-지방-NGO의 유기적 연계 및 체계적 추진체계 기반 구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및 자녀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센터 설치 및 확대계획: ('06)21개소→('07)38개소→('08)80개소→('09)110개소→('10)140개소

(2)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 전국대회'(다문화가족-활동가-지역사회) 및 지역포럼 (5개 시·도)추진 ('08.10)
- 다문화 봉사대 구성 및 활동

(3)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다문화가족 정보매거진 「Rainbow+」 발간
-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 정책 정보제공
- 연 4회(4, 7, 9, 12월) 5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등)로 발간
- 시·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80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 해외공관 등 배포(7만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1) 사업추진과정

-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문화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6년 21개 지역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2007년에는 38개소, 2008년 80개소(개소당 사업비 50백만 원)로 확대 지원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결혼이민자가족지원팀)를 2007년부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역센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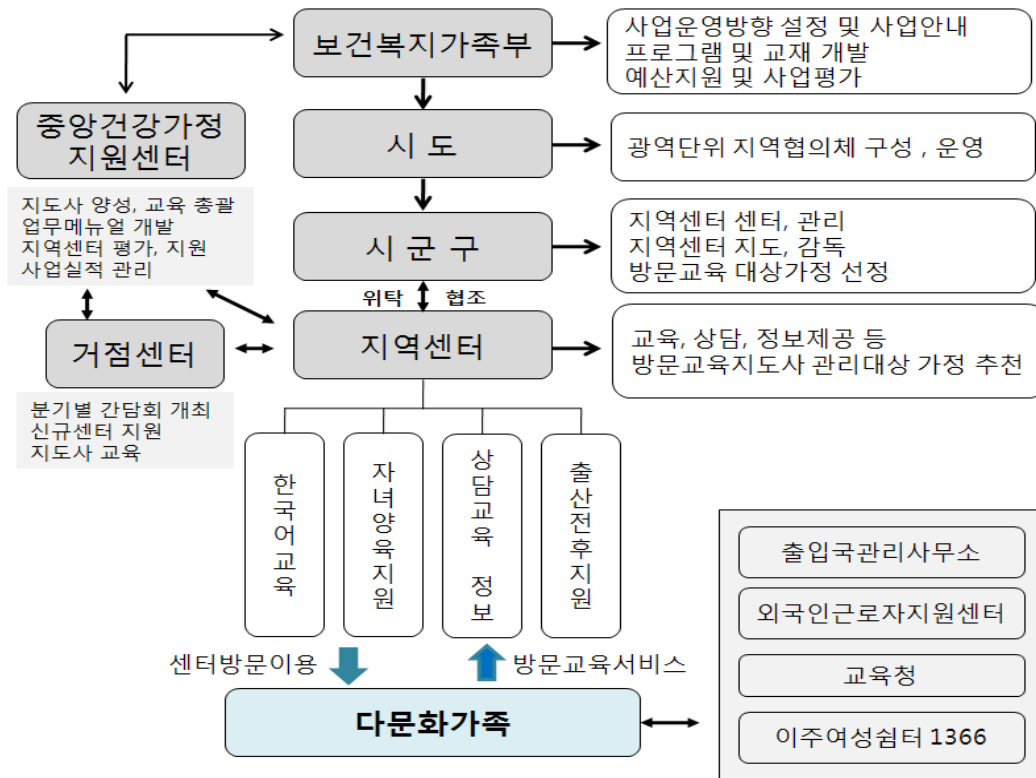
운영방식은 시도 및 시군구 직영 또는 민간위탁방식

-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2) 사업목적

-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를 구축
-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성 제고 및 다문화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

그림 5-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추진 체계



자료: 2008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가이드북(<http://tmfc.familynet.or.kr>)

### (3) 지역센터의 사업 내용

####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 필수사업은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 상담, 자조집단 운영이며, 센터별 특화사업은 주로 정서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역량강화, 다문화인식개선, 전문인력양성, 기타사업 등에 관한 내용임.

#### ② 방문교육사업

-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지도사)를 양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③ 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 서비스 대상 인근지역 시군구까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부 또는 관련단체, 관공서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결혼이민자가족 지원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함
- 거점센터 주관 상담슈퍼비전, 분기별 간담회 참석
-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및 정보제공

#### ④ 결혼이민자 피해 구조 및 지원

- 센터 운영 담당 종사자는 센터 내방자, 외부기관 연계자, 기타 가정방문 시 상담 등을 통해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갈등, 이혼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보호 결혼이민자에 대해 외부기관 연계체계를 활용하여 신속히 지원
- 방문교육지도사는 방문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 등에 대해 적극 상담하여야 하며,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 방문교육 담당자는 신속히 외부기관 연계체계를 활용하여 지원

표 5-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필수사업/특화사업 예)

사업구분	세부사항	
필수사업	한국어교육	◦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교재연구반
	한국문화 이해교육	◦ 한국문화이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가족교육	◦ 배우자대상: 다문화이해, 부부관계, 부모역할, 육아, 의사소통 등 ◦ 시부모대상: 다문화이해, 시부모역할, 의사소통 등 ◦ 결혼이민자대상: 가족생활, 가족관계, 육아, 의사소통 등 ◦ 자녀대상: 다문화이해, 가족관계, 가족 및 자녀역할, 의사소통 등 ◦ 통합가족대상: 다문화이해, 가족의 의미, 가족 및 자녀역할, 의사소통,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강화 프로그램, 가족여가 등
	상담	◦ 센터내 상담, 전화상담, 가정방문상담, 통역원 배치, 쉽터운영, 유관기관 연계
	자조집단	◦ 자조집단 운영: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자조집단 최소 1개, 배우자 자조집단 최소 1개 운영 ◦ 자조집단 대표자 모임 지원: 전국 결혼이민자가족 대표자 모임 및 지역센터별 자조모임 대표자회의 정기적 개최
특화사업	정서지원	◦ 결혼이민자교육시 자녀보호 및 자녀지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및 자녀멘토 연계 및 심리 정서치료 사업, 동아리(협창단, 품앗이, 풍물, 무용, 연극, 동화구연), 보건·의료지원 교육 및 연계, 한국어말하기대회 및 노래자랑대회 참가
	결혼이민자가족역량강화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 한국어강사 및 가정폭력상담원 양성, 다문화강사 및 원어민강사양성, 통·번역사 양성, 컴퓨터교육, 운전면허교육, 직업교육 등 ◦ 배우자·자녀·기타가족 역량강화사업: 배우자·자녀·시부모 등 출신국 언어교육, 자녀 한국어·영어교육, 배우자 직업교육 등
	다문화인식개선	◦ 다문화강사파견, 다문화관련 심포지엄, 다문화캠페인, 다문화축제 및 지역축제 개최시 음식 및 의상체험, 다문화교육 등
	전문인력양성 (일반인대상)	한국어강사양성, 가정폭력상담원 양성, 산모도우미, 자원봉사자교육
기타	①협의체구성 등 정기적 사업 ②개소식 등 센터 내 행사 ③종사자 회의 및 교육(중앙센터, 거점센터 등) ④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네트워크 회의 등 참가 ⑤홍보사업(홍보물 제작, 언론매체 기사보도, 전국대표번호 1577-5432 개설)	

자료: 2008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가이드북(<http://tmfc.familynet.or.kr>)

## 다.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책국 다문화정책팀 신설('07.11.)하여 한국어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지원 사업 추진 및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 존중과 내국인·이주민간의 상호 문화적 소통을 위한 정책
  - 다문화사회 문화 환경 조성, 이민자 문화 활동 지원,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원, 다문화 사회 이해증진 홍보, 양성평등업무 총괄
  - 이주민 한국어 및 문화예술교육 사업 기획 및 운영지원
  - 이주민 등 소수자 문화활동 및 체험지원(다문화청년캠프, 다문화축제, 지역생활문화축제, 문화가이드북)
  - 다문화사회 이해증진 홍보(다큐멘터리, 공익광고 제작, 다문화포털 등)
  - 결혼이민자 대상 박물관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 강사 양성 과정』 개설
  - 다문화 가정과 그 2세들이 편견 없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
  - 2008년 9월25부터 3개월간 다문화 교육을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다문화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 문화예술교육 원리 및 실제,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방법 등 다문화 강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
  - CETA(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 과정’ 수료증 및 초등학교 다문화 강사 기회 제공
  - 우수 성적자 7명으로 ‘다문화 강사팀’을 구성해 12월 초등학교에서 시범 교육을 실시: ‘다문화 강사팀’은 기존의 특정 국가 1인 강사를 중심으로 진행해 온 다문화 교육과 달리,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러 명의 강사들로 구성돼 다문화 교육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 '08년 결과를 반영하여 '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다문화 교육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
- 2008년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지원정책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하였음.
  - 한국사회 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것(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증진,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다문화 정보 제공 활성화와 함께 다문화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것(문화 다양성 이해와 다문화 감수성 추진, 다문화 콘텐츠 발굴, 다문화 매개인력 양성)
  - 다문화 자원의 창조적 역량 증진을 위한 것(타 문화권과의 문화예술교류 활동 강화, 다문화성이 반영된 문화활동 지원)
  - 다문화정책 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것(다문화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법·제도 마련) 등

## 라. 교육과학기술부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계획을 수립('07.6)하여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학습 결손 방지 및 학교 적응 지원
  - 주요 정책 과제는 ① 다문화가정 자녀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 ② 대학생 멘토링 대상자로 다문화가정 자녀우선 선정, ③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1대1 결연을 통한 자녀의 정서적 안정 도모, ④ 교원연수 강화(소수자 배려 교육·한국어(KSL)교육·한국문화 교육), ③ 교육과정 개정시 중3 도덕교과에 '타문화 편견 극복'단원을 포함하고 '06년 하반기에는 우선 '교과서 지도 보완자료' 발간·배포, ⑤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사업 통한 지역단위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⑥ 불법체류자 자녀의 교육권 보호 위한 부처 협의 추진
  - 전국 시·도에 공통되는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점점·관리하고, 시·도별 특성에 맞는 특수사업을 공모형식을 통해 선정·지원하며, 연구·

개발을 위한 ‘중앙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것임.

- 부처간·지역간 협력체제 구축, 교사양성, 교육과정 및 교과서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권 보장 등 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둠.
- 다문화교육센터 지정·운영

#### 마. 행정안전부

- 지방행정연수원에 다문화사회관리과정을 신설·운영
  -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실무 위주로 교과를 편성함.
- 국내거주 및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내국인과 차별 없는 혜택을 받도록 정책 개선

#### 바. 노동부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 한글교육, 취업상담 등
- 일자리 알선 및 훈련 지원
- 다문화가정 초청 정보화교육
  - 정보화 겨울캠프 운영
  - 정보화로부터 소외된 지방거주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어머니를 초청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속한 사회적응을 지원함.
  - 실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인터넷사이트 검색, 홈페이지 사진꾸미기 등 교육

## 사. 법무부

- 인신매매 성격의 국제결혼 방지
- 결혼비자 발급 서류·절차 표준화
-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07.5)
  - 외국인 처우보장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
-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07.5)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09.11) 실시 예정
  - 이 제도는 이민자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 생활법률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교육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이민자에게는 귀화필기시험 면제, 국적 대기 기간 단축, 면접심사에 긍정 고려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
  - 일반귀화 신청자와는 달리 결혼이민자에게는 초급수준의 한국어 과정 이수로 완화하고, 과정 이수 시간이 적게 걸릴 수도 있으므로 시간을 규정하지 않음

## 아. 여성부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보호 체계 강화
  - 가정폭력 등 피해여성에 대한 이주여성 1366센터 활성화 및 쉼터의 단

## 계적 확대

- 자국 출신 통역 상담 인력 훈련·배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1.1.2.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 실태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중앙의 지원 정책 계획과 세부지침을 따르면서 각 지자체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자체적인 정책수요에 따라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음(부록 1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요약하면, 한국생활 적응 및 문화 이해(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문화유적 탐방, 전통문화 체험, 생활예절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가족상담, 부부관계 상담, 가족관계교육 등), 사회적 연결망 형성 지원(멘토링, 자매결연, 결혼이민자모임 지원 등), 여성복지 증진(임신·출산·건강 지원 등), 취업 기술교육 및 일자리 알선, 일반교육(컴퓨터교육, 교양취미교육, 자녀교육 등), 문화교류, 고향방문 지원, 문화행사 개최 등임.
-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전통문화체험, 생활예절교육 등으로 지자체 지원정책은 한국문화이해와 생활적응 지원에 초점을 맞고 있으며, 사회생활 연결망 형성 지원, 여성복지 증진, 취업 기술교육 및 일자리 알선, 문화교류 등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음.
  - 사업 운영 주체와 방식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역할 정도에 따라 지자체가 주관하는 경우, 위탁하는 경우, 협력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



표 5-3.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황('06-'07)

구 분	사업내역	
부산	한국어 강좌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외국인 종합생활 안내책자 발간	
대구	컴퓨터교실 운영 통상모니터 요원 운영 상담메뉴얼 제작, 활용	
대전	외국인 카운슬러 운영	
경기	도	경기도내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국제결혼여성이민자 한마당 축제 다문화자녀교육지원 이주여성을 원어민 자원봉사자로 활용 공무원도우미(Foreign Friends Helpers) 발족
	수원시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문화체험 등
	성남시	외국인주부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한글교육, 요리교실, 문화교실 등)
	안양시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문화체험, 예절교육 등), 한국어 및 요리교육
	광명시	이주여성 보호 사업(문화활동, 미술치료, 예술치료 등)
	광주시	한국어 교육
	포천시	한국어 교육
	안산시	개별/가족상담, 가정방문상담, 한글 교유 및 컴퓨터 교육
강원	도	외국인 주부 멘토링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외국인 주부를 위한 문화교실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PC실무과정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양성평등 교육 및 부부외출프로그램 평등가족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외국인주부 부부연수회 외국인주부 문화탐방
	원주	한글교육반 강사수당, 연찬회참가여비
	강릉	외국인주부 연찬회, 전통문화체험
	횡성	취학전 자녀양육비 지급, 가족연수회, 한글교육 수강생 현장학습, 교류 참석 여비 보상
	평창	외국인 주부 교육 및 행사참가 여비
	화천	한국어 교육, 예절교육, 향토문화탐방, 요리교실, 가족캠프, 외국인주부 가족의 날
	양구	한글교육, 전통문화교육, 외국인주부 강사활용 외국어 교육
	인제	문화체험, 전통예절교육
	고성	외국인주부 교육(전통요리, 한글), 문화유적지 답사
충북	도	부부연수, 우리문화알기 프로그램, 순회교육(가족문화, 임신, 육아), 이주여성정착지원센터 지원(한국어교육, 문화체험, 자녀놀이방 운영 등),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지원(한국어 교육, 법률상담, 문화교실 운영 등)
	청주시	문화체험
	충주시	문화체험
	청원군	외국인주부아카데미

표 5-3.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황('06-'07) &lt;계속&gt;

구 분		사업내역
충남	도	우리문화보급사업, 자녀학업자료지원, 다문화가정관련 문화행사 개최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 가꾸기사업
전북	도	여성결혼이민자 네트워크사업, 가족교육사업 결혼이주여성정착지원(문화적응, 언어교육, 문화탐방, 부부교육, 임신, 출산 지원 등)
전남	도	부부공동체훈련 지원, 다문화가정 화합도모 행사, 다문화가정 여성 자원 봉사자 교육
	여수	이주여성간담회, 이주여성보호 및 이혼관련 프로그램운영
	순천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
	나주	주부쉼터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지원
	담양	이주여성의 외국어 강사활동 지원, 가족공동체훈련, 한국문화교실운영, 문 화유적지 탐방
	곡성	한국어교육 및 문화교실 운영, 원어민교사 인력양성 사업, 외국인주부 여 성교육 참석 보상
	구례	외국인 여성 및 가족 한국문화탐방, 외국인여성 한국문화 예절 익히기
	보성	한글 및 문화교실
	화순	한글 및 문화학당 운영
	장흥	전통음식 및 꽃꽂이 교육
	강진	한글교육지원, 한글 및 문화적응 교육, 출산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해남	외국인주부 우리문화 적응교육
	영암	부부공동체교육, 출산용품지원사업, 한글교육 및 문화체험교육
	장성	한글교육 및 문화유적지 탐방
	함평	외국인의 날 행사 지원
영광	우리문화이해와 생활교육	
완도	전통문화강좌 운영	
진도	외국인여성주부 워크숍, 외국인 배우자 가정 지원	
신안	문화탐방 및 부부교육	
경북	도	우리말 공부방 운영,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피해 외국인주부 메토링제도 운영 외국인 한국어교육 강사수당
	안동	외국여성농업인 선진지 견학
	영양	이주여성간담회
	고령	외국인주부 전통문화체험교육
	상주	행복한 농촌가정 만들기 사업, 외국인주부 문화유적 탐방
	예천	외국인여성 및 자녀교육
경남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재발간, 부부교육, 생활 및 가족상담, 문화교육, 부 부(가족)캠프, 국제결혼가정학교, 결혼이민자 가족 어울림 마당 「이주여성 체험사례 발표회 개최, 친척 부모의 한국 초청 ,지자체 산하 여성단체회원과 친정어머니 결연사업을 추진

자료: 양애경 외., 2007.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p. 229-231.

## 1.2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당면과제

- 주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다문화정책의 당면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1.2.1. 다문화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정책 마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한국사회의 적응과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직까지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들이 자립적인 개체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강화 및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 방안이 부족한 편임. 따라서 기초 사회적 적응이 된 여성결혼이민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을 위해 본인의 능력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및 다양한 일자리 제공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더 나아가 중장기 정책으로 향후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할 다문화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함.
  - 노동부의 다문화 정책의 주 대상은 외국인노동자로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알선 및 취업훈련 지원 정책은 아직 미비함. 보건복지가족부의 생애주기별 정책에는 결혼여성이민자의 취업역량 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이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에 대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취업연계 직종의 범위가 외국어 강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1.2.2. 지역여건을 고려한 정책 추진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농촌에 거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영유아 양육 및 자녀 교육 문제, 복지 및 문화시설 부족, 교통편 불편, 영농활동 애로사항 등으로 도시 거주 국제결혼여성이민자보다 더욱 복잡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농촌 지역의 특성과 생활수준 차이 등을 고려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정부부처 다문화가족 정책들이 정책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과 현실적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농업 및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촌 결혼여성이민자 지원 대책이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임. 농림수산식품부도 2008년에 이주여성농업인 대상 기초영농기술교육 시범사업을 하였으나, 읍·면 단위의 이주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그 사업을 확대하지는 못한 실정임.
  -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문화지원 정책은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제공되고 있어 지리적 거리로 인해 상당수의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읍·면단위로 제공되는 정책도 관련 임신, 출산, 육아 문제, 정보의 부족, 가족들의 이해 부족, 교통편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정되어 있음.

## 1.2.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역할 분담

- 현재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책은 중앙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등에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와 민간단체 등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추진 체계가 부족하여 정책 차별성 없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와 민간단체간 협력체제구축과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차별화된 지원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처 또는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정책조율 등을 위해서 담당 부처 및 기관간 협의회 구성이 필요할 것임.

- 중앙정부와 지자체(시·도, 시·군, 읍·면간)간 정책추진체계 및 지역사회 내 정부기관과 민간지원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여, 다문화 지원정책의 중복성과 차별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1.2.4. 정책담당 전문 인력 양성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담당 전문 인력양성이 필요함. 즉, 다문화가족 지원 행정서비스와 다문화 관련 교육을 담당할 다문화 상담자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책이 확대되어야함.
  - 다문화가족 대상 정책을 집행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각 프로그램에 적합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큰 어려움 중 하나임. 농협의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담당자들과의 면담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현재 다문화가족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성이 약한 편임. 따라서 다문화 관련 전문가를 확보 및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다문화 교육 관련 강사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임.

## 2.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의 농업·농촌 인적자원화 방안

-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인적자원화를 위한 역량강화(empowerment)<sup>14</sup>는 교육을 통한 의식 또는 태도 (Attitude), 지식(Knowledge), 기술(Skill)의 향상이 필수적임.
  - 농가뿐만 아니라 농촌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위상 정립을 위한 이주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 역량강화의 실천요소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즉, 이주여성농업인에게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재교육과 재훈련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이주여성농업인의 다문화 역량은 영농활동뿐만 아니라 농외소득활동과 연계되어 발전할 수 있음.
  - 젊은 이주여성농업인이 농외소득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은 농업이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과의 관계성을 지닌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여성결혼이민자의 이국적 문화적 배경과 잠재능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 도농교류사업, 마을축제에서 이주여성 국가의 전통음식 및 가공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다양한 문

<sup>14</sup> 역량강화(empowerment)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개인적, 대인적, 사회·경제적·정치적 강점을 향상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증진시키도록 원조하는 과정임(Barker, 1991). 여성복지에서 임파워먼트는 여성 자신이 삶의 진실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여성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힘을 모아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임.

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운영하는 등 이주여성농업인이 주도하는  
농산물 가공 및 농촌관광은 새로운 농촌개발 방식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안전 농식품의 공급과 새로운 농가 및 농촌소득원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

- 따라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농촌 인적화 방안으로 첫째,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 둘째,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및 애그리비즈니스 창업 지원 과제를 제시함.

## 2.1.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

### 2.1.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본 설문조사 결과 이주여성농업인의 연령, 학력, 한국거주기간 등에 따라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다르게 나타나, 이주여성농업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 단계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연령층이 낮을수록 한국어교육, 자녀양육관련 교육 등에 관심이 높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취미, 취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임.
  -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기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국거주기간이 1년 미만에서 한국어 교육 수요가 가장 높고, 5년 이상에서 취업기술교육, 취미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이 주로 결혼초기 젊은 여성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글, 생활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거주기간이 상당히 지난 중견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따라서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임. 즉, 이주여성농업인의 단계별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단계별 교육체제 구축이 필요함. 즉, 모든 교육과정을 초, 중, 고등과정으로 구분하는 등 이주여성농업인의 수준과 교육수요에 맞는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함.
  -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단계화를 위해 단계별 표준화된 교재개발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 학점은행 등 평생학습 체제를 마련하여, 이주여성농업인의 학습 결과가 학위나 자격 취득 및 정책자금 지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현재는 이주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미흡하고, 단편적인 교육으로 운영되어 교육결과의 활용 및 정책연계가 곤란한 실정임.
  - 이주여성농업인 대상 교육훈련 기관들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현재 중앙정부, 시도와 시군청, 농협,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단체, 대학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교육은 대부분 한국어 교육, 문화 및 생활안내 등 기초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춘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더욱이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난립해 있으나 체계적인 역할분담이 부족하여 교육내용이 대부분 중복되어 있음.

### 2.1.2. 단계별 영농기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 영농 희망 및 정착 의지가 강한 이주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영농기술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본 설문조사에서 결혼초기의 20대, 30대 초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는 임신 등의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이해 부족, 영농기술 부족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 영농활동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이주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의 부담이 외에 큰 애로사항으로 영농 및 농기계 기술 부족이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음.
  - 조사대상 이주여성농업인의 90% 이상이 농사기술을 가족에게서 습득하였다고 응답하여, 체계적인 농업기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 결혼초기에는 한국어 교육과 기초영농기술 교육을 병행하여 농업 이해 및 농업인 자긍심 고취가 필요한 시기임.
    - 남편의 직업을 이해하고 기초영농기술을 익혀, 집안 농사일을 도울 수 있을 정도의 기초영농기술 교육 필요
  -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기초사회적응이 된 영농 희망 및 정착 의지가 강한 이주여성농업인 대상 전문 영농기술교육 실시 및 정책 지원 계획 수립
    - 한국어를 못한다고 응답한 여성의 25%만이 영농교육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한 후에, 본격적인 영농교육을 하는 것이 참여율과 성과를 높이는 방법일 것임.
    - 이론 위주의 교육보다는 지역의 선도농가의 고급기술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선도농장을 지정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현장중심의 실습교육을 병행하는 체험학습이 필요함.
    - 일정 수준의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기반이 취약한 다문화 세대를 위한 유희농지, 임대농지 등을 우선 임차하여 영농기반 확보 지원
    - 일정 수준의 영농교육을 이수한 이주여성농업인에게 후계여성농업인 선정 가산점 부여

### 2.1.3.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

- ‘2008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영농교육 지원<sup>15</sup>’ 사업에서 이주여성농업인 대상 영농교육 운영의 문제점은 원거리, 언어수준 차이, 영농으로 인한 참여 저조, 육아, 영농교육의 이해 부족 등으로 나타났음. 이는 본 설문조사에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교육 참여 어려움에 대한 조사결과와 거의 동일한 결과임.
  - 결혼초기에는 임신, 육아, 집안 살림 등으로, 결혼정착기에는 농사일, 집안일 등으로 시간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원거리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움.
  -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영유아 자녀를 두고 있어 대부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받는 실정임<sup>16</sup>.
- 교육 참여 시간 부족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시기를 농한기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교통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교육 장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해주거나 또는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음.
- 교육장에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시설 및도우미 지원

<sup>15</sup>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는 사회적응 훈련을 이수한 영농희망 또는 정착의지가 강한 농촌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음. 24개 시군에서 330명의 이주여성농업인이 기본소양(한국어 등 문화교육, 정보화 교육)과 기초 영농교육(농업일반 등 이론교육, 농기계 및 농약 사용법 교육, 작목교육, 현장체험)의 교육내용으로 교육을 받았음.

<sup>16</sup> 조사대상 이주여성농업인의 66.7%가 6세 미만 자녀가 있으며, 이 중 41.8%가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음.

- 시간부족, 교통편 불편 등의 교육 참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집체식 교육뿐만 아니라 이주여성농업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는 소규모 교육방법도 병행할 수 있음. 즉, 집체교육, 방문교육, 마을 순회교육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닌 수요자인 이주농업인의 요구에 맞추어서 수준별 학습,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은 교육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방문교육의 한 방안으로 지역의 여성농업인이 이주여성농업인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영농기술교육 및 농촌 적응을 지원하는 1:1 맞춤형 영농지원<sup>17</sup> 제도를 정착할 필요가 있음.
  
- 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의 이해와 도움을 얻기 위해 부부 공동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교육의 성과를 높이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남편들의 자조모임’의 모범사례인 충북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편 자조모임은 격월로 실시하는 부부동반 모임에서 부부갈등을 해소하는 대화법도 함께 배우는 기회를 가지고 있음.

## 2.2. 직업능력개발 및 애그리비즈니스 창업 지원 대책

### 2.2.1.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마련

<sup>17</sup> 농림수산식품부의 2009년 신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음.

- 현재 중장년층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장년층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취업 및 창업 의향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sup>18</sup>. 농촌에 거주한다고 또는 농업인 남편과 결혼하였다고 하여 모든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농촌에서 직업 및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이주여성농업인의 다문화역량은 더 잘 발휘될 수 있으며,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의 농촌 정착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농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활성화는 농가 및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주여성농업인의 연령, 학력, 의향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마련
  - 20대, 30대 초 젊은 이주여성농업인은 취업, 시간제 근무 등의 농외소득활동 의향이 높고, 35~45세 장년층 이주여성농업인은 농관련사업 취업 및 창업 의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주여성농업인의 직업교육 훈련과 자녀 돌봄 서비스 연계
  - 농외소득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충실화와 함께 교육 훈련을 받을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자녀 돌봄 서비스 마련이 필요함.
- 마을 노인돌봄 도우미, 농촌관광 및 문화행사 도우미, 다문화강사, 영어강

<sup>18</sup> 많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넉넉지 않은 살림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며, 또한 가난한 친정에 송금하기 위해 경제력을 갖기 원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 식구들의 반대, 일상적인 집안일이나 농사일 등으로 이 조차도 여의치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최혜자, 2008).

사, 공부방 교사 등과 같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이주여성농업인의 다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농촌형 일자리 창출

- 이주여성농업인의 절반이상이 보육, 집안 살림 등의 가사부담에 의해 정상적인 농외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노동시장 진입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진입하더라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농촌에서 가사일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을 개발하여 이주여성농업인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하도록 기회 제공이 필요함.
- 농산물을 수출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인턴사원으로 우선 채용

#### 이주여성, 어린이집 강사 됐다

여성부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다문화 교육강사로 양성, 어린이집 다문화 교육강사로 활용하며 이주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켜 주목받고 있다. 여성부는 대한 YMCA연합회와 공동으로 '어린이 다문화 교육과정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5월부터 전국 27개 어린이집에서 월 1회 어린이집 '다문화강사 양성교육'을 실시, 81명의 다문화강사를 배출했다.

현재 강사로 양성된 81명이 이주여성들은 전국 27개 어린이집으로 파견돼 '다문화' 단원 교사로 활동하며 자국의 언어와 동요, 음식 등 다양한 문화를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다문화교육을 진행 중이다. 매일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지역의 이주여성농업인들도 얼마든지 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2008. 9. 22)

#### 대한 YMCA,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대한 YMCA는 전국 각지의 결혼이민 여성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 7개의 결혼이민 여성에게 적합하고 취업에 유리한 직종을 선정하였다. 7개 직종은 결혼이민상담원, 외국어 및 한국어 다문화 강사, 지방계약직공무원, 의류수선사, 계기검침원 및 안전점검원, 지역특산물 제조사, 바리스타 등이다.

한국에 거주한지 3년 이상인 결혼이민 여성은 모국어와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생활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결혼이민여성상담원과 전문강사에 유리하다. 최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적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결혼이민여성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전남 함평군 사례). 의류수선사는 베트남, 필리핀 여성의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선정했고 계기검침 및 안전점검원은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면서 집주변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했다. (여성농업인신문, 2008. 12. 23)

### 국제결혼여성이민자를 위한 ‘인턴사원제’

경상북도는 8월부터 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시행한다. 직장생활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거주지 주변 인건제직업체에 인턴사용으로 채용돼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영주시는 교육기간동안 관용버스를 이용해 이주여성들의 출퇴근을 돕게 되며 인턴기간 3개월 동안은 도비 30만원, 시비 40만원을 포함한 총 월 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인턴업체에 지급한다. 경산시도 공공근로사업에 관내에 거주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 3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여성농업인신문, 2008. 12. 23)

## 2.2.2. 농관련사업 창업 지원

- 이주여성농업인의 다문화 역량을 이용한 농관련사업 창업을 농산물가공, 농촌관광, 지역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 강구
  -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에 이주여성농업인의 다문화식품 가공사업도 포함하여 선정
  - 이주여성농업인이 밀집된 지역의 농촌관광, 농촌마을사업에 다문화 음식 및 식품 제조 판매 등 지원
  - 지자체의 지역축제, 5일장 등에 이주여성농업인의 다문화 음식 및 가공품을 판매하는 상설판매코너 입점권 우선 배정
- 이주여성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 음식역량을 활용한 창업 지원<sup>19</sup>
  - 외국음식 재료로 사용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는 음식 식재료 생산 기술 교육 지원
  - 외국과 국내음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음식문화 창조나 상품화 될

<sup>19</sup> 최근들어 다문화 식성은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입맛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고연령층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적 식문화 현상이 두드러짐.

수 있는 퓨전음식 개발 지원

- 지역 관광 상품이자 지역의 문화컨텐츠로 개발, 장기적으로 이주여성농업인이 만든 다문화 음식의 산업화 추진<sup>20</sup>
- 지역 단위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식품 생산자 조직을 결성하고 이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산기술 지원을, 농협에서는 유통 지원을 하는 공동 생산, 공동판매를 지원해주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김이선 외., 2007).
- 이주여성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식품의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공동 판매하는 방안 강구
  - 공동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과 이주여성농업인 가공품 박람회 등 소비자와의 정기적 만남의 장 마련
- 이주여성농업인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 중심으로 지자체 차원의 브랜드화로 발전시키는 방안
- 일본 야마가타현 도자와무라 지역에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인 여성들이 늘어나게 된 것을 계기로 한국의 충북 제천시 송학면과 교류를 추진하고 1990년대부터는 한국의 김치 등을 지역에 소개하는 교류회를 꾸준히 개최해왔음. 나아가 도자와무라는 도자와류 김치와 냉면 등을 지역 특산물로 개발하고 이를 홍보, 판매하기 위하여 지역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판매관과 식당으로 구성된 ‘고려관’(1997년 9월 개관)을 건설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도자와무라의 특산물인 김치와 냉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김이선 외, 2007).
- 소규모 업체의 마케팅 전략 교육과 식품위생법, 품질인증제도 등에 관한 식

<sup>20</sup> 예를 들어, 베트남 음식은 프랜차이즈라는 음식산업의 영역에서 보다 산업화 되어 고급식당에서 일반식당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품관련 법제도 교육을 통해 이주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사업아이디어 찾기, 세무지식, 재무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 도입 및 실시
- 이주여성농업인의 네트워크 부족이 경영상의 큰 약점이므로 기술 및 경영 정보 공유, 애로 해결의 장 마련이 필요함.
- 품목별 연구회를 조직하여 같은 사업을 하는 국내 여성농업인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선도 여성농업인 또는 성공한 이주여성농업인과 신규 창업 이주여성농업인을 연결시켜 1대1로 기술지도와 경영 문제를 상담하여 사업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제도 운영
- 농업관련사업 참여 및 창업에 여성농업인과 이주여성농업인의 관심은 높은 반면, 여성을 대상으로 농업관련사업과 관련된 기술 및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음.
- 이주여성농업인을 포함한 여성농업인의 종합적인 창업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창업센터(가칭)’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성농업인창업센터’는 창업상담, 정보제공, 기술상담, 품목연구회 운영, 경영교육, 정보화 교육, 해외연수, 산학 협동 등 여성농업인의 창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기관이 될 것임.



### 3.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체계 정립 방안

#### 3.1. 자녀교육 지원 및 후계세대 육성

- 농촌 다문화 자녀는 미래의 농업·농촌 후계세대로서 그들의 성장 발전이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중요한 인적 자원임. 따라서 다문화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정착시켜 우리사회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방안도 중요함.
  - 이주여성농업인이 평균 2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향후 15년 후,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절반정도가 다문화 자녀로 구성될 것임.
- 본 연구에서 젊은 이주여성농업인에게 육아 문제는 영농, 교육, 농외소득활동 등 모든 활동의 큰 제약요인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이동거리로 인한 보육시설 접근성 제한, 부정기적인 소득으로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3세 미만의 영유아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이주여성농업인이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실정임.
- 보육시설의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으로 마을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인근에 보육시설이 없고, 아동수가 적어 보육시설이 들어서는데도 어려운 지역의 소수 아동을 가정 등 일정한 장소에서 보육하는 가정보육도우미제도 시행 검토

-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의 양육 등으로 언어발달 지체나 문화 부적응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취학 전 다문화 자녀의 언어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sup>21</sup>

####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 확대

경기, 강원, 경남 등 전국 65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0세~만 12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부모가 긴급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12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농업인들도 교육 등의 외부활동 참여 부담을 덜게 됐다.

시간당 돌보미 비용 5,000원 중 4,000원이 지원되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저소득가정의 서비스 활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월 80시간 이내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기관에 회원등록을 한 후 서비스 이용 1~2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농어민신문, 2008. 9. 22)

- 설문조사 결과, 이주여성농업인이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자녀 교육문제 때문인 만큼 자녀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 따라서 자녀 교육은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농촌 정착을 위해서도 선행되어야 할 정책임.
  - 상당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경제, 사회적 지위, 언어, 문화, 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학교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가운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7.6%이며, 그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라서(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서(20.7%) 등의 순으로 나타남(복지부 실태조사, 2005)
- 교육바우처제도<sup>22</sup> 형식의 취학 다문화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특별지도 교육

<sup>21</sup>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 프로그램을 전국 유치원에 보급하고 서울, 경기, 부산 등 9개 지역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취학 전 다문화 가정 유아들에게 희망교육사로부터 1시간짜리 교육서비스를 주 3~4회 받도록 할 계획임.

<sup>22</sup> 바우처제도(Voucher, 이용권)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바우처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 의무를 위한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활

### 서비스 마련

- 자녀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원활한 학교적응을 위한 언어지도, 학습 지원 중심의 특별 교육프로그램 실시
- 농업농촌의 후계세대로서 농업에 대한 자긍심과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부모의 영농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
-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자녀 지원 제도를 농촌의 다문화 자녀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맞벌이 부모를 위한 방과 후 교육바우처 프로그램 벤치마킹

#### 맞벌이 부모를 위한 바우처 프로그램(강원도 춘천시 사례)

노인들이 맞벌이 부부 자녀 등 방과 후 혼자 집을 지켜야 하는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 강원도 춘천시의 바우처 서비스인 ‘나이트 케어(Night care)’ 프로그램

- 이용자는 월 4만원 부담, 제공자는 월 20만원 수입
- ‘소외된 아동에 대한 복지 혜택 제공’과 ‘노인 인력 창출’의 이중 효과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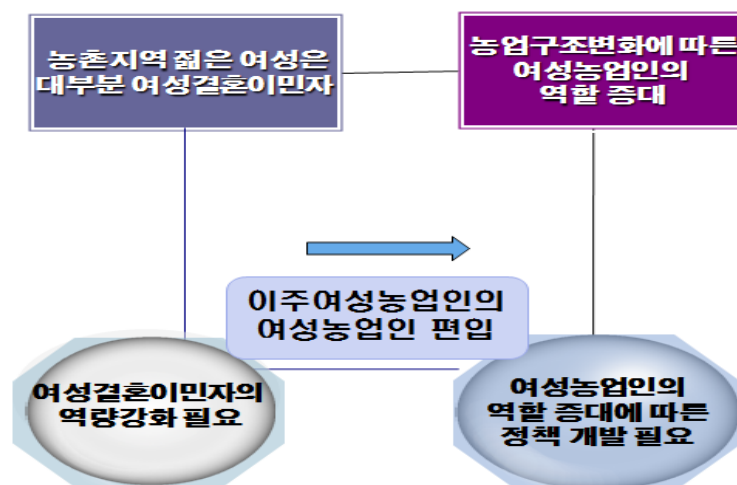
(조선일보, 2009. 1. 13)

- 농촌의 취약 다문화 자녀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교사 배정 등 교육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키로 하였음.
  - 각급 학교별로 ‘다문화 전담교사’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수준별 학습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지역, 발달단계, 학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키로 함.
  - 정규학급 이외에도 경기도 등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벤치마킹해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여성농업인신문, 2008. 12. 23).

동보조사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 장애인 동재활치료사업 등에서 바우처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3.2. 이주여성농업인 대상 인력육성정책 확대

- 현재 이주여성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평균 여성농업인보다 훨씬 젊고 학력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농가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농가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감안할 때, 젊은 이주여성농업인은 우리 농업·농촌의 주체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 정책의 대상을 이주여성농업인까지 포함하여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기초사회 적응 및 기초 영농교육을 마친 이주여성농업인을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농업에 대한 긍정적 비전 형성과 체계적인 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이주여성농업을 위한 한국생활 정착과 적응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정착기간을 거쳐 언어 소통과 활동이 가능한 30, 40대 중장년 이주여성농업인들을 인력육성정책 대상으로 편입하여 지원
  - 여성농업인 정책 및 인력육성정책 대상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이주여성농업인의 능력 평가 지표 개발



### 3.3. 단계별 이주여성농업인 육성 체계 마련

- 적응단계 및 성장단계별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인력화 추진 체계 마련
  - 후계농업인 육성주체, 육성단계별 정책, 후속 지원 대책, 예산투자확보 등의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 특히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30~40대에 해당되는 이주여성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계획과 체계가 필요

1. 진입단계(0~3년):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농업인 자긍심 고취
  - 농업의 이해 및 기초 영농교육
2. 정착단계(3~5년): 여성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 현장 실습 중심의 영농교육 병행,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도우미 및 후견인 제도 강화, 보육시설 확충 등의 영농환경조성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농외소득활동 지원
3. 성장단계(5~10년): 전문농업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문농업인으로 성장 지원, 농업경영교육 실시
  - 다문화 자원 및 인적 역량을 활용한 농관련사업 창업 지원

### 3.4. 신규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후견인 제도 체계 정립

- 신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에 대한 중견 여성결혼이민자 인적 자원 활용

- 중견 여성결혼이민자가 신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역할모델이자 멘토로 활동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리더로 육성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
- 단계적인 교육을 통해 엘리트 이주여성농업인을 육성하여 이주여성농업인의 성공사례 및 표준모델 제시
  - 일정교육을 이수한 이주여성농업인의 다문화 전문강사화
  - 이주여성농업인의 새로운 역할 모델 제시 및 홍보
- 후견인 여성농업인 인증제 도입
  - 실습강사 및 선도여성농업인 연수교사 등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전문강사로 요원화
  - 후견인의 강의 기법, 선진기술교육 등 교육품질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요원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 농업인력정책과 연계하여 실시
- 이주여성농업인의 영농정착 및 영농기술 지도를 돕기 위한 가칭 ‘이주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또는 별도의 기관에 상설기관으로 설치
  -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의 영농기술 지도, 자문 및 상담소 역할
  - 몇 개 지역에 시범운영하여 성과를 평가한 후, 전국으로 확대
  - 운영비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공동부담

## 참고 문헌

- 강혜정. 200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와 정책 과제』. 민관정보교류협의회, 국정원.
- 강혜정. 2007.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이선·정해숙·김영주. 200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 발전방안 연구』. 농림부.
- 김태현·이내성. 2008. 『푸른들, 숲, 바다, 그리고 삶: 농림어업총조사 종합분석 보고서』. 통계개발원.
- 농림수산식품부. 2008. 『'08. 이주여성농업인 영농교육 운영 평가 및 농촌다문화후계세대 육성방안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 박재규 외, 2005.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북발전연구원.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농촌사회』 16(2): 151~179.
- 이순형 외, 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방안』, 농림부.
- 최혜자, 2008. “이주여성농업인의 다문화 역량 활용 및 인력 육성 방안.” 『'2008 여성농업인이 열어가는 농식품의 미래 희망과 비전』 자료집.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2008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가이드북(<http://tmfc.familynet.or.kr>)
-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여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부록 1. 분석 모형

### 1.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 결정요인 분석 모형

본 설문조사 자료에서 전혀 농사일을 하지 않은 이주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업노동시간을 영(零)으로 응답하였다<sup>23</sup>. 영의 응답은 농사일을 하고 싶은 의향이 없거나 농사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의 응답은 경제적 행위에 부합한다(Deaton, 1997). 따라서 유의한 분석을 위해서는 전혀 농사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여 농업노동시간 결정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이런 경우, 일정한 영역에서만 관찰되는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도절단회귀 모형(censored regression model)인 토빗(Tobit)모형이 적합하다.

예를 들면 어떤  $i$ 번째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은 다음과 같은 토빗 모형에 의해 표현된다.

$$(1) \quad y_i^* = x_i \beta + u_i, \quad u_i | x_i \sim \text{normal}(0, \sigma_u^2)$$

$$y_i = \max(0, y_i^*)$$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경우  $y_i = y_i^*$ 이고, 농사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y_i = 0$ 과

<sup>23</sup> 전체 응답자 중 전혀 농사일을 하지 않는 응답자, 즉 농업노동시간을 '0'으로 응답한 이주여성농업인은 77명(19%)이다.



같이 관측된다. 이와 같은 토빗 모형에 있어서의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Amemiya, 1984; Wooldridge, 2002, p. 526).

$$(2) \ln L = \sum_0 \ln \left( 1 - \Phi \left( \frac{x_i \beta}{\sigma_u} \right) \right) + \sum_+ \left[ -\ln \sigma_u + \ln \phi \left( \frac{y_i - x_i \beta}{\sigma_u} \right) \right]$$

단,  $\Phi$ 와  $\phi$ 는 각각 표준정규분포함수와 표준정규밀도함수,  $\sum_0$ 은  $y_i$ 가 0인 항만의 합,  $\sum_+$ 은  $y_i$ 가 0보다 큰 항만의 합이다.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경우, 각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frac{\partial E(y_i | x_i)}{\partial x_k} = \beta_k \Phi \left( \frac{\beta' x_i}{\sigma} \right)$$

## 2.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의향 결정요인 분석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농관련사업과 비농업 취업 포함)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로짓(logit) 모형을 설정하였다.

$$(4) y_i^* = x_i \beta + u_i$$

여기서  $y_i^*$ 는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의향을 나타내는 관측 불가능한 잠재변수,  $x_i$ 는 농외소득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벡터를 나타낸다.

모형 (4)은 관측 가능한 터미 변수  $y_i$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5)  $y_i=1$ (창업할 계획이 있다) if  $y_i^* > 0$   
 $y_i=0$ (창업할 계획이 없다) if  $y_i^* \leq 0$

관찰 가능한  $y_i$ 와  $x_i$ 가 주어진 경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sigma^2$ 인 로지스틱(logistic) 분포를 가정하면, 로짓 모형은 다음의 분포를 따른다(Maddala, 1983).

- (6)  $\Pr(y_i=1|x_i) = F(x_i\beta)$ ,  $i=1, \dots, n$

여기서  $F(x_i\beta) = [1 + \exp(-z)]^{-1}$ 이다.

위 모형의 추정을 위한 log-likelihood 함수는 다음과 같다.

- (7)  $\ln L = \sum_{i=1}^n [y_i \ln F(x_i\beta) + (1-y_i) \ln(1-F(x_i\beta))]$

각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8)  $\frac{\partial E(y_i|x_i)}{\partial x_k} = F(\beta'x)[1-F(\beta'x)]\beta_k$

## 부록 2.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명: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에 대한 설문조사
2. 조사목적: 본 조사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후계세대, 즉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들의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이주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표본설계
  - (1) 조사대상: 현재 ‘농가’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중 ‘남편이 농업인’인 여성
  - (2) 표본크기: 본 조사 대상에 부합하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400명
  - (3) 모집단
    - 목표모집단: 현재 농가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민자 중 여성 전체
    - 조사모집단: 조사대상자 접촉 가능성과 조사편이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의 국내 외국인 거주 분포 자료 중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와 한국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 집단을 조사 모집단으로 규정

## (4) 모집단 분석

- 본 조사 모집단은 2007년 행정안전부의 국내 외국인 거주 분포가 기준이 됨. 단, 조사의 경제성과 시간적인 제한을 고려하여 농가 수가 극히 적은 7개 특별시·광역시 및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시도를 8개 권역으로 구분함. 8개 권역별로 정리한 국제결혼여성이민자 분포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총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취득자
		국제결혼이주자(여성)	혼인귀화자(여성)
합 계	72,717	52,124	20,593
경기도	34,079	23,489	10,590
강원도	3,463	2,521	942
충청북도	3,939	2,833	1,106
충청남도	5,625	4,087	1,538
전라북도	4,812	3,461	1,351
전라남도	5,818	4,418	1,400
경상북도	6,301	4,750	1,551
경상남도	7,574	5,743	1,831

- 농가수가 극히 적은 특별시·광역시를 1차 제외했지만, 8개 권역 내 남아있는 시 지역 중에서도 농가수가 극히 적은 순수도심지역이 존재함. 따라서 8개 도 지역 내 시 지역 중 도·농 복합시(시 지역 내 읍·면·동이 존재하는 지역)를 제외한 순수 시 지역을 본 조사대상 지역에서 2차 제외함. 이로써 본 조사대상 지역은 농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도·농 지역)·군 지역으로 정리될 수 있음.

구 분	총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취득자
		국제결혼이주자(여성)	혼인귀화자(여성)
합 계	48,274	35,347	12,927
경기도	12,115	8,471	3,644
강원도	3,097	2,233	864
충청북도	2,932	2,184	748
충청남도	5,625	4,087	1,538
전라북도	4,812	3,461	1,351
전라남도	5,818	4,418	1,400
경상북도	6,301	4,750	1,551
경상남도	7,574	5,743	1,831

#### (5) 표본추출 방법

- 본 조사는 8개 권역별로 표본조사지점 마을을 1차 추출(각 권역 내 시·군 지역을 비례할당법을 적용하여 1차 선정 후 해당 시·군 지역 내 읍·면·동 중 2개 마을씩 무작위 선정)하여 각 표본조사지점 마을별로 8명씩(국제결혼 이주자 6명, 혼인귀화자 2명) 조사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확정된 8개 권역별 할당은 다음과 같음.

구분	경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총 조사수	64	32	32	48	48	56	48	74	402

주: 경기 지역 자체적으로 남편이 농업인이고, 농가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수가 매우 작아 타 권역으로부터 잔여 할당을 충족함. 경기 지역의 잔여 할당을 충족한 지역은 '6. 전남', '8. 경남' 지역임.

#### 4. 조사방법 및 조사일시

(1) 조사방법: 해당 농가 방문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2) 조사일시: 2008년 11월 20일 ~ 2008년 12월 17일 (19일)